

---

# 2020년 경제정책방향

---

2019. 12. 19.

관계부처 합동

# 순 서

I . 2019년 경제정책 평가 .....	1
II . 2020년 경제여건 점검 .....	4
III . 2020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.....	7
1. 경제상황 돌파 .....	8
2. 혁신동력 강화 .....	35
3. 경제체질 개선 .....	55
4. 포용기반 확충 .....	74
5. 미래 선제대응 .....	95
IV . 특별 중점 관리과제 .....	103
1. 활력·포용 8대 핵심과제 .....	103
2. 5대 부문 구조혁신 .....	104
V . 2020년 경제 전망 .....	108
[별첨1] 2020년 주요 정책 캘린더 .....	109
[별첨2] 수혜자별 지원 내용 .....	118
[별첨3] 2020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.....	12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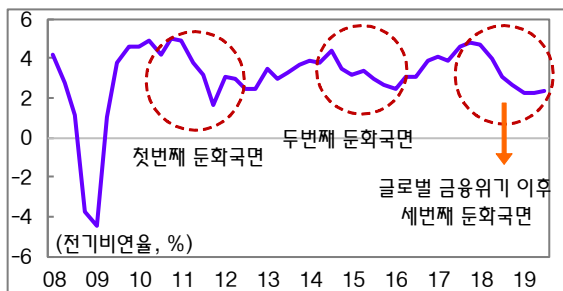
# I. 2019년 경제정책 평가

## 1 '19년 경제여건 평가

### □ 세계경제 동반 둔화 속에서 우리경제의 구조적 전환 가속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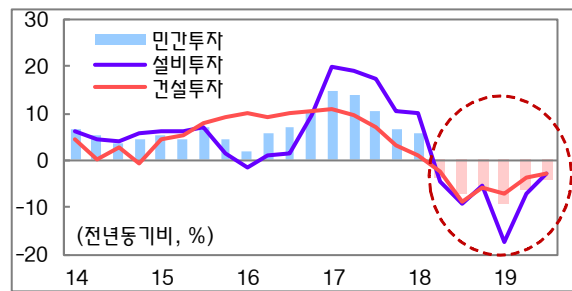
- ❶ '18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 둔화가 본격화되고 국내적으로는 주택건설·반도체 투자의 조정국면 지속

세계경제 성장률 추이



\* 출처 : Bloomberg

설비·건설투자 증가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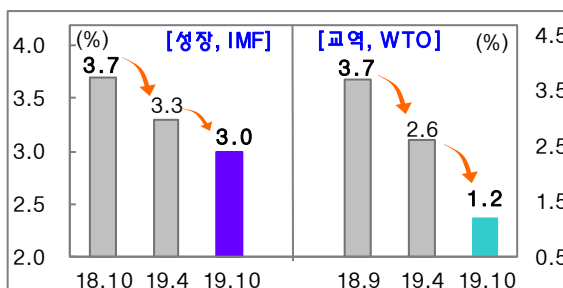
\* 출처 : 한국은행

- ❷ 이에 더하여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성장경로상의 하방리스크가 지속 확대

- (세계경제) 성장·교역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며 글로벌 동반 둔화(Synchronized Slowdown) 양상
- (미·중 무역갈등) 협상 기대·갈등을 반복하며 불확실성 지속
- (반도체 업황) 글로벌 반도체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, 당초 하반기 예상되었던 업황 회복도 내년 상반기로 지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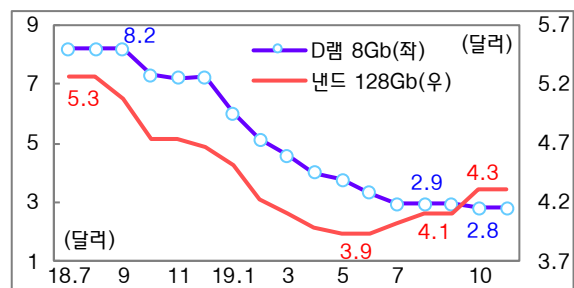
\* D램 초과공급 해소시기(Gartner) : ('19.3월 전망)'19.4분기 → (6월 전망)'20.2분기

'19년 세계경제 성장·교역전망 변화



\* 출처: IMF, WTO

반도체 가격 추이



\* 출처: DRAMeXchange, 고정가격 기준

- ❸ 생산가능인구 감소, 온라인 판매 증가, 기술진보 등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되며 경기·민생여건에 부담으로 작용

\* 생산가능인구 증감(만명, 장래인구추계) : ('16)15.2 ('17)△2.5 ('18)7.4 ('19)△5.6

\* 온라인 판매 규모(조원, 1~10월 기준) : ('16)53.2 ('17)76.3 ('18)92.4 ('19)109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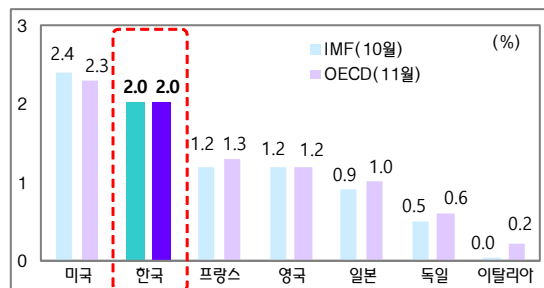
## ① '19년은 「혁신적 포용국가」 성과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

- ① 우리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「혁신적 포용국가」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총력 집중
- ② '19년은 그간의 정책노력 토대 위에 패러다임 전환 '정착과 성과 창출'에 주력
  - 특히, ①경제활력 제고에 최대 방점을 두면서, ②체질개선, ③포용강화, ④미래대비 등 4대 정책방향에 총력

## ②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력 대응 및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진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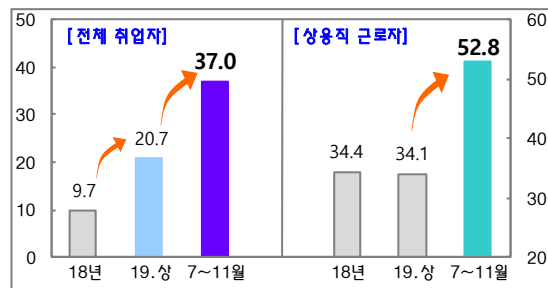
- ① (활력) 확장적 재정 등을 통해 경기 하방압력에 총력 대응, 금년들어 고용은 양적·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

➢ 30-50클럽 '19년 성장률 전망치 : 2위



\* 출처 : IMF, OECD

➢ 취업자수·상용직 증가세 확대(전년동기비, 만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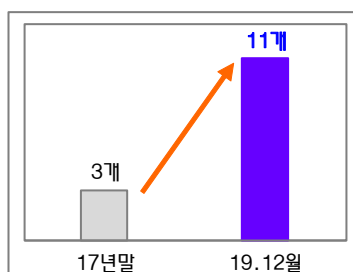
\* 출처 : 통계청

➢ 견고한 대외평가 유지 : ①국가경쟁력(WEF) 2년 연속 2단계 상승 [(17)17 → (18)15 → (19)13위]

②국가부도위험(CDS 프리미엄) '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, ③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지속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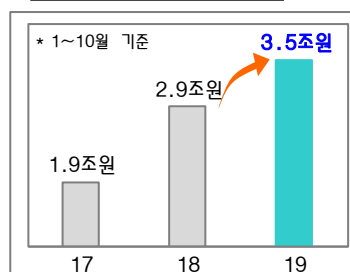
- ② (혁신) 제조업·서비스업 및 DNA+BIG3에 대한 큰 그림 마련, 혁신친화적 규제환경 구축, 제2벤처붐 조성 등 추진기반 확보

➢ 유니콘 기업수 급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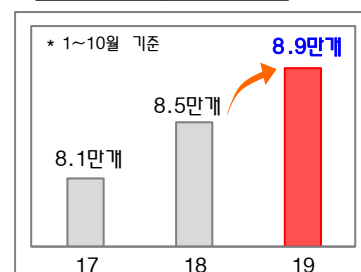
\* 출처 : 중소벤처기업부

➢ 벤처투자액 사상최대



\* 출처 : 중소벤처기업부

➢ 신설법인수 사상최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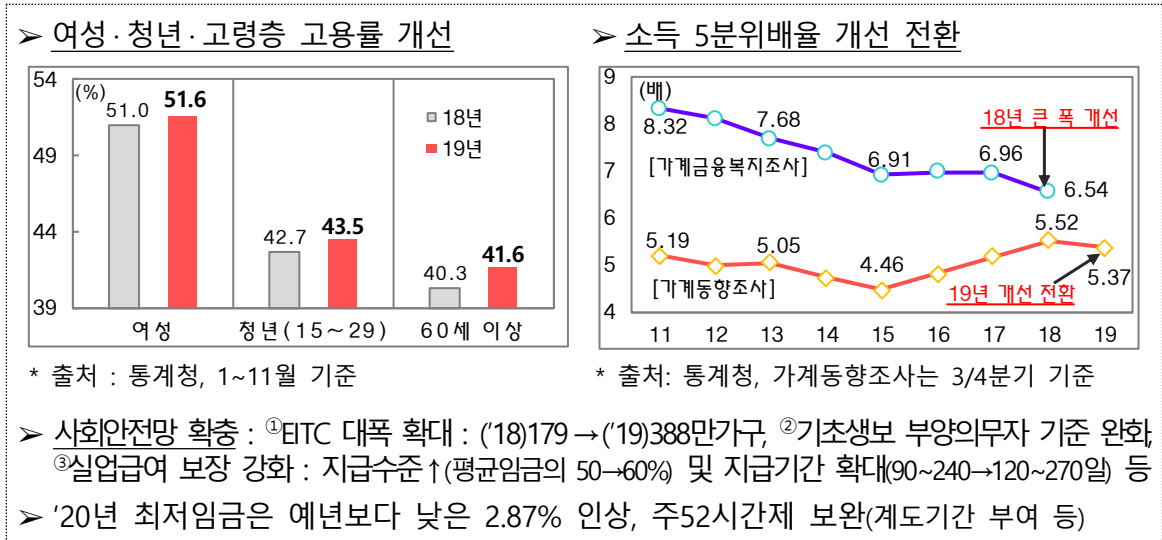
\* 출처 : 중소벤처기업부

➢ 「제조업 르네상스 전략」(19.6월), 「서비스산업 혁신전략」(19.6월), 「DNA+BIG3 전략투자방향」(19.8월)

➢ 유니콘 기업수 세계 6위(개수, '19.12월) : (美)210 (中)102 (英)22 (인도)18 (獨)12 (韓)11

➢ 규제샌드박스(180건의 사례창출, '19.11월) 및 규제입증책임제(연내 1,800개) 도입

③ (포용)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,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 
분배지표 개선 전환,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은 보완



④ (미래대비) 4차 산업혁명,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 대응하고,  
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사례 창출

- 인구구조 변화 대응 : 4대 핵심전략\*, 20개 정책과제 마련('19.4월~ 범정부 인구정책TF 가동)
- \* ①생산연령인구 확충, ②절대인구감소 충격완화, ③고령인구 증가 대응, ④복지지출 증가 관리
- 지역 노사민정간 타협에 기반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 (상생협약 6곳 체결)
- \* 광주(1.31), 밀양(6.24), 대구(6.26), 구미(7.25), 횡성(8.13), 군산(10.24) → <5,500명 고용창출 추정, 지자체>
-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: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('19.2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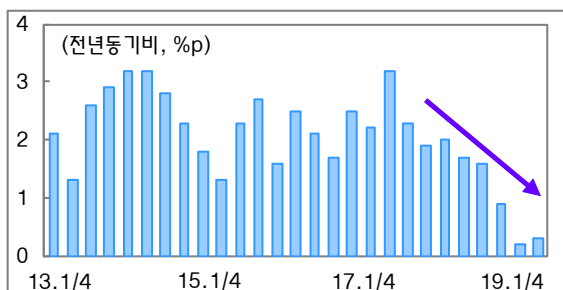
③ 다만, 민간활력 제고, 성장동력 확충 등은 보완해야 할 과제

①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 
경제활력 둔화, 특히 투자·수출 부진 등 민간활력 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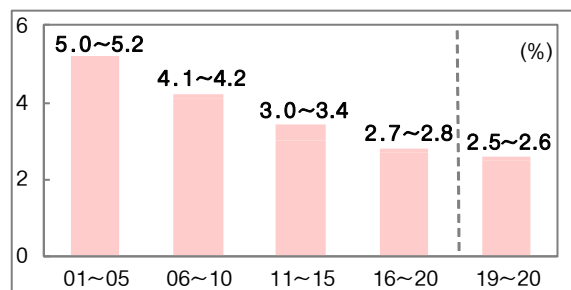
②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생산성이 하락하고  
잠재성장률이 지속 둔화

⇒ 민간활력 제고와 함께 그간 구축한 「혁신적 포용국가」의  
기반을 바탕으로 체감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 필요

민간의 성장기여도 추이



잠재성장률 추이



## Ⅱ. 2020년 경제여건 점검

### 1 경기 여건

#### ① 세계경제 회복, 적극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성장세 개선 전망

- ❶ 세계경제 성장·교역 회복, 반도체 업황 회복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수출·투자 중심으로 성장세 개선 예상

\* '19→'20년 IMF 세계경제 전망(% , '19.10월) : (성장) 3.0→3.4 (교역) 1.1→3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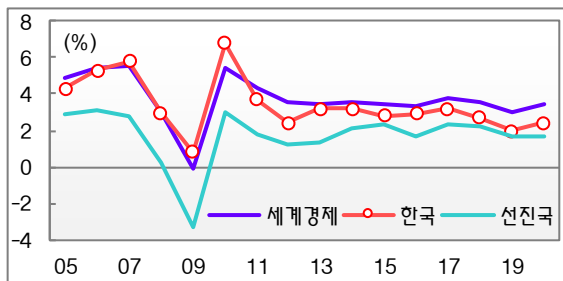
\*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증가율 전망(% , WSTS, '19.11월) : ('19)△12.8 → ('20)5.9

- ❷ 적극적 거시정책, 소비심리 개선 등도 긍정적 요인

\* 재정 총지출 규모(조원) : ('18) 428.8<+7.1%> ('19) 469.6<+9.5%> ('20) 512.3<+9.1%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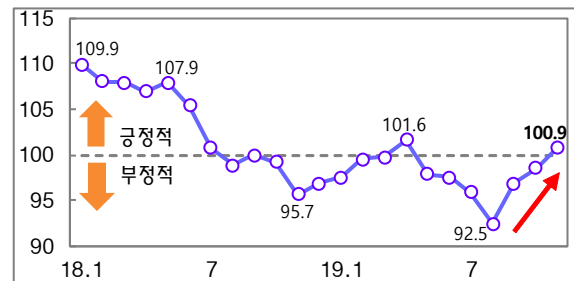
\* 기준금리 인하 : ①'19.7월(1.75→1.50%, 25bp ↓), ②'19.10월(1.50→1.25%, 25bp ↓)

세계경제·우리경제 성장률



\* 출처 : IMF, 한국은행

소비자심리지수(CSI) 추이



\* 출처 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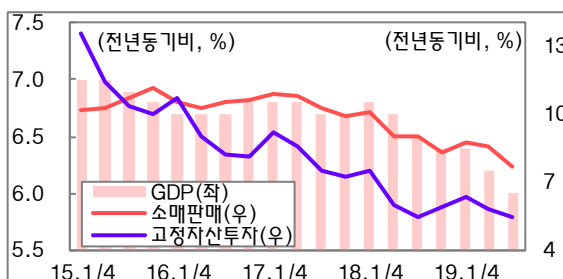
#### ② 글로벌 불확실성, 건설투자 조정 지속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 상존

- ❶ 최근 미·중 무역협상은 1단계 합의 타결, 다만 향후 합의 이행 과정 및 2차협상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

▪ 중국 경기둔화 심화 우려, 브렉시트 향방 등도 하방위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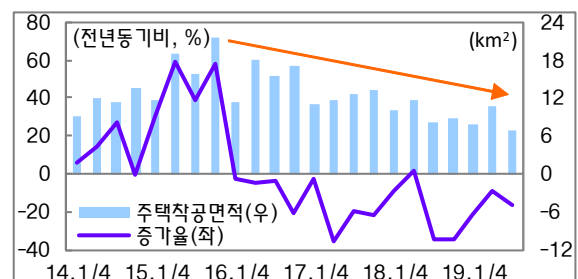
- ❷ 국내적으로는 주거용 건물건설의 조정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, 착공면적 등 선행지표 감안시 건설투자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

중국 GDP·소매판매·고정자산투자



\* 출처 : 중국 국가통계국(고정자산투자는 누계기준)

주거용 건물 착공면적



\* 출처 : 국토교통부

## ① [고용] 서비스업 중심 증가세 지속이 예상되나, 제약요인 상존

- ①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, 외국인 관광객 증가, R&D 투자 확대 등으로 서비스업 중심 고용 증가세 지속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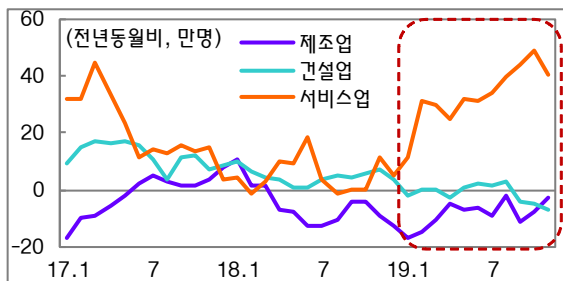
\* 일자리 예산('19→'20년, 조원) : 21.2 → 25.5 <+20.1%> [ (노인일자리) 61→74만명 ]

\* R&D 예산('19→'20년, 조원) : 20.5 → 24.2 <+18.0%>

- ② 다만,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확대되는 가운데, 건설경기 조정에 따른 건설업 고용 부진 가능성 등은 제약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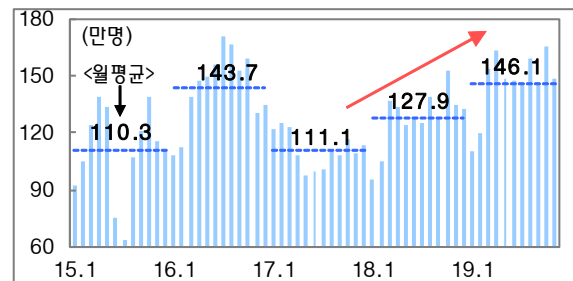
\* 생산가능인구 증감(만명, 장래인구추계) : ('19)△5.6 → ('20)△23.1

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



\* 출처 : 통계청

외국인 관광객수 추이



\* 출처 : 한국관광공사, 법무부('19년은 1~11월 평균)

## ② [분배] 정책효과는 긍정적 요인이거나, 구조적 어려움 지속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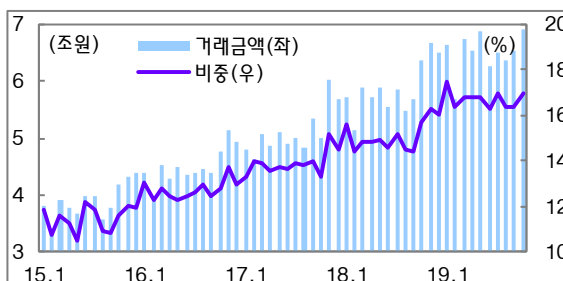
- ① 1분위 소득은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,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개선 흐름이 이어질 전망

\* 보건·복지·고용 예산('19→'20년, 조원) : 161.0 → 180.5 <+12.1%>

↳ ①기초연금 인상(+1.7조원), ②의료급여 확대(+0.6), ③생계급여 확대(+0.6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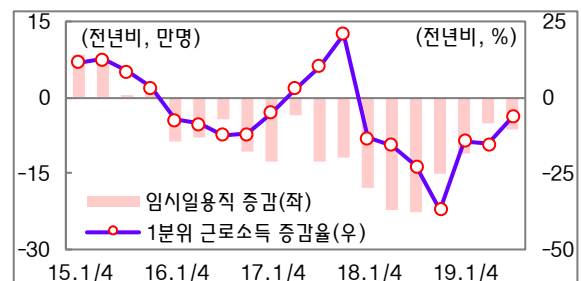
- ② 다만, 온라인 판매 증가, 자동화 등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·소득 부진, 고령화 심화 등이 분배 개선을 구조적으로 제약

온라인 거래규모 및 비중



\* 출처 : 통계청

임시일용직 일자리·1분위 근로소득



\* 출처 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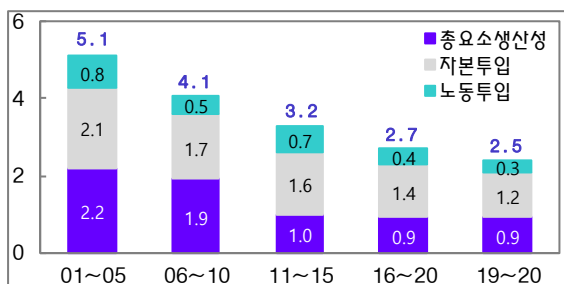
## ① 중요소생산성 둔화에 따른 성장동력 지속 둔화 우려

- ❶ 자동차·조선 등 주력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,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·서비스산업 발전 가속화 필요

\* 특히, 서비스산업의 경우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에 비해 발전 수준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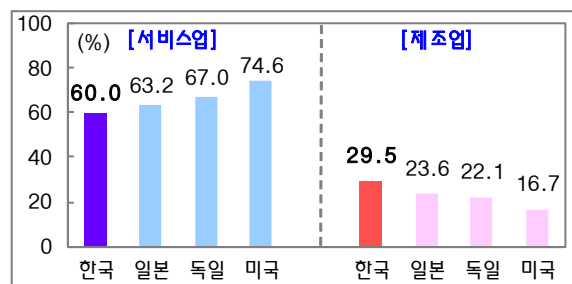
- ❷ 4차 산업혁명, 각 이코노미 등 빠른 기술·사회변화가 노동생산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혁신 병행 필요

잠재성장률 및 요인별 기여도



\* 출처 : 한국은행

3만불 진입시점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



\* 출처 : 한국은행, OECD, WB

## ② 인구·가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며 경제 전반의 변화 야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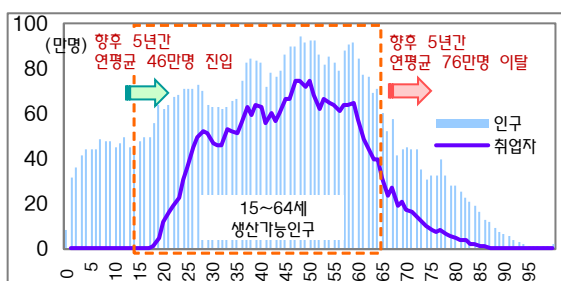
- ❶ 저출산·고령화 심화로 인해 향후 생산가능연령대 이탈인구가 진입인구를 크게 상회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가속화 불가피

- ❷ 만혼·비혼주의 확산, 고령 가구주 증가에 따른 1인가구 확대는 소비·산업 트렌드의 근본적 변화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

\* 1인가구 주 연령층 : ('10) 30대<20.4%> → ('18) 70대 이상<18.3%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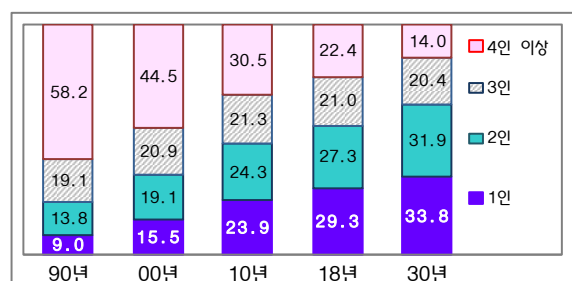
- ❸ 4차 산업혁명 진전 등에도 불구하고, 우리 경제·사회의 구조변화 대응과 사회적 대타협 기제 미흡

연령별(1세대위) 인구수 및 취업자수



\* 출처 : 통계청

가구원수별 비중(%) 추이



\* 출처 : 통계청(인구총조사, 장래가구추계)



### Ⅲ. 2020년 경제정책방향 과제

정책  
목표

####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

경제상황  
돌파

- ① 투자활성화에 총력 매진
- ② 국내소비·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
- ③ 국민 생활·안전 위한 건설투자 확대
- ④ 수출회복 지원 및 적극적 대외진출
- ⑤ 지역혁신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
- ⑥ 리스크 관리 등 경제안정 기반 구축

#### 4대 정책방향

1+4  
정책  
방향

##### ① 혁신동력 강화

※ 혁신성장 「4+1 전략」 프레임 통해 정책 구체화

- ① DNA 확산 및 Post-반도체 육성
- ② 주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조기 확보
- ③ 서비스산업 혁신 본격화
- ④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강화
- ⑤ 혁신금융 역할 강화

##### ② 경제체질 개선

※ 구조혁신에 방점

- ①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
- ②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제고
- ③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자원 확보
- ④ 분야별 구조혁신  
(노동·재정·공공기관·디지털 정부)

##### ③ 포용기반 확충

- ① 수요자·사회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
- ② 포용 사각지대 지속적 해소
- ③ 서민·자영업자 지원 강화
- ④ 공정경제 확산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

##### ④ 미래 선제대응

- ① 인구·가구 구조변화 대응 본격화
- ② 국민 삶의 질 제고 노력 강화
- ③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
- ④ 남북경협 준비

경제·사회 전반에 공정·상생·포용의 3대 가치 확산

#### 특별 중점 관리과제

##### 활력·포용 8대 핵심과제

- ① 투자 100조원 + 금융 세계 총력지원  
→ 유턴기업 90개 이상누적
- ② 관광·내수 소비 진작  
→ 병행개 2천명  
→ 국민 국내여행 횟수 3.8억회
- ③ 데이터 경제 본격화
- ④ 소재·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
- ⑤ 신사업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 마련
- ⑥ 청년·여성 40대 등의 일자리 지원
- ⑦ 노인빈곤 해소 및 1분위 지원 / 1인가구 증가 대응
- ⑧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

##### 5대 부문(4+1) 구조혁신

- ① 산업부문 혁신
- ② 노동부문 혁신
- ③ 공공부문 혁신
- ④ 인구구조 대응
- ⑤ 구조혁신 인프라 강화  
(생산성 제고+규제혁신+사회적 자본)

**(1) 투자활성화에 총력 매진****① 민간·민자·공공 3대 분야 투자 100조원 목표로 발굴·집행 추진****①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수준 발굴 추진**

- 투자 애로요인 해소, 제도개선 등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

**① 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(7조원 투자)**

- ▶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확대 시행('20.4월)으로 공장신설 허가 여부 불확실  
→ 공장신설을 고려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 의무 부여

**② 인천 복합쇼핑몰\* 건립(1.3조원 투자)**

\* 쇼핑몰, 테마파크, 호텔 건립

- ▶ 인근 하수처리장이 포화되어 복합쇼핑몰 건립 시 배출될 하수의 처리 곤란  
→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증설하여 복합쇼핑몰 적기 운영 지원

**③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(1.2조원 투자)**

- ▶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포화로 공장 완공 이후 배출될 폐수의 처리 곤란  
→ 공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조속히 증설

**④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(GDC\*) 건립(0.2조원 투자)**

\* **Global Distribution Center**: 국제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품을 국내 물류센터로 반입 후 개인 상품 단위로 분할·재포장하여 제3국으로 반출하는 중계 물류센터

- ▶ 식물품목 반입을 위해 필요한 수출국(美)의 검역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애로  
→ 우리나라 검역당국은 GDC에서 취급하는 제3국 중계수출용 식물품목에 대해 검역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관계법령 개정

**⑤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(0.2조원 투자)**

- ▶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산업단지내 이차전지용 소재인 인조흑연 제조공장은 건립 불가  
→ 부품·소재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감안하여 입주 가능업종 확대

- '20년중 15조원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여 착공 지원

**② 적격성 조사 등을 기통과한 사업\*(38개, 15조원 규모)의 신속 진행 및 '20년중 15조원 수준 민자사업 집행·신규발굴 추진**

\* ① ('20년 착공 예정사업) 서울 창동 K-pop 공연장(0.6조원), 평택시 동부고속화 도로(0.4조원),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(0.2조원) 등

② ('21년 이후 착공 예정사업) GTX-C(4.7조원), 위례~신사선 도시철도(1.8조원), 오산~용인 고속도로(1.1조원),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(1.1조원) 등

- '20년 집행규모는 '19년 대비 1조원 이상 확대된 5.2조원 집행  
('19년 4.2 → '20년 5.2조원)

-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추가 발굴 추진

▶ 포괄주의 도입으로 완충저류시설 등 필수 산업기반시설 민자투자(2조원) 확대 및 안전·신성장동력 관련 기반시설\* 발굴

\* 예: 스마트계측을 활용한 노후 상수도관 개량, 초·중등교 내진시설 등

▶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·현대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환경시설 개량 투자 확대(1.5조원)

▶ 민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신규사업(5조원)에 대해 적격성조사를 의뢰하고, 통과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 지원

▶ 항만법에 따른 신항인프라 구축, 항만재개발 등 민자사업도 신규발굴(0.9조원) 추진

-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최대한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방식 다양화

▶ 기존 BTO 및 BTL 방식에서 벗어나 BTO·BTL 혼합방식, 수요연동형 BTL 방식 도입

\* 예: 철도사업 → 민간투자비의 50%를 시설사용료(BTO) + 50%는 정부지급금(BTL)으로 회수, 예측수요 50~150%의 범위에서 수요에 따라 BTL 정부지급금을 차등 적용

- 정부 고시사업 확대 및 민간제안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

▶ 민자방식 추진이 불합리한 사업을 제외하고 예타신청이 이루어진 모든 사업에 대해 민자적격성 판단 원칙적 의무화

▶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 상향조정\* 및 제안비용에 대한 보상 현실화

\* 보통수준의 민간제안사업 우대기준(BTO 기준) : (현행) 1~2% → (개선) 2~4%

▶ 공공부문 출자,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안\*을 마련한 경우 출자자 최소 지분 규제 완화

\* (건설단계) 15→10% / (운영단계) 10→5%

- ③ '20년 공공기관 투자를 '19년계획 대비 5조원 증액한 60조원으로 확대 추진

- 공공주택, 철도·고속도로·항만 등 SOC 기반확충,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,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중심으로 추진

## ②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·세제 등 패키지 지원

### ①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 집중 지원

- 중소·중견기업의 신·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총 4.5조원\* 규모의 「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」 신설(1년간 한시운영)

\* ①산업은행 2조원 + ②기업은행 2조원 + ③수출입은행 0.5조원

- ▶ 운영기간: 1년간 한시운영
- ▶ 지원대상: 중소·중견기업 신·증설 투자
- ▶ 대출만기: 최대 15년
- ▶ 금리: 최저 1.5%의 특별우대금리 적용(단,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)  
\* 대출 시작일로부터 '24.12.31일까지 특별우대금리 적용 → 이후 통상금리 적용

- 「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(산·기은)」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의 시설·운영자금 등에 3조원 공급('19~'21년중 10조원 공급)
- 시중은행을 통해 주력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온렌딩 1조원을 차질없이 공급
- 제조업 스마트화·친환경화 등 지원을 위한 「환경·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」 1.5조원 집행('19~'21년중 5조원 공급)
-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(3년간 2.5조원)의 '21년도 지원계획중 0.2조원을 '20년으로 당겨 1조원 이상 지원

\* '19년 0.7조원 既집행 → '20년 1조원 이상 집행 추진(상반기중 0.6조원 이상)

### ② 민간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본격 가동

- 생산성향상시설 대상 확대(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추가) 및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

- ▶ 대상확대 : (현행) 공정개선·자동화설비, 첨단기술설비 등  
→ (개선) 데이터에 기반해 제조생산공정을 관리개선헌는 **지능형 공장시설** 추가
- ▶ 공제율(대/중견/중소): (현행) 1/3/7% → (개선) **2/5/10%**  
\* (대기업) '20.1.1~12.31, 1년간 (중견·중소기업) '20.1.1~'21.12.31, 2년간

- 투자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

- ▶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: '19년말 → '21년말

▪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 6개월 추가 연장('19년말 → '20.6월)

- ▶ (현행) 대기업: 혁신성장 투자자산(R&D시설, 신사업화 시설)에 대해 가속상각(50%) 허용  
+ 생산성향상시설, 에너지절약시설 한시 추가('19.7.3~12.31)  
중소·중견 : 사업용 자산에 대해 허용한도 50→ 75%로 한시 확대중('19.7.3~12.31)  
→ (개선) 대기업 및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한시 확대조치 6개월 추가 연장('19말 → '20.6월)

③ 개정된 유턴지원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유턴기업 실적을 역대 최고수준인 22개 이상(누적 90개 이상) 창출

\* 유턴기업 사례(개) : ('14)22 ('15)4 ('16)12 ('17)4 ('18)10 ('19)16

[ 유턴지원법 개정('19.11월) 주요내용 ]

- ▶ 대상업종 확대: (현행) 제조업 → (개선) 정보통신업, 지식서비스산업 추가  
▶ 지원대상 확대: (현행) 토지 매입비용 → (개선) 토지·공장의 매입·임대 비용  
▶ 국유·공유재산 특례: 국유·공유재산 임대시 수의 계약 허용, 50년까지 가능

- 산단(수도권 포함)내 중소·중견기업 유턴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 등 인센티브 방안을 포함하는 '유턴기업 유치 촉진방안' 마련('20.6월)
- 유턴가능성이 높은 유망 시장·업종을 대상으로 DB를 구축하고, 유망 유턴기업에 대한 집중 홍보·유치 추진

④ 국내·외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추진

-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 등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 마련('20.上)

< 개편 원칙 >

- ① 선택과 집중(예: 첨단기술·제품)을 통해 정책지원 효과 극대화  
② 투자부담으로 작용하는 법·제도 개선 및 투자애로 맞춤 지원  
③ 일몰예정 투자 인센티브 재검토 등

- 경자구역 혁신전략 수립('20.上) 및 규제특례 도입

- ▶ 경제자유구역을 외자 유치 및 혁신생태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'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(안)' 마련('20.上)

<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(안) 예시 >

- ① 전략1: (기존)외국인투자 유치 중심 → (개선)외국인투자 + 연관 산업생태계 조성  
② 전략2: 국내외 교육·연구·의료기관의 집적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 
③ 전략3: (기존)입지개발, 기업유치 중심 → (개선)규제혁신 및 지역협업 기능 강화

- ▶ 경제자유구역 혁신동력 제고를 위한 규제특례 확대 등 지원

- (규제) 개발절차 간소화, 경영활동 규제완화 등 공통규제 개선, 지자체-경자청 협의체를 통해 경자구역 내 규제자유특구 지정 검토  
· (입지) 조성원가 이하 분양 및 수의계약 허용범위 확대 (외투기업 → 첨단기술 및 제품, 소재부품장비산업)

- 산단 또는 인근 도시에 「혁신성장촉진지구」 지정 및 입지·업종 관련 규제특례 제공
  - \* 개발이익 환수 면제 가능, 입주 업종을 지구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규정 가능 등
- 대규모 부지가 불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단내 용지 일부를 소규모 부지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  - \*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가 대규모 부지 위주로 공급되어 소규모 용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진입장벽
- 지역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면제제도 신설, 대상기준 상향조정\* 등 「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」 개선(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)
  - \* 타당성 검토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광역 200억원(기초 100억원)에서 500억원(기초 300억원)으로 상향 조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
-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정비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투자·고용 친화적으로 개편(‘20년 세법개정안)

## ⑤ 금융·세제 지원 등을 통해 항공기 투자 활성화

- 민관공동으로 항공기 공적보증 등 신설
- 항공기 관련 수입 부분품(항공기 엔진, 보조동력장치, 각종 항행용 기기 등)에 대해 부가세 면제

▶ (현행)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, 부가세 과세 → (개선) 관세 감면 + 부가세 면제

## [2] 국내소비·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

### ① 대규모 쇼핑행사 활성화 등을 통해 국내 소비 적극 진작

#### ① 민간 주도 대표 쇼핑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 지원

-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하여(예: 11월 1주 토요일) 당일에 구입한 일정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세(10%) 환급 검토\*
  - \*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, 실효성 등을 판단
- 민간 주도 추진위를 중심으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, 행사 기간을 특정시기로 고정\*하여 행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내실화

▶ (현행) 개최시기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 결정에 따라 매년 변경  
→ (개선) 추진위 검토를 거쳐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이 특정시기로 행사기간 고정

- 브랜드-K 전시회, 소상공인 대회 등 각종 행사를 연계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

## ②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인하

- 10년 이상 노후차 → 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
(경유차로의 교체는 제외, '20.1.1~'20.6.30 6개월 한시, 100만원 한도)

▶ (현행)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→ 신차(휘발유, 경유, LPG) 승용차로 교체시 개소세 70% 인하(~'19.12말)  
→ (개선) 10년 이상 노후차(휘발유, 경유차, LPG) → 신차(휘발유, LPG) 승용차로 교체시 개소세 70% 인하

-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(최대 400만원) 일몰연장('19말→'22말)

## ③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

-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구매금액의 일부 환급 지원  
※ 세부 지원사항(환급대상, 품목, 환급비율, 재원 등)은 1/4분기 중 마련·발표(산업부)
- 휴면재산·카드포인트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
▶ 全 금융권 「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(11.11~12.20)」 실적 분석을 통해 '20년에도 휴면재산 찾기 캠페인 실시

▶ "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·지급 서비스"를 확대하여 생활관리사 등이 고령층·장애인을 직접 방문·서류 작성 등 지원

\* 독거노인 대상으로 생활관리사가 신청서 작성·제출 등 지원중('19.10~)  
→ 독거노인 + 취약계층 노인(거동불편 노인 등) 및 장애인 등으로 확대

▶ 생활관리사 등을 통한 휴면재산 조회·지급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령층·장애인이 휴면재산으로 온누리 상품권 구매시 7% 할인

▶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보유한 여러 카드사의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
\* (현행)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각 카드사의 포인트 조회만 가능  
→ (개선) 조회된 카드포인트를 일괄하여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기능 추가

## ④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공항(김포 등)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 허용

## ⑤ SNS상 1인마켓인 세포마켓 활성화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를 검토하고, 캠페인 확대 등 홍보강화

\* 예: (현행) 거래횟수/규모: 20회/1,200만원 미만 (최근 6개월 기준)  
→ (개선) 거래횟수/규모: 40회/4,800만원 미만 (직전년도 기준)

※ 1인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과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은 필요



## ②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시대 유치 노력 강화

### ① 3K(K-콘텐츠, K-뷰티, K-푸드) 연계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

#### 【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(In-bound) 】

- 3K 등을 연계한 대규모 행사인 K-culture 페스티벌을 '20년부터 연 2회(상·하반기) 개최
  - \* 한류(K-POP) 행사 공고 주기를 앞당겨 한류행사와 연계한 여행상품 구성을 활성화하고, 외국인 방청권 부여 기회 확대 검토
- 국제관광도시(1개소)를 선정('20.1월)하여 ICT 활용 관광 안내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·브랜딩까지 통합 지원
- 한옥숙박과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패키지화('20년, 30개 프로그램)하여 한옥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 제고
- 우수한 국내 의료서비스를 토대로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

#### ▶ 웰니스관광 클러스터·명소를 확대하고, 온라인 의료관광 플랫폼 운영 및 환자·동반자 관광프로그램 추진

- \* 웰니스 관광명소 확대선정 : ('19년) 41개소 → ('20년) 50개소  
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추가 지정 : ('19년) 2개소(경남, 충북) → ('20년) 3개소  
온라인 의료관광 플랫폼 : 의료관광 상품, 의료기관·숙박업체 정보 등 제공  
환자·동반자 관광프로그램 : ('19년) 수도권 8개, 비수도권 3개 코스→('20년) 비수도권 8개 추가

#### ▶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ICT기반 사전상담·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협의 추진

- \* 해당국가 법령 인프라, 수요 등 여건 기초 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('20.上) → 해당국가와 협의 실시('20.下)

#### ▶ 서비스 질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\*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운영자금 융자 지원

- \* 외국인환자우수유치의료기관평가(KAHF) 획득기관 한정

#### ▶ 우수한 의료서비스 질과 안전체계를 갖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유효기간 확대 검토

- \* 유치의료기관 지정(KAHF) 유효기간 : (현행) 2년 → (개선) 4년

#### ▪ 지방공항과 연계한 외국인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

#### ▶ 5개 지방공항 입국 외래관광객 환대기간 지정하고, 항공사-여행사-지자체-지역관광업계가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모션 진행

- \* 김해공항, 대구공항, 청주공항, 무안공항, 양양공항 중 2개 공항 선정·지원

#### ▶ 지방공항 배후 지역의 예술·문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공항내에서 공연 활동 및 체험행사 개최 추진



- **한식 관광객 확대 유치를 위해 월드 한식 페스티벌\***을 개최하고  
(‘20.10월), **한식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**
- \* 외국인 한식요리 콘테스트, 한식 문화공연, 한식 팝업 레스토랑 운영,  
궁중·반가·제례음식 전시, 음식문화 교류전 등 추진

## 【 방한 관광객의 재방문 적극 유도 】

- **지역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 제고를 위해 단말기 보급 등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시스템 확대 추진**
- \* (현행) ‘19년 대구 시범사업 중→(개선) ‘20년 지역관광거점도시 중심 확대 추진(4개소 내외)
- **지방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후 지방공항을 통해 재방한할 경우 사용가능한 항공·숙박 바우처\*** 제공
- \* 지방공항(김해, 대구, 무안, 양양, 청주)과 연계된 숙박권, 항공권 구매 가능
- **K-POP 등 한류 연계된 공개방송, 시상식 방청권을 활용한 방한 관광 상품\*** 지원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(‘19년 3,500→‘20년 10,000명 모객추진)
- \* 관광지방문, K-pop댄스 체험, 전통시장 쇼핑 등 연계 구성

## ② 방한 편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

- **신남방국가 관광객에 대한 비자 편의 확대**

- ▶ 제주 방문 동남아 3개국(필리핀베트남인나) 단체관광객에 **지방공항 환승 무비자 입국 허용**
- \* (현행)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해 허용 → (개선) 동남아 3개국 추가 허용
- ▶ **동남아 관광비자 발급기간 단축 및 복수비자 발급 확대**(공무원, 전문직종사자 등→ 개인자산 20만불 이상 보유자, 대기업 임직원 등 추가)
- ▶ 한류 열풍인 신남방국가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관광·어학연수 기회 제공을 위한 **한-아세안 관광취업협정 체결 추진**
- \*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청년층의 해외취업 및 연수기회 등 확대도 추진
- ▶ 현지매체 홍보, 관광안내소 운영(5개소), 관광지 및 쇼핑 할인판촉, 단체관광객 대상 공항 환영행사 등 **동남아 환대사업 실시 병행**

- **서류 간소화 등을 통한 중국 관광객 방한 편의 제공**

- ▶ 중국 주요지역 대학생에 대해 방학기간중(1~3, 6~8월) **비자수수료 한시 면제**
- ▶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(연간소비 약 2,600만원)에 **재정능력 입증 간소화**

- **환승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방공항 환승객에 72시간 무비자 체류 허용**

- \* (현행) 인천공항에 한해 허용 → (개선) 환승관광 프로그램 개발·운영 지방공항에 추가 허용

### ③ 국민이 연 3.8억회 이상(19년 3.3억회(잠정)) 국내여행을 찾을 수 있는 여건 조성

#### ① 여가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여가 소비 활성화

-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·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(30%, 도서·공연비 등 추가한도(100만원)에 포함) 추진

\*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, 실효성 등을 판단

- 국립공원 여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국민여가 활동 지원

▶ 국립공원내 가족단위의 체류형 여가시설(예: 보급형 캐빈) 및 안전 인프라 확충(예: 앰블런스 드론)

▶ 휴식있는 삶,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휴양림 등 투자 확대('19년 0.5→'20년 0.7조원)

- 생활 밀착형 국민 문화생활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

▶ 스포츠클럽 확대, 스포츠클럽 디비전(승강제) 리그 신설 등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

\* 스포츠클럽 육성(98→171개소, 155→224억원), 스포츠클럽 디비전(1→4종목, 38→108억원)

▶ 공공도서관(+190개소), 국민체육시설(+160개소) 등을 추가 확충하여 지역간 문화 시설 격차 완화

-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상향(8→9만원, 161만명), 스포츠 강좌 이용권(월8만원, 7→8개월 지원) 지원 확대

- 제주도 및 고용위기지역·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75% 한시(~'21.12.31) 감면

#### ② 근로자, 청소년, 청년, 노년층에 등에 대한 맞춤형 관광 지원 추진

▶ 근로자: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비용 적립시 정부가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**근로자 휴가 지원제** 실시(8만명)

\* 근로자 1인당 총40만원(근로자20, 기업10, 정부 10) 적립하여 국내여행비 지원

▶ 청소년: **취약계층 청소년(특수학교,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 등) 체험여행** 5,000명 지원, 정규과정에 없는 여행준비·정보탐색 등 여행교육 프로그램 지원(총 8회)

▶ 청년: 대학생 대상 관광역량 교육, 실전여행, 과제수행 지원 등을 통해 주요 관광지 수용태세 점검 및 관광 콘텐츠 개선 추진(150명)

▶ 노년층: 고령자가 주도적으로 국내여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령자 특성에 맞는 여행교육 프로그램 운영·지원(360명)

### ③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확충

- 지역관광거점도시(4개소)를 선정('20.1월)하고 도시별 전략사업 (예: 스마트 관광) 계획 수립 및 환경정비 추진

- 지역특화 숙박시설을 조성하고, 관광숙박업 관련 규제개선

- ▶ 중소도시의 유희시설을 특색 있는 숙박시설로 조성하여 지역 관광자원 확충
- ▶ 관광숙박업 분류체계 및 업종별 등록 기준(객실 수, 부대시설 등) 정비

-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'문화도시'를 선정하고, 공간·콘텐츠·인력을 패키지 지원

- ▶ (1차 문화도시) 10개 이내 선정('19.12) 및 지원(도시당 10억원 내외, '20년~)
- ▶ (2차 문화도시) 5~10개 선정('20년말) 및 지원(도시당 10억원 내외, '21년~)

- 섬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「섬관광 활성화 종합대책」을 수립('20.3월)하고 해양레저관광 거점 및 해양치유 센터 조성 등 추진

- \* 해양레저관광 거점: 기 선정된 3개소 착공(군산, 고성, 제주), 신규 2개소 설계  
해양치유센터: 기 선정된 1개소 착공(완도), 신규 3개소 설계

### ④ 관광업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관광서비스 제공 유도

- 창업, 성장 등 전 단계에 걸쳐 관광기업에 대한 자금, 마케팅,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및 규제 합리화 추진

- ▶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: ('19년) 130억원 → ('20년) 300억원
- ▶ 관광벤처 사업화 지원: ('19년) 80개, 20백만원 → ('20년) 150개, 40백만원
- ▶ 투자연계 액셀러레이팅, 혁신바우처, 선도기업 육성, 관광플러스 팁스(TIPS) 신규 도입
- ▶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(20.1.1) 및 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변경 등 경미한 조성계획 범위 확대(10 → 1개월)

- 관광기업의 긴급한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융자 확대

- ▶ 관광사업자 운영자금 융자 : ('19년) 1,578억원 → ('20년) 2,240억원
- ▶ 관광사업자 운영자금 특별융자(5년 상환, 1% 우대금리) : ('19년) 150억원 → ('20년) 350억원
- ▶ 중소 관광사업자 신용보증 지원 : ('19년) 30억원 → ('20년) 50억원

- 관광벤처 육성, 일자리센터 운영 등을 전담할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조성 확대('19년 1개소 → '20년 4개소)

### [3] 국민 생활·안전 위한 건설투자 확대

#### ① SOC 23.2조원 투자 등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 강화

- ❶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'20년 6.0조원(국비(2.2조원)+지방비·민자 등)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

▪ 광역 급행철도망 및 주요 간선·광역철도망 조기 구축

- ▶ GTX-A('23년 말) 및 신안산선('24년 下)은 당초 계획대로 준공하도록 공정을 관리하고, 공기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·추진
- ▶ GTX-C('18.12 예타통과)는 '21년 말(당초 '22년), GTX-B('19.8 예타통과)는 '22년 하반기(당초 '23년)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일정 단축 적극 협의
- ▶ 진접선·하남선 등 진행 중인 간선·광역철도망은 적기 개통되도록 철저히 관리

▪ 순환·지하 도로망 구축 사업도 신속히 추진

- ▶ 제2순환망 등 간선도로 미착공 구간(안산~인천)을 신속 착공하고, 예타 중인 사업(서울~양평, 계양~강화)은 사업기간 단축('31.下 → '30.上) 추진
- ▶ 서울외곽선(판교~퇴계원) 복층화, 서울 동서횡단축 등 주요 간선도로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방안 검토·추진
- \* (국토부) 지하고속도로 기본조사 및 사업모델 연구('19.8~'20.12)  
(서울시) 한강변 도시고속도로 기능 재정립 방안 수립 연구('19.5~'20.말)

▪ 2·3기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

- ▶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\*을 조속 추진하고, 사업 지연 등으로 교통 불편이 심각한 지역은 특별대책지구\*\*로 지정하여 대책 수립

\* (검단) 인천1호선 연장 '20.上 착공, (위례) 위례신사선 '22 착공 등  
\*\* 광역버스 등 대체수단 운행, 환승정류장 설치 등 포함

- ▶ 3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·교통시설 개통 시기 불일치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개선대책 수립 및 확정기간 단축\*

\* (현행) 지구지정 이후 대책 확정까지 9.4개월 소요 → (개선) 절반이상 단축

#### ❷ 국민수요가 높은 생활SOC 투자를 10.5조원으로 확대('19년 8.0→'20년 10.5조원)

- 공사비용 부담이 큰 복합화 사업\*의 경우, 캠프 등을 통한 공공 위탁개발을 접목하여 재정여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사업 추진 지원

\* 복수(2개 이상)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(리모델링 포함) 하는 사업 → 172개 지자체, 289건 선정 기 완료

- ▶ (현행) 국비+지방비 매칭 → (개선) 국비+지방비+수탁기관 자금 매칭 가능

\*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재원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, 지자체가 분할 상환  
※ '20년 3천억원 이상 추진(구체적 사업내용은 '20.3월內 마련)

-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내 유휴 국유지에 생활 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원
  - \* 국유지 상에 생활SOC(영구시설물) 축조 허용, 지자체의 생활SOC 운영 부담 경감(국유지 사용요율 50% 감면, 국유지 장기사용 허용) 등
-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·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\*을 운영하고 법적기반\*\* 마련
  - \* 생활SOC사업과 연계한 '20년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11교 추진
  - \*\*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 추진하여 설치 과정, 관리 책임, 학교 교육활동 우선사용 원칙, 학생 안전 확보 등 규정
- 어촌·연안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어촌뉴딜 신규 120개소\* 조기 착수
  - \* ('19~)70개소(계속), ('20년)신규 120개소 선정, 총 4,344억원

### ③ '20년은 국가 기반시설 안전관리 원년으로 노후 SOC 개선에 총 5.5조원 투자 추진('19년 대비 +1.6조원 확대)

- \* 노후 철도 개량 1.6조(+0.5조원),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등 상수도 개량 0.9조원(+0.6조원), 노후 하수관로 정비 0.3조(+0.2조원) 등 15종 시설
- 국가 기반시설 기본계획·관리계획을 마련하고, 인프라 총조사\*를 통해 국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\*\* 구축('20~'23년)
  - \* 도로·철도·상·하수도 등 15종 기반시설 제원, 노후도, 점검·보수 이력, 예산 투입 총조사
  - \*\* 기반시설 유지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투자우선순위 등 재정지원 의사결정에 활용
- 지자체의 노후 수도시설 조기 정비를 위해 차입선을 다변화하고 (예: 유동화 구조) 참여 지자체에 인센티브\* 제공하여 추가 투자 유도
  - \* 참여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시범 지원, 국고보조율 인센티브 평가시 반영
  - \* 전국 161개 지방 상수관로 노후도, 수질 안정성을 진단하는 정밀조사 병행(~'22년)
- 지하공간 정보 조기구축으로 상·하수도, 가스관, 열수송관 등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지하공간 안전 확보
  - \*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(~'22), 지하공간통합지도(~'23) 완료, 민간시설 정보 추가
- 부산·거제·인천 등 노후·유휴 항만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재개발을 조속히 활성화하고, 시민참여형 재개발 모델도 정착
  - \* 부산북항 1단계 마라나(20.6 착공), 거제 고현항 2단계 준공(20.10), 인천 영종도 투기장(19.3~), 계속 등

## ②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뒷받침

- ①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\*, 주거복지로드맵 105.2만호('18~'22) 등  
既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관리

\* 연도별 입주자모집계획(만호) : (~'22) 7.0 ('23) 6.7 ('24) 5.8 ('25) 6.1 ('26~) 4.4

- (수도권 30만호) 서울 중·소규모 4만호는 순차적 사업승인 및 착공, 26만호는 지구계획 수립·지구지정 추진을 통해 조기 주택공급 노력

▶ 서울 중·소규모 4만호: '20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및 착공입주자모집 추진  
(패스트트랙(위탁개발-사업승인 병행)으로 기간단축(군 관사 등))

▶ 26만호: 1·2차 지구(15만호)는 '20년내 지구계획 수립 추진('20.下)  
(지구계획 수립 후 '21년 말부터 주택공급 착수)

3차 지구(11만호)는 지구지정 완료 조기 추진('20.上)

※ 주택공급절차: 사업대상지 검토 → 후보지 확보 → 지구지정 → 지구계획 수립·승인 →  
사업승인 → 착공 → 입주자모집 → 준공·입주

- (로드맵) 민간공동사업\*, 시공책임형CM\*\*을 통해 '20년 착공예정  
(8.2만호)중 1만호(약2조원)는 당초 계획보다 3~7개월 앞당겨 추진

\* LH가 토지공급, 민간은 주택건설·단지조성을 분담하여 토지 확보기간 등 단축

\*\* 시공사를 설계단계(기본설계 후)에 조기 선정·참여시켜 사업기간 단축

- '민간매입약정제\*' 확대를 통해 입지·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  
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매입-입주 시차 단축

\* 건설중인 민간주택 매입약정을 체결(LH)하고, 건설 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  
('19) 원룸형 주택대상 시범사업 시행 → ('20) 투룸 이상 주택 등 적용 확대

- ② 노후 공공청사, 국유지 등을 활용하여 주택공급 추가 확대

-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11곳(2.2만호 공급, '20~) 중 '20년중  
1곳을 착공 추진(1,615호, 7,200억원)하고, 사업지 추가 발굴\*(5+a개)

\* 도심지 내 대규모 미개발 국유지를 대상으로 경제효과, 추진 용이성 등 검토,  
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지 발굴('20.上)

-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해 직주근접형 청년·신혼부부용 공공주택 500호 이상 추가 공급 추진('19년 500호)
- 특히, 역세권 등의 국유지(노후 공공청사, 나대지 등) 복합개발을 통해 1인가구(청년·고령층 등) 등에 대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
  - \* 사업 후보지 추가 선정 및 공급목표 등 추진 계획 수립('20.6월)

### ③ 입지규제 특례, 참여주체 다양화 등 통해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

#### ① 노후 주거지 및 쇠퇴한 구도심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도시재생에 총 1.7조원 투자

- ▶ (융·출자) 민간 상업·주거 복합시설, 소규모 주택정비 등 목적으로 0.9조원
- ▶ (시설건설) 도심 생활편의시설 조성 등에 0.8조원

#### ② 신규제도 활용 및 유휴 국유지 발굴 등을 통해, 도시재생 뉴딜에 향후 3년간 총 5조원 이상 투자 증대 추진

- 혁신지구 등 신재생수단(도시재생법 개정안 '19.11월 시행)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신속 추진

- ▶ 산업·상업·주거 등이 집적된 도시재생 지역거점 조성을 위해 입지규제 특례\*가 적용되는 혁신지구 지정·개발

\* (현행) 건축물 단위 계획으로 투자집적 효과가 낮고 개별법상 인허가 필요 → (개선) 지구단위로 집적화 + 건축심의·교통영향평가 등 통합심의

- ▶ 공기업이 직접 계획·개발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사업을 유도하여 사업활성화 및 추진 속도 제고

- ▶ 쇠퇴도가 높은 지역은 소규모 사업(인정사업) 즉시 지원

-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, 주택 도시기금 지원, 건축규제 완화(혁신지구) 등 패키지 지원

\* 토지개발 법률 유형을 규정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도시재생법 추가

- 도시재생사업의 투자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타부처 연계사업 선정요건을 완화\*하고, 연계실적 점검 강화

\* 뉴딜사업 선정 후 발굴사업 및 사업지 인근 연계사업 추가 인정 등



**③ 빈집·빈점포 등 근린 유희공간의 효과적 정비를 통해 생활 SOC 공급, 공공임대 상가 등으로 활용**

- 소규모 빈집 활용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융자금리 인하(1.5→1.2%, △0.3%p)
-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·상가 등을 매입·운영하는 공간지원리츠도 본격 추진
-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국유 일반재산 위에 위치한 빈집·폐건물 220건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시범 정비사업 추진

---

**4] 업계 부담 완화 등을 통한 건설업 활성화 추진**

---

**①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업종을 개편하고 자본금기준·보증수수료 완화 등을 통해 업계 부담 완화**

- 전문·종합공사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해 유사전문업종 통합(현행 전문업종 29개 → 약 10개 내외) 등 업종개편('20.6월)
- 업종별 자본금 기준을 현재의 약 70%수준으로 완화
  - \* 부실업체 남설, 책임성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가능금액을 상향조정('19년 자본금의 25~60% → 50~80%)하여 현금예치의무 강화
- 임금직불제 의무화에 따른 임금체불 감소를 고려하여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금에 대한 보증수수료 인하 추진
  - \* 건설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수수료 특례('19.5월, 계약금·선금금·하자 보증수수료 10% 인하) 추가확대 방안 검토

**② 공정한 건설 발주 및 공사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추진**

- 무리한 공기 단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산정기준을 법제화('20.上)
-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'유지보수 공사 표준품셈'도 신설('20.上)



## (4) 수출회복 지원 및 적극적 대외진출

### ①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 유지를 위한 수출충력 지원체계 강화

#### ① 13대 주력 수출품목\* 중심 수출현장 애로 해소방안 마련, 3대 수출시장\*\*에 대한 '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'(19.9월) 이행 가속화 및 보완대책 마련(20.下)

\* 반도체, 일반기계, 석유화학, 자동차, 철강 등 → 전체 수출액의 78% 차지('18년)

\*\* 주력시장(美·中·日·EU), 전략시장(신남방·신북방), 신흥시장(중남미·중동·아프리카)

#### ②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등 수출판로 적극 개척

- K-pop, K-뷰티 등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'브랜드-K' 확산전략 수립(20.1/4)

- ▶ KCON(러시아 신설) 등 다양한 한류행사에 '브랜드-K' 홍보관 설치
- ▶ 해외 명절기간(베트남 '땃(Tet)', 태국 '송크란 등)중 해외 홈쇼핑에 한류스타·인플루언서를 쇼 호스트로 하는 브랜드-K 특별전 편성 추진

- 수출 초보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/보증 출시(20.9월)

\* (처리기간) 보험: 5일 → 1일 내, 보증: 16일 → 3일 내  
(제출서류) 보험: 3종 이상 → 0종, 보증: 17종 → 1종

- 수출바우처 및 해외 현지 지원 확대 등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

- ▶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(3,200→3,500개사) 및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 신설('20년, 200개사)
- ▶ 외국 현지 기업을 직접 찾아가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을 매칭하는 KOTRA '글로벌 파트너링 프로그램' 확대('19년 32회 → '20년 40회 이상)
- ▶ 해외 현지에서 수출전시회를 지원하는 '해외전시회 사절단' 확대(5,800→6,500개사)
- ▶ KOTRA 해외지사화 사업\* 전담직원의 1인당 지원기업수 축소(7→6.5개사 / 총 5,000개)  
\* KOTRA 해외지사를 수출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현지진출 지원
- ▶ KOTRA '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('19.5월 개소)' 등 전담조직을 활용, 아세안 등 신남방 진출 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, 수출품 시험·인증 상담 등 체계적 지원 제공

- 부처·지원기관 등이 보유한 수출·해외진출 정보를 통합 제공 (Map of Maps)할 수 있는 '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' 구축 추진

- 美 Black Friday, 中 광군제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기간을 중심으로 현지 O2O 매장을 활용한 新 소비재 유통채널 개척
  - \* KOTRA 해외지사를 통해 국내 수출품을 취급하는 현지 O2O 매장에 판촉비 등 지원
- 운송비 절감을 위해 소형(2kg 이하) 물품을 해상페리로 수송하는 對중국 해상특송 서비스 적용 지역(現 4곳)을 추가 확대 추진
  - \* 일본 등 전자상거래 수출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상특송이 이루어지도록 협의 추진
-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통상정보센터\* 설치('20.1월) 및 WTO 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 확대
  - \* 통상현안 분석, 기업 맞춤형 통상·산업전략 컨설팅,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
- 프랑스, 독일 등 주요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, CES 등 국제행사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 확대
  - ▶ 한-프 스타트업 연대 기반 마련 **공동성명 채택('19.11월), 한-독 기업협력 MOU 체결 신규 추진('20.1월)** 등을 통해 국제 협력토대 마련
  - ▶ CES(美, '20.1월), 하노버박람회(獨, '20.4월), 실리콘 밸리 등에 우리 스타트업과 방문하여 **전시회, IR 및 네트워크 확대**
-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영문 이외 중문 등 주요 현지 언어로도 정부 인증·확인서 발급
  - \* 현재 벤처기업 확인서 등 9종의 확인서·인증서를 영문으로 제공 중
- 농·수산물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
  - ▶ **김·어묵 수출 증대 등 新산업 육성을 추진\*하고, 소포장·간편조리식·건강식 등 소비트렌드 맞춤형 상품 개발 지원**
    - \* 마른김 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시설(히트펌프) 보급 시범사업(10개소), 어묵원료 구입자금 지원사업 등
  - ▶ **검역해소품목\* 수출을 지원하고, 수출통합조직 추가 개소(현재 4→'20년말 6개) 및 해외 온라인 판촉 플랫폼 구축 등 농식품 수출 인프라 확충**
    - \* 딸기, 삼계탕, 파프리카 등 15개 품목(미국 등 6개국)
  - ▶ **전략국가 데모온실(2개국) 설치, 재배·데이터 관리 인력 파견 등 패키지 지원으로 스마트팜 기술·플랜트 수출 촉진**
  - ▶ **수산물 수출 다변화, 프리미엄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한류 연계 행사\*, K-씨푸드 글로벌 주간 운영 확대 및 양식책임인증제(ASC)\*\* 취득 지원**
    - \* (박람회 참가지원) '19, 42회 → '20, 53회 / (한류연계 행사박람회) '20년 신규 5회
    - \*\* 사료·환경·질병 관리 등 우수 양식장에 대한 인증으로 글로벌 유통·호텔 기업에서 입점 조건으로 활용
  - ▶ **전남권 수산물수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생산·유통·가공의 연계로 수출수산물 가격 경쟁력 및 제품 질 제고**

## ② 수출금융 240.5조원 공급('19년대비 +23.5조원) 등 수출금융 지원 강화

- ① 주력 및 전략 신흥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한도 일괄증액(10%) 조치 기한을 추가 연장('19년말→'20.3월)
- ②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(「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 무역금융 지원」)에 대해 7.7조원 지원('19년 6.2조원 → '20년 7.7조원)
- ③ 신흥국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0.8조원 규모 「수주 지원 프로그램」과 2,600억 원 규모의 「수입대체 특별보증」 신설
- ④ 현장 수요가 큰 「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」 지원 4배 확대('19년 500억원 → '20년 2,000억원)
- ⑤ 「글로벌 플랜트·건설·스마트시티(PIS) 펀드」 조성금액('19~'23년간 1.5조원) 중 5,000억원을 '20년중 신속 투자 추진
  - 「글로벌 PIS 펀드」 관리전문기관(KIND)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자-투자자간 신속한 협의 지원('20.1월~)

## ③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활성화

- ① 서비스 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 지원
  - 「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」 마련('20.3월)
    - \* ①기업수요 맞춤형 지원, ②해외시장 접근성 제고, ③해외진출 인프라 확충 및 유망산업별 전략 마련
  - 서비스 특화 수출상담회인 서비스 수출대전(K-Service) 확대 개최 (방한바이어 250→300개사, '20.4월)
  - 의료기관, 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1,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 조성('20.1/4분기중 운영방안 마련)
  - 서비스 해외진출 비즈니스모델 구축 사업 확대(10→40개사)
    - \* 타당성 조사, 현지화, 현지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해외 서비스 런칭 지원

## ②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확대('19년 3.1 → '20년 3.4조원)

- 관광·보건·콘텐츠·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해 대출 금리(최대 0.5%p) 및 한도(최대 10%p) 우대
- 유망서비스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무역보험 보험료 및 부보율 우대조치\* 일몰기한 연장('19.12월 → '20.12월)
- \* (보험료)10% 할인 (부보율)중소기업 97.5→100%, 중견기업 95→97.5%

## 4 새로운 통상환경下 「글로벌 코리아」를 위한 적극적 대외 진출전략 추진

### ①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정책 고도화 추진

- RCEP 및 필리핀과의 FTA 연내 최종타결 추진, 캄보디아와 FTA 공동연구 개시 등 FTA 네트워크 확대
-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(미얀마·베트남), 금융협력센터 설립(인니)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신남방국가 진출 지원
- \* 우리기업 및 금융기관의 현지 진출 지원('20년 개소예정, 인니 자카르타)
- 스마트시티, ICT, 바이오·의료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
- \* 한-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(지능형 교통정보),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등
- 신남방·신북방국가 및 인접국\*을 중심으로 EDCF 지원을 확대\*\*하여 주요국과 우호 강화 및 경제협력 증진 노력
- \* 아세안 국가, 인도 및 주변국(네팔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방글라데시), 몽골 및 CIS국가
- \*\* 주요대상국 승인규모 5.6억불 확대('19년 14.4억불 → '20년 20억불)
- 관계부처·민간기업·학계가 참여하는 “(가칭)민관협 개발협력사업 협의회”를 개최하여 전략적 접근방안 마련

### ② 신북방정책 성과 확산 및 교역·투자 다변화 추진

- 9-브릿지\* 행동계획의 성과 가시화\*\*, 동북아 디벨로퍼 협의체 설립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북방 인프라 수주 지원체계 구축
- \* 한-러간 9개 중점 협력분야(전력·가스·철도·농업·수산·북극항로·항만·조선·산업단지)
- \*\* 쇄빙LNG선 공동건조, 러 조선소·항만 현대화 참여, 한국기업 산업단지 개발 등

- 10억불 규모의 한-러 소재·부품·장비 공동투자펀드 조성 등 고부가가치 산업 협력 강화

\*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러시아 투자프로젝트에 투자,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중점 지원

- 한-우즈벡 FTA 공동연구('19년下 개시) 및 한-러 서비스·투자 FTA 협상 가속화를 통해 교역·투자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

### ③ 유망 신시장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

- 초고위험국 인프라 수주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\* 및 중소득개도국 대상 경험증진자금\*\* 등 금융지원 본격 추진

\* 추가재원 확보(現 7,800억원) 및 지원대상국 발주처와의 F/A(Framework Agreement) 체결 등을 통한 후보사업 발굴·지원

\*\* 총지원액 0.5억불 중 '20년 0.1억불 최초 공급(네팔 수력발전 사업)

- 미국과 제3국 인프라 시장 공동진출, 양국간 상호투자 확대 등을 위해 공동 컨소시엄 및 금융지원 방안 마련 등 추진

\* 한미 재무부간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('19.10월)

- 제3국 공동진출 지원을 위한 한·중간 협력플랫폼 구축

- 우량사업 발굴·수주에 필요한 사업타당성조사(F/S) 지원\* 등 비금융서비스를 신규 도입하여 금융지원 연계 가능성 제고(수은)

-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 기획, 건설·운영, 제도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\*(EIPP) 도입('20.6월)

\*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: 협력국 핵심 분야(에너지, 스마트시티 등)에 대해 3년 이상 집중 자문을 실시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(KSP)의 새로운 사업모델

\* '20년 미얀마, 우즈베크와 시작하여 향후 협력 대상국가 확대('20년 68억원)

- MDB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·기관의 MDB 사업 수주 기회 확대

\* MDB 지원 기능을 전담하는 다자사업개발팀을 수은에 신설('20.上)

## [5] 지역혁신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

### ① 지역 혁신산업 육성 및 지역 벤처·창업 활성화 지원

#### ① 지역벤처·창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

- 지방 중소·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인 지방펀드를 1,000억원 추가 조성('19.10월 기준 2,855억원 운용중)
- 산은과 지역 중견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지역 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(Open Innovation Fund)를 대구·경북권 등으로 확대

▶ (현행) 동남권(413억원), 광주·전남권(211억원) 조성완료  
→ (개선) 대구·경북권 등으로 추가펀드 조성

#### ②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산업 육성 촉진

▶ 지역별 스마트특성화 전략\*에 따라 장비구축, 인력양성 등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기반구축\*\* 사업 본격 실시

\*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역량 강화 및 위기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지역성장 정책

\*\* 예: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('20년 신규 567억원), 지식산업센터 7개소 신규 구축('20) 지역 VR·AR 제작지원 센터 확대(신규) : ('19) 3 → ('20) 4개소

▶ 지역주도의 **다부처** 사업을 연계하는 **지역혁신성장계획** 수립 및 **투자협약** 방식으로 사업추진

\* 시도 혁신계획 바탕으로 부처-시도간 협약안 마련('20.1) → 예산 확정후 본 협약 체결('20.말)

▶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실증프로젝트, 기업유치 지원 등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

▶ 제조업 침체우려 지역 중심으로 주력산업 혁신 및 **신주력산업** 창출 위한 **지역활력 프로젝트** 본격 실시

▶ 기관·시설별로 산재된 연구장비를 **공동 활용**하는 시스템 구축

\* 부처가 운영 중인 연구장비·시설정보 등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 지정 및 연계 추진

### ②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제도 재정비

#### ① 지역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「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」 제정 및 「국가공업지역 관리 기본방침」 수립 추진

-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일반·준공업지역 구분없이 지역산업 특성에 따라 **네거티브방식**으로 행위규제 완화

▶ (현행) 전용·일반·준공업지역에 허용된 건축물 용도만 허용 →  
(개선) 정비계획 수립시 일반·준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변경 없이 건축물용도 허용, 복합개발을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

## ②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 지급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요건 완화

- ▶ (현행) 본사가 수도권 내 대상지역(서울 전역, 경기·인천 일부 지역)에 소재할 경우 신청 가능  
→ (개선) 본사가 아닌 사업장만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 소재할 경우에도 신청 가능

## ③ ① 지방 산업기반시설, ②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, ③ 지방 물류·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치 연장

### ① 산업기반시설 : '19년말 → '22년말

- \*산단: (시행자)취득세 35%, 재산세 35~60% / (입주기업) 취득세 50%(+조례 25%), 재산세 35~75%
- \*지식산업센터: (시행자)취득세 35%, 재산세 37.5% / (입주기업)취득세 50%, 재산세 37.5%

### ②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요건 완화 : '19년말 → '22년말

- \* (사업시행자) 1,000억원 이상 투자 시 → 500억원 이상 투자 시
- \* (입주기업) 20~100억원 이상 투자 시 → 5~20억원 이상 투자 및 10~30명 고용 시

### ③ 지방 물류·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: '19년말 → '22년말

- \*물류단지: (시행자)취득세 35%, 재산세 35% / (입주기업)취득세 50%, 재산세 35%(대규모점포 제외)
- \*복합물류터미널: (시행자) 취득세·재산세 25%
- \*관광단지: (시행자) 취득세 25%(+조례 25%)

## ③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착수

### 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(23개 사업, 25.4조원)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완료하고,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 추진

- \* 평택~오송 복복선화(3.4조원), 국도 위험구간 등(1.4조원),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(1.3조원),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(0.4조원), 산재전문 공공병원(0.2조원) 등

### ▪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턴키방식(설계-시공 동시 발주) 등을 활용하여 '20년 1.9조원(총사업비)규모 사업 착공·발주 추진

- \* 동해선 단선 전철화 0.5조원, 경남 신안-생비량 국도 0.2조원, 압해-화원 국도 0.5조원, 화태-백야 국도 0.5조원, 울산농소-경주외동 0.2조원

### ▪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된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(총사업비 1.3조원),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(총사업비 1조원) 등 R&D 연구도 본격 추진

- \* 지역특화 산업육성+(R&D) : '20년 999억원 투입, 493개 과제 추진  
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: '20년 567억원 투입, 27개 과제 추진

### ②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프로젝트 사업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 기업에 대해 도급 의무화



#### ④ 지역 고용·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합리화

- ①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·연장 기준을 개편하여 제도의 정합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

▶ (현행)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을 기준으로 판단  
→ (개선)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, 사업장수 증감률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

- ②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법을 제정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검토

▶ (예방강화) 지역 위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, 위기에상지역 긴급지원 근거 마련  
▶ (패키지지원) 세제·금융, 대체·보완 산업육성, 인력양성, R&D 등

- ③ 「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」을 신설하여 급격한 고용위축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실시

\* 취업자 수 급감·대규모 구조조정 등 최소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간 30~200억원 지원(최대5년간)

#### [6] 리스크 관리 등 경제안정 기반 구축

##### ① 재정정책을 통한 적극적 거시정책 추진

- ① (중앙) 확장 재정('20년 512.3조원, +9.1%)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 조기집행 추진('19년 목표 61.0 → '20년 목표 62.0%)

- 특히,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, SOC 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목표를 강화하여 설정·관리

\* 상반기 집행목표('19년→'20년, %) : (일자리) 65.0→66.0 (SOC) 59.8→60.5

- 사업유형별로 필요한 집행 사전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1/4분기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

▶ (R&D 등 공모사업) 과제 사전 발굴,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절차 금년 내 완료  
▶ (SOC 사업) 사업계획승인, 보상공고,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조기 완료

- ② (지방) 성립전 예산사용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

- 각 자치단체별 '성립전 예산사용\*' 등 제도를 적극 활용

▶ 성립전 예산사용 : 추경예산 성립 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  
▶ 자부담분 확보 전 국비 우선 사용 : 국비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전 교부된 국비 우선 집행



-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자치단체 추경에 반영·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'20.1분기 내 공모절차 진행·확정내시 최대한 완료 추진
- \* 확정내시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추경 등 사전준비가 가능토록 각 부처는 내시 지연 사유, 향후 계획 등 안내하고, 지자체는 대응 추경예산 조기 확보
-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자치단체 이·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
- ▶ 보통교부세 산정시 자치단체 이·불용 규모 반영
- ▶ 지방재정 예비비의 근거가 되는 특별회계 존치 여부, 집행가능 범위 등을 원점 재검토

## 2 5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철저

- ❶ (부동산) 3대 원칙(실수요자 보호, 투기수요 근절, 맞춤형 대책) 하  
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'주택시장 안정화 방안' 발표('19.12.16)
  - 고가주택·다주택에 대한 보유부담 강화\* 및 양도세 혜택 축소\*\*를 통해 주택소유에 따른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
  - \* (종부세) 고가 1주택자 0.1~0.3%p, 3주택(조정대상지역 2주택자) 0.2~0.8% 인상
  - \*\* (양도세)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(기존주택 2→1년내 처분 및 전입요건 추가) 등
  - 시장질서 교란행위 근절\* 및 실수요 중심 청약질서\*\* 확립
  - \*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,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조사, 실거래 합동점검 상시화 등
  - \*\* 불법 전매 등 적발시 청약금지 강화(10년), 청약당첨 요건 강화(거주1년→2년) 등
  - 수도권 30만호 공급 조속 추진,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실수요자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
  -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필요시 내년 상반기 중 수요·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 종합대책 마련
- ❷ (가계부채) 주담대·전세대출 보완 등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
  -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內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
  - \*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,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용 주담대 금지, 시가 9억원 초과주택 차주에 대한 DSR 적용

- **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**

- \* 전세대출 후 시가 9억 초과 신규주택 구입 또는 2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, 사적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

- **은행권 예대출 규제\*('20.1월~)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유인 축소**

- \* 예대출 규제 관련 대출금액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15% 상향하고, 법인 대출 가중치는 15% 하향조정

### ③ (금융·외환)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여 금융·외환시장 관리 철저

- **미중 무역갈등,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하에서 국내 금융·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안정 노력 지속**

- ▶ **한은.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대내외 위험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, 필요시 대응방안 마련**

- ▶ **컨틴전시 플랜을 지속 점검.보완하고, 시장 변동성 확대시 신속하게 안정 조치 시행**

- ▶ **중국.호주 등과의 통화스왑 연장, 필요시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('20년중 15억불 한도)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 확충**

- \* '20년중 통화스왑 만기도래 현황:

- 말련(150억링깃/5조원, '20.1월), 호주(100억 호주달러/9조원, '20.2월),

- 인니(115조루피아/10.7조원, '20.3월), 중국(3,600억위안/64조원, '20.10월)

- **해외투자자, 국제신평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국가 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만전**

- ▶ 주요 국제금융 중심지에서 해외투자자 대상 **한국경제설명회(IR)**를 정기적으로 개최

- ▶ 국제신평사와 **연례협의 및 컨퍼런스 콜** 등을 통해 정부 정책방향 및 주요 현안 관련정보 수시 공유

- **ASEAN·G20 등과의 거시정책 공조 강화 및 금융협력 활성화**

- ▶ ASEAN 국가와 **금융협력 강화**를 위해 「**금융협력센터**」 설립 (인니 소재 駐 아세안대표부 내)

- ▶ **글로벌.역내 금융안전망 강화**를 위한 리더쉽 발휘

- \* ①'21년 ASEAN+3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('20년 日,베트남 / '21년 韓,브루나이)으로서 '20년 하반기부터 역내 금융안전망(CMIM) 실효성 개선 논의 주도

- ②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('20년 하반기, 서울) 등

#### ④ (통상) 미중 무역분쟁 등 통상 리스크에 적극 대응

- 통상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업종별 영향을 지속 점검하여 관계기관 등과 공동으로 적극 대응
  - \* 실물경제 대응반(산업부), 정책점검회의(기재부1차관), 대외경제장관회의(부총리) 등
- G20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 대응하고,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경우 WTO 제소 등 적극 대처
- 신북방·신남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,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

#### ⑤ (구조조정) 시장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기반 강화

##### 【 구조조정 진행중 기업(회생기업) 】

- 자동차·조선 등 주력산업(제조업 등)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 혁신펀드 규모를 확대하고, 운용방식을 개선

- ▶ 운용규모 확대 : '20년중 운용규모를 1조원 추가 확대(1.6→2.6조원)하고, 향후 최대 5조원까지 확대
- ▶ 운용방식 개선: ①제조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에 대해 모펀드 출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운용(현행 : 모펀드 50%, 민간 50%)  
②운용사가 주력업종 등에 투자시 관리보수 상향 조정 등

- 부실채권시장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암코의 부실채권 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, 구조조정 분야 투자 비중 확대

\* 유암코 투자잔액('19.6말) : 부실채권 2.4조원, 기업구조조정 1.4조원

\*\* 장기보유채권 매각 및 자본금 증자 등 구조조정 기능 확대 방안 마련

- 회생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와 M&A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산·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회생절차 협의 지원 강화

- ▶ 채권은행 : (현행) 회생절차 진행 중(M&A 포함)이라도 담보권 실행 및 채권매각 可  
→ (개선) ①DIP금융 공급(캠코, 중진공 등) 기업에는 담보권 실행 유예  
②M&A 진행중인 기업은 6개월간 채권매각 보류

\* 산·기은 및 시중은행(KB, 농협, 수협, 신한, 우리, 하나)과 MOU 기 체결(금융위, '19.11월)

- ▶ 신보 : (현행) 보증금액의 30% 이상을 회수가가능할때만 회생계획안 동의 可  
→ (개선) 25%로 기준 완화, M&A 진행중일때는 15%로 완화

- 회생법원-정부간 협의체를 통해 P-Plan,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\* 등 새로운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기업정보 공유 등 협의 강화

\* ARS(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):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까지 보류 기간을 부여해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 기회 제공

-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 운영자금 지원하는 DIP\* 금융 확대

\* Debtor In Possession 금융 : DIP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,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

▶ 소기업 : 지원규모가 20억원 이하인 기업은 캠프, 중진공 등이 직접 지원(연간 400억원)

▶ 중대기업 : 개별 지원액이 많은 기업은 DIP금융 전용펀드\* 조성 후 간접지원(年 2,000억원)

\* 캠프(연간 600억원 투자) + 한국성장금융 + 민간투자자(GP, LP) 참여

- 민간 참여자의 DIP 금융 공급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

▶ 회생기업에 공급된 신규자금에 대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될 경우에도 회생 절차에서 인정된 최우선변제권 인정

\* 현재 채무자회생법상 DIP 금융은 회생폐지 또는 파산으로 전환될 경우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나, 기업회생 과정에서 부여된 최우선변제권은 없어서 DIP 금융 공급유인 부족

- 회생절차 중 DIP 금융을 활용중인 회생기업 부담 경감

▶ 회생기업이 세일앤 리스백(SL&B) 프로그램을 통해 캠프에 자산 매각이후, 경영여건 개선으로 동일자산 재매입시 취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연부취득 계약방식\* 도입 (동일자산 재매입시 취득세 감면방안도 추가 검토\*\*)

\* 2년 이상에 걸쳐 매입대금을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며 취득하는 방식

\*\* 캠프 S&LB 프로그램에 대한 취득세 감면(50%) 일몰('20년말) 연장 검토시 병행 검토

## 【 구조조정 졸업기업(회생종결기업) 】

-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회생종결기업에 대해 캠프·중진공의 운영자금 대출 및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 지원 실시
- 회생종결기업에 대한 민간은행들의 운영자금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기술력 보유 기업 등에 신·기보 보증 지원

※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 마련('20.4월)

\* 관계부처 등과 운영중인 전문가 TF 및 연구용역(~'19.12월)을 거쳐 마련

## (1) DNA 확산 및 Post-반도체 육성

### ① 데이터3법\* 개정과 연계하여 데이터 경제 본격화 추진

\* 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법, 정보통신망법 개정안(현재 법사위 계류중)

#### ① (데이터산업 육성) 민간 주도의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

- (산업활용) 금융·바이오 등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구축·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거래소 등 활용 인프라 구축

- ▶ (금융) 금융데이터를 매개로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소 구축('20.上), 신용정보원 금융빅데이터 개방 확대('20.下), 금융 마이데이터 지원
- ▶ (바이오·헬스케어) 100만명 규모 '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('20~'29)'을 위한 유전체 임상정보 구축('20~'21) 및 데이터 중심병원 지정('20년, 5개)
- ▶ (스마트시티) 모빌리티·에너지·환경 등 시범도시(세종, 부산)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수집·분석·융합을 위해 AI 데이터허브 구축('20.下 플랫폼 설계 등 착수)
- ▶ (자율주행차) 경기융합기술원의 자율운행데이터와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데이터를 IT 스타트업 등에게 개방 확대('20년~)

- (공공데이터 활용) 국세정보\* 등 공공데이터 공개·이용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\*\* 활성화 추진('20년)

\*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기초 과세정보 자료를 대학, 공공기관, 연구기관 등에 '국세통계센터'를 통해 제공 추진

\*\* 디지털 증명체계·모바일 신분증 도입,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 등

- (융·결합 촉진) 이중데이터 융합 촉진을 위해 기존 빅데이터 플랫폼·센터간 데이터 연계\* 및 거래 표준화 방안\*\* 마련 추진

\* 유통·소비 플랫폼 기반 데이터거래소 오픈('19.12월) 등

\*\* 거래 가이드라인, 표준계약서 등 개발('20년~)

#### ② (법·제도 정비)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·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EU 적정성 평가\* 대응 지원

\*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보호수준이 EU와 상응하다고 인정될 경우, 상대국 기업이 EU GDPR(일반개인정보보호법)에 따른 추가조치 없이 사업 영위 가능

- 특히, 의료데이터의 경우, 과학적·산업적 활용을 활성화하고,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신속 정비 추진

- ▶ (연구촉진) 디지털 헬스케어, 신약개발 등 데이터 활용 연구 촉진 및 보건산업 기반 지원을 위해 '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' 제작('20년)
- ▶ (활용지원) 의료데이터 활용지원 센터 설립('20.1Q), 의료데이터 보호·활용 기술개발 R&D 대폭 확대('19년 37억 → '20년 80억)
- ▶ (협력연계) 의료기관·공공기관 간의 협력연구 및 안전한 정보연계 지원을 위해 보건 의료 분야 정보연계기관 지정 (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)

### ③ (정보보호)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화\* 기술을 개발('20년)하고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\*\*

\* 이미지·영상·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가명·익명처리하는 기술

\*\*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·권한을 이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('20년) 등

## ② 5G 투자촉진 및 산업에의 활용 활성화

### ① 세액공제, 행정비용 절감 등 '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' 마련

- ▶ 5G 망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\*
  - \* (현행) 장비 구입비 → (개선) 장비구입비 + 공사비
- ▶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개편(할당대가+전파사용료 통합)
  - \* 전파법 개정안 국회제출('20.上)
- ▶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(예: 50%)
  - \* '2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하반기 도입 추진(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)

### ② '19년 세계최초 5G 상용화에 기반한 과감한 투자 및 창업 지원으로 5G 산업 글로벌 시장 선점

- 데이터·AI 등과 융합한 5G 기술·장비·서비스 개발·실증 추진

- ▶ (5G 자율차) 제한공간 대상 5G 연계 물류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안전성 검증
- ▶ (스마트시티) 공공분야 수요창출을 위한 5G기반 국가인프라
- ▶ (스마트공장) 5G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·실증, 중소기업 보급 확대

- 5G 관련 차세대 디바이스 개발 및 융합서비스 발굴·활용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

- ▶ (위치정보)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
- ▶ (전파자원) '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(現2,680MHz폭 → 5,320MHz폭)

- 5G 테스트베드를 네트워크 장비, VR·AR, 드론, 엣지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
- 통신사, 창업·벤처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'5G 창업보육 공간(마포 Front 1)'을 조성하여 창업·벤처기업 인큐베이팅 및 기업간 협력 추진

### ③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파수면허제 도입

- 다양한 주파수 이용지위(할당, 지정, 사용승인)를 통합하고, 신산업 창출을 위한 임시주파수면허 도입\* 등 제도개편 기반 마련
- \* 신기술서비스 검증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파수 활용 → 이용이 적합한 경우 면허부여
- 주파수 면허를 받는 경우 별도 허가·신고없이 5G 무선국 개설 허용

## 3 「인공지능 국가전략」을 기반으로 AI 강국 도약 추진

### ① (AI 경쟁력 혁신) 핵심기술 개발, 선제적 규제혁신 및 인프라 구축,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AI 생태계 구축

- AI반도체\* · 포스트딥러닝\*\* 등 차세대 AI 핵심기술을 개발하고, 경쟁형 · 챌린지형 R&D 등 혁신적인 AI R&D 방식 확대('20년~)

\* 초고속·경량 프로세서, 저전력 신소자, 미세공정 기술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('20년 891억원, 과기정통부 · 산업부)

\*\* 차세대 AI 개발사업 예타 추진 → '30년까지 핵심기술 5개 이상 확보

- AI 분야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\*('20.上)하고,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령 신속 정비('20년) 추진

\* 법·제도 개선 계획을 포함한 'AI 활용에 관한 규제체계 전환 로드맵(안)' 마련

-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('20년 626억원)하고, AI활용 촉진을 위한 고성능컴퓨팅 지원 확대\* 및 AI바우처 제도 신규도입('20년 39억원)

\* AI R&D에 필수적인 고성능컴퓨팅 자원 지원: ('19) 200개사 → ('20) 800개사

- AI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('20년)하고, 오픈스퀘어-D 등 창업 지원 플랫폼\*을 통해 AI 스타트업 지원

\* 창업거점인 오픈스퀘어-D를 통한 데이터 제공·실습·컨설팅 제공, TIPS 운영사 선정 시 AI·빅데이터 분야 전문 투자회사 우대 등



## ② (AI 활용) AI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전반의 AI 활용 전면화

- AI 관련학과 교원의 기업겸직을 확대하여 전문교원 확보를 지원하고, 직군별 AI 교육\*과 전국민 AI 소양 교육 전면도입\*\*('20년)

\* 군장병·공직자 대상 기초교육, 중소·벤처기업 재직자 등 직군별 AI 교육 도입('20년)

\*\* K-MOOC 및 사이버대학 등을 통해 성인 온·오프라인 평생교육 제공('20년)

- 대규모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·AI 융합을 촉진하는 '대형 AI 융합 프로젝트(AI+X)' 추진

제 조	스마트공장 연계 데이터센터 구축('20~)
바이오	신약개발 AI 플랫폼 구축(~'21) 및 AI·IoT 융합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(~'25)
스마트시티	데이터허브 구축을 위한 플랫폼 설계 등 착수('20.下)
교통·물류	AI 자율협력주행('19~), 자율주행 대중교통, 교통최적화 기술 개발('21~)
농수산	스마트팜 혁신밸리('22, 4곳) 및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('22, 6곳)
에너지	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('20~), 지능형 신재생 발전('19~)
문 화	지능형 캐릭터 제작엔진·플랫폼('21) 및 AI 콘텐츠 창작플랫폼 개발('20~)
국 방	국방 지능데이터센터 구축('20)

## 4 BIG3(바이오, 미래차, 시스템반도체) 성장 가속 및 유망 신산업 활성화

### ① (시스템반도체) 시스템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기술개발, 펩리스 육성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역량 강화

-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·원천기술개발에 1조원('20~'29년) 투자

\*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('20~'29): 산업부·과기정통부 공동, 총 1조 96억원

-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(약 1,000억원),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 센터\* 확대 등 설계기업 성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

\* 멀티프로젝트웨이퍼(MPW)제작, 설계 인프라, 반도체IP 검증확산 등 지원('20년 60억원)

- 신성장·원천기술 R&D 비용 세액공제(20~40%)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(5~10%)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·제조기술 추가

- 민관 1:1 매칭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전력반도체 분야 산학연계형 석·박사 전문인력 양성 추진

▶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소자공정 기술개발사업('20년 신규, 23억원)

▶ 차세대 전력 반도체소자 제조전문인력 양성사업('20년 신규, 24억원)



② (바이오)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바이오산업 혁신 TF\*를 통해 바이오산업 전반의 혁신 성과창출

\*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,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6개 작업반 구성(총괄·규제개선반, 개발지원반, 금융지원반, 바이오헬스반, 식품·자원바이오반, 바이오 산업기반 조성반)

▪ 첨단재생의료, K-뷰티, 혁신신약 및 병원 창업 활성화 기반구축 등 바이오헬스 혁신 가속화

\*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R&D 투자를 '25년까지 연 4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

- (의약품)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('20.8)으로 임상연구 활성화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생태계 혁신 및 기술개발 투자 확대

▶(전략수립) 안전성 확보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 수립('20.10)

▶(임상연구제도) 국가 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위원회, 실시 의료기관 지정, 인체세포 처리업 신설, 안전관리기관(질병관리본부)를 통한 장기추적조사 등 도입

▶(첨단바이오의약품) 맞춤형 심사 및 우선 심사, 조건부 허가 등 신속절차 마련

▶(기술개발) 원천기술, 임상연구,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('21~'30)

- (화장품) 화장품·뷰티의 기술선진화, 규제혁신, 브랜드 강화,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고부가화하는 「K-뷰티 혁신전략」 마련('20.하)

\* 예 : (화장품) 신기술 R&D 강화, 규제개선, 대규모 박람회 신설,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 
(뷰티) K-뷰티 홍보관 운영, 한류 플랫폼 활용, 전문인력 교육, 이마용 서비스 규제개선 등

- (제약) 스케일업 펀드 등을 활용하여 블록버스터(연매출 1조원 이상)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충분한 자금 공급

- (연구·창업)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근거 마련 등 연구·창업 생태계 조성\*, 개방형 실험실 및 바이오 클러스터\*\* 지원 확대

\* 복지부(비대학병원)·교육부(대학병원) 병행 추진

\*\* (개방형 실험실) '20년 5개소, (바이오 클러스터) '20년 3개소 지원

▪ 바이오혁신 범위를 바이오헬스(Red Bio) 중심에서 식량·자원 (Green Bio), 환경·에너지(White Bio)까지 확대

\*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,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그린·화이트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창출 등 추진

- 바이오산업 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5대 추진전략 분야를 선정하고,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추진

\* 핵심과제 확정 후, 내년부터 핵심과제별 세부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

#### <5대 추진전략 분야>

- 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&D 혁신    ②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 중점 육성
- ③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선진화    ④ 바이오 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
- ⑤ 바이오기반 기술융합 사업화 지원

### ③ (미래차) 친환경차 국내보급 활성화, 미래차 기술개발·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미래차 경쟁력 강화 추진

- 전비(電比, kWh 당 주행거리), 배터리 기술 발전, 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 추진
- 전기·수소,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송 및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연장('19년말 → '21년말)

▶ **취득세 감면 확대** : (전기·수소버스) 50 → **100% 감면**(최소납부세제 적용\*)

\* 감면액 200만원 초과인 경우 감면액의 15% 부담

▶ **일몰연장** : (전기·수소자동차) **취득세 100% 감면**(140만원 限)  
(연안화물운송용 천연가스 선박) **취득세율 △2%p**

- 전기차·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을 대폭 확대

▶ **보급 계획**('19→'20년)

(전기차) 승용 4.2→6.5만대 버스 3→6.5백대 화물 1→7.5천대 급속충전 1.2→1.5천기  
(수소차) 승용 4→10.1천대, 버스 35→180대, 충전 40 → 53개소

- 친환경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의무휴업제 적용 제외
- 신규 단지조성사업 시행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칸을 일정비율(5%)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

▶ (현행) 경차·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이 총주차대수의 10% 이상 설치  
→ (개선) 경차·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이 총주차대수의 10% 이상 설치  
+ **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5% 이상 설치**

④ (이차전지) 차세대 이차전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, 전·후방 산업생태계를 활성화

▪ 이차전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

- ▶ 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정부-수요기업 매칭방식으로 개발('20년 신규, 47억원)
- ▶ 이차전지 주요 소재·부품·장비\* 공급 안정화 추진  
\*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파우치, 바인더, 전해액첨가제 등 우선 지원
- ▶ 기존 리튬이온 방식 이차전지 안전성·신뢰성 제고 기술개발 사업 예타 추진('20년)

▪ 이차전지 전·후방산업 동반 활성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

- ▶ 이차전지 최대 수요처인 전기차 산업과 협업 강화  
\* 전지제조사-자동차제조사 R&D 공동연구반 운영 계획 수립('20년)
- ▶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·환경부·지자체 공동 '이차전지 세컨라이프(2<sup>nd</sup> Life) 생태계 구축' 시범사업('20년, 127억원)
- ▶ 산업현장 수요와 연계한 핵심 인력 양성 지원  
\* 산업수요를 기반으로 전문기관-대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석·박사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('20년, 17억원)

▪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시험·인증 지원

- ▶ 이차전지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('20년 150억원) 및 ESS의 화재·폭발·충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안전기술 표준화 연구  
\* 이차전지 셀, 모듈, 랙 단위별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방법 기술개발
- ▶ 시험·인증 서비스, 세계 표준 확보 지원 및 이차전지 소재·부품 시험평가 센터 구축 추진

▪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」 수립 추진('20.上)

⑤ (로봇) 제조업 고도화, 스마트농업 및 복지·의료 등 분야를 선도로 로봇 개발·보급확산 지원

▪ (제조) 제조·서비스업의 각 분야에서 협동로봇 활용을 확대하고, AI·5G 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테스트 인프라를 구축

- ▶ 뿌리·섬유·식음료 등 업종별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대규모 실증('20년, 136억원)  
· 제조로봇(협동로봇 등 500대) 도입 컨설팅, 교육, 실증 등 패키지 지원
- ▶ 제조↔서비스 로봇 이중산업에 적용·실증('20년, 90억원)  
· 서비스로봇(물류로봇, 웨어러블로봇) → 제조업 현장(공장 등)에 실증  
· 제조로봇(협동로봇) → 서비스업 현장(치킨집, 커피숍 등)에 실증
- ▶ 로봇+AI, 로봇+5G 융합제품 실증 및 테스트 인프라 2개소 구축('20년)  
· (로봇+AI) 협업지능 기반 제조업 로봇 지원센터(24억, 신규)  
· (로봇+5G) 5G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센터(38억, 신규)

- (농업) 스마트농업 확산·가속화를 위해 농업용 로봇 기술개발 R&D 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

- ▶ 농작물 수확로봇 등 첨단농기계 산업화 기술개발 R&D 지원(‘20년, 98억원)
- ▶ 자율주행 무인트랙터, 로봇 등을 활용한 무인자동화 농업생산단지 시범 조성(‘20년 신규, 1개소)

- (복지) 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, 의료·재활 로봇 실증 특례지역 지정

- ▶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으로 품질 적합인증을 받은 ‘재활로봇’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방안 등 검토
- ▶ 국·공립, 재활병원 등을 중심으로 의료로봇(수술·재활) 특화센터 지정·지원(‘20년)
  - 전국 국공립병원, 재활병원 등과 협력을 통해 정보주체 동의하에 임상데이터 등을 확보하여, 로봇 시스템 개선에 활용하고 로봇 보급 확산

## ⑥ (신산업 금융) 시스템 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·보증 공급

\* ‘19~’21년간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30조원 공급

## [2] 주력산업 및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조기 확보

### ① 기존 주력산업의 스마트화·친환경화·융복합화 가속

#### ① (스마트화)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산단·공장 확대, 고도화 등 집중 투자

\* 스마트공장 보급 계획(누적) : (‘19)12,200 → (‘20)17,800 → (‘21)23,800 → (‘22)30,000

\*\* 스마트산단 조성 계획(누적, 개) : (‘19)2 → (‘20)4 → (‘21)7 → (‘22)10 → (‘30)20

- 스마트산단 3개소 추가 선정(‘20.上, 누적 7개소) 및 제조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·AI 활용 지원시스템 확충

\* 제조 데이터센터, 플랫폼 등 AI 인프라 마련

- 대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자금·노하우를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확대(‘19. 1,597 → ‘20. 2,422개(누적))

-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을 위해 수도권 제외 전국 4개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를 구축(‘20) 2개소 신규 구축 → (‘22) 2개소 추가 구축)

- 자율운항선박, e-Nav 시범운영('20~),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등 해운·항만 스마트화 촉진 선도사업 추진

\* 선박제어, 항해, 자동하역, 하역장비간 연결 및 AI제어, 해상초고속 통신망 연결 등

## ② (친환경화) 친환경 차량·선박,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, 인프라 구축, 수요창출 등 지원

- ▶ 전기·수소차 : R&D 3,856억원('20~'25) / '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, '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보급
- ▶ LNG·수소추진선 : '20년중 예타 추진 / '25년까지 LNG 추진선 140척 시장창출 목표

## ③ (융복합화) 자율운행차·선박, 스마트 의류, 가전, 서비스 로봇 등 제조-서비스 융합 신상품 R&D·공공실증 등 사업화 촉진

-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 유품목으로의 전환 지속 추진

- ▶ 반도체·디스플레이·이차전지 → 차세대 메모리, 지능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, Micro-LED, 바리튬이차전지 등
- ▶ 자동차조선 → 스마트자동차, 전기차·수소차, 자율운항선박, 전기·가스추진선 등
- ▶ 섬유·의류·가전 → 스마트의류, 고감성·고기능의류, 산업용섬유, 공기산업, 스마트가전 등

## ④ (금융지원) 주력산업 P-CBO로 중소·중견 기업 회사채를 '20년중 1조원 매입(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 검토)

- 또한, 산업위기지역 내 자동차 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 업체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\*의 기존 대출·보증 만기 1년 추가 연장(~'20.末)

\* 산업은행, 기업은행, 수출입은행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## ②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추진

### ① 6대분야\* 100개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

\* ①반도체, ②디스플레이, ③자동차, ④전기전자, ⑤기계·금속, ⑥기초화학

- 핵심전략품목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\*을 통하여 기술개발, 수입선 다변화,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등 병행 추진

\* 과기부, 산업부, 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('20.1월)

-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'20~'22년 총 5조원 이상('20년 1.7조원) 투자 등 「경쟁력강화 특별회계」 신설로 매년 2조원 이상 투자('20년 2.1조원)

### ② 수요·공급기업간 협력사업\*을 '20년 20개 이상 목표로 적극 발굴하고, R&D·자금·입지·규제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

\* 협력사업(모델) 유형 ①협동 연구개발형 ②공급망연계형 ③공동투자형 ④공동 재고확보형

- ③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'스타트업 100 → 강소기업 100 → 특화선도기업 100'으로 단계적 성장 지원

	스타트업 100		강소기업 100		특화선도기업
<지원 대상>	유망 창업기업	⇨	전문 중소기업	⇨	핵심기술 보유
<지원 내용>	자금 등		R&D, 자금 등		R&D, 자금 등

- ④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의 첨단기술 확보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한 세제·금융 등 지원 강화

-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R&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 추가

\* (R&D 법인세 공제율) 대·중견기업(20%+최대10%), 중소기업(30%+최대10%) 적용

\* (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): 대기업(5%), 중견기업(7%), 중소기업(10%) 적용

- 소재·부품·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확대

\* (출자비율) 50% 초과(또는 경영권+30%초과) → 50% 이상(또는 경영권+30%이상)

(투자주체) 공동인수시 각 기업별로 적격요건 판단

→ 공동인수시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요건 판단(공동인수시에도 세제혜택 적용)

(투자방식) 주식취득만 해당 → 사업·자산 양수도 포함

-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1조원 규모\*의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(기존 보증 만기연장, 신규 보증비율 상향 등)

\* 신용보증기금 7,500억원, 기술보증기금 2,500억원

- 대기업 등과 매칭하여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1,000억원 규모 전용펀드를 모태펀드 내에 조성

- 「해외 M&A·투자 공동지원 협의체\*」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M&A 및 시설 투자 등을 종합 지원

\* 정책금융기관(산은, 기은, 수은), 시중은행, 글로벌 투자은행 등이 참여하여 해외 M&A 인수자금, 컨설팅, 사후통합관리 등을 지원(2.5조원 이상)

- ⑤ 해외 기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투자 시, 현금지원 한도를 상향(30→40%)하고, 현금지원 대상이 되는 첨단 기술 분야 확대\* 추진

▶ (현행) 조특법 상 신성장동력기술(173개 기술) → (추가)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·제품(2,990개)으로 확대



### ③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지원

❶ 기업구조혁신센터(캠코 27개지점)을 통해 신용위험평가 C·D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고, 회생절차 기업정보를 적격투자자에게 제공

❷ 개정된 기업활력법\*(19.8월 개정)에 맞춰 패키지(제도·자금·세제) 지원 확대

\* 지원대상이 과잉공급 업종 기업과 함께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지역 내 주된산업에 속한 기업까지 확대

▪ 적극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「신산업판정위원회」 운영(19.11월~) 및 「중소·중견기업 사업재편 컨설팅」 확대 실시

▪ 산업구조고도화자금(19~21년간 10조원) 등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

▪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

\* (현행) 중소기업, 회생기업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범위 소득의 100%  
→ (개선)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공제범위 100% 적용

❸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상시 사업전환 촉진, 유망기업 경영악화 방지 및 회생 신속 지원 추진

▪ 사업전환계획 승인 간소화, 사업전환자금 지원 강화 등

▶ (사업전환 간소화) 사업전환계획 승인요건 완화(기존 업종 매출액 비율 30% 이상 → 기준 삭제) 및 승인 소요기간 단축(예: 평균 30→15일 이내) 추진

▶ (사업전환자금 지원) 융자범위에 지식재산 인수비용을 포함하고, 성실 실패시 '융자상환금 조정형' 프로그램을 개인기업 대출에 적용

\* 성실 실패시 원금은 잔여채무의 최대 90%까지 감액, 이자·비용은 전액 면제

▪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300개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고, 회생컨설팅 확대·재도약 지원 등을 통해 재기지원 강화

▶ (경영악화 방지) 중진공, 신·기보 등이 성장 잠재성이 높은 경영어로 중소기업 300개를 선정하여 금융·컨설팅 연계 지원

▶ (회생지원) Pre-회생컨설팅(회생절차 이전에 채무조정 지원), 공동 자금지원, 회생컨설팅·이행보증을 연계 지원하는 재도약 패키지\* 실시

\* 구조개선전용자금(50~100억원), 회생컨설팅(기업당 최대 3천만원), 출자(300억원) 등 우대



### [3] 서비스산업 혁신 본격화

#### ① 서비스산업 혁신체계 구축 및 제조업 수준의 육성 지원

##### ①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·전략 마련('20.6월)

\* KDI·산업연 및 주요 분야별 출연연으로 구성된 서비스산업 자문단과 협업

- 서비스산업의 메가트렌드와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·전망하여 서비스산업 중장기 발전비전 제시

-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출범, 서비스산업 자문단\* 운영 등 서비스산업 발전·혁신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재정비

\* 서비스산업 현황 분석·구조진단 및 향후 정책과제 발굴, 제조업 수준 지원을 위한 재정·세제·금융·조달 등 소분야에 차별 재점검·해소 등 역할 수행

##### ② 서비스 중소기업의 생산·유통·판매全过程를 스마트서비스화 하기 위한 '서비스 중소기업 ICT 활용방안' 마련('20.3월)

- 서비스 생산성 제고를 위해 AI·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진단·조치, ICT 솔루션\* 등을 지원하는 「스마트서비스」 사업\*\* 신설 및 신속 집행

\* 프로세스 관리(RPA), 물류관리(WMS), 고객관리(CRM) 솔루션 등

\*\* 150개 기업 대상, 최대 0.6억원 지원(기업당 총 사업비의 50%까지 지원)

##### ③ 서비스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망·생활밀착형·융복합 서비스 중심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 마련('20.6월)

##### ④ 서비스 R&D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유형·사례 등 서비스 R&D 가이드라인 마련('20.3월)

#### ② 유망 서비스업 체감성과 창출 및 핵심규제 혁파

##### 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유망서비스의 체감성과 창출

- (의료) 지방의료원 신축·보강 등 필수 인프라 확충 및 ICT 활용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제공 등 통한 의료접근성 제고 추진

- (바이오헬스) 화장품·뷰티의 기술선진화, 규제혁신, 한류 연계 등을 통해 고부가화하는 「K-뷰티 혁신전략」 마련(‘20.下)

\* 예 : (화장품) 신기술 R&D 강화, 규제개선, 대규모 박람회 신설 등  
(뷰티) K-뷰티 홍보관 운영, 이미용 규제개선, 한류 플랫폼 활용, 전문인력 양성 등

- (관광) 서울 아레나 등 K-pop 전용공연장의 착공 및 차질없는 준공을 지원하고, 지역의 전용공연장 지속 확충

- (콘텐츠) 금융·세제지원 강화 및 고성장 핵심 콘텐츠 집중육성

▶ 정책금융: 1천억원 규모의 모험펀드를 신규 조성, 콘텐츠 완성보증 등 콘텐츠 분야 보증 확대

▶ 세제지원: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

\* (현행) 드라마, 애니메이션, 한국 자연·문화유산 소재 다큐멘터리에 대해 세액공제  
→ (개선)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추가 및 다큐멘터리 소재 제한 폐지

▶ 규제개선: 비디오물영화게임음악출판인쇄사업자 폐업 신고기한 연장(7→30일 법개정 추진), 가상현실(VR) 시뮬레이터 설치 기준 완화(‘20.3월), 게임 플랫폼별 게임등급 중복심의 개선(‘20.1월), 복합장르 게임등급심의 수수료 기준 마련(‘20.10월)

▶ 핵심콘텐츠 지원

·(실감콘텐츠) 5G 콘텐츠 플래그십 공공분야 XR+α 프로젝트 추진 및 「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(상암)」 구축·운영(과기정통부), 광화문 한국대표 실감문화체험 공간 조성(2개소), 박물관미술관 연계 체험관 조성(공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)

·(게임) 게임콘텐츠의 e스포츠화 지원을 위한 제1회 “한중일 e스포츠대회” 개최 추진

\* 정식종목에 국내 게임콘텐츠 포함·선정, 필요시 국내 유망 게임콘텐츠 시범종목화 추진

## ② 서비스산업 핵심규제 선정·효과

- (산림휴양관광) 규제특례를 통한(지역특구법 개정)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\* 창출 및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 도입을 위한 법 제정 검토

\* 예 : 하동 알프스 산악열차(민간투자 약 1,500억원) 등 대기중인 프로젝트 지원

- (보건) 개인정보보호법 개정\*에 따른 의료데이터 활용확대 및 보호방안 등을 위한 ‘의료데이터 활용전략’ 수립(‘20)

\* 개인 사전동의 없이도 가명처리하여 통계조사·연구 등에 활용 가능

- 공공기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범위를 기존 공공연구에서 과학적 연구까지 확대
-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보유데이터를 헬스케어 기업·연구소·대학까지 개방
-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

## [4]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강화

### ① 高科技·新산업 벤처창업 활성화 및 스케일업 중점 지원

#### ❶ 모험자본, 창업공간 등 혁신창업 지원 대폭 강화

- 민간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전면 개편

- ▶ (확인주체) 공공기관 주도(기보, 중진공 등) → **민간 벤처전문가**(벤처확인위원회)
- ▶ (확인유형) ① 보증·대출 유형 폐지 → **혁신성장성 평가 유형 신설**  
② 벤처확인 투자자 범위 확대 (액셀러레이터, 클라우드펀드 등)  
③ 연구개발조직 인정 범위 확대(연구개발전담부서,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등)

- 4차 산업혁명의 기반 마련을 위해 BIG 3 분야 잠재력 있는 유망기업 250개\*를 선정하여 전주기 맞춤형 지원(사업화, R&D, 투·융자 등)

\* 시스템반도체(50), 바이오헬스(100), 미래차(100) 분야 250개 스타트업·벤처기업

- ① 기술창업 촉진, ② 민·관 협력기반 강화, ③ 해외진출 지원 강화 방향으로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전면 개정

- 혁신·창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강화

- ▶ 혁신적 기술·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·컨설팅·교육 등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 확대

\* 지원대상을 청년 → 중장년 포함 전연령층으로 확대('20년 1,114억원)

- ▶ 민·관 협력으로 기술창업기업의 R&D와 사업화를 연계 지원하는 **TIPS(250→300개)** 및 **Post-TIPS(20→40개)** 프로그램 대폭 확대

- ▶ '20년 **혁신창업펀드**를 **0.7조원 추가 조성**하여 **창업 초기기업** 등의 성장을 집중 지원

- ▶ 농식품 벤처·창업 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 지원한도 확대('19년 2천만원 → '20년 3천만원)

- ▶ 청년 창업환경 마련을 위한 **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**('20년 신규, 5개소)

\* 지역 유희공간 활용 공유주방 조성, 임차료·인테리어·컨설팅 등 1개소당 4억원 지원

-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에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고, 창업 및 자금사용 의무기한 확대  
(1년이내 창업·3년이내 자금사용 → 2년·4년)

- AI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, 사업화 및 벤처투자 지원

- ▶ AI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수요자 맞춤 방식(바우처, 1억원)으로 사업화 자금 제공
- ▶ 부처 간 협업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단계별 창업지원 추진
  - \* 창업교육(교육부) → R&D 지원(과기부) → 창업사업화 지원(중기부)
  - \*\* 지원규모(개사) : ('20) 50 → ('21) 75 → ('22) 100
- ▶ AI 밋업\*(AI 스타트업과 AI 전문가 등이 기술·노하우 교류) 정기개최 및 AI 올림픽 최초 개최(‘20.10월)\*\* 등을 통해 기업투자 및 네트워크 확대 지원
  - \* ('19) 2회(5월, 6월) 개최 → ('20) 분야별 세분화하여 분기별로 개최
  - \*\* 로봇축구, AI 게임·바둑 등 경진대회 및 제품 전시, IR 등
- ▶ AI 분야 전문 투자 펀드 조성을 촉진하고, 투자설명회(IR) 및 1:1 상담회 등을 통해 AI분야 창업·벤처기업 투자유치 확대

-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·운영하고, 창업 중소·벤처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 추가\*

- ▶ (현행) 31개 업종 창업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·법인세 감면(50~100%)  
→ (개선) 「전자금융거래법」상 전자금융업자 등도 포함

## ② '22년까지 유니콘 기업\* 20개 창출을 목표로 스케일업 중점 지원

\* '19.12.18일 기준, 11개

- 일반펀드가 벤처펀드 출자시, 출자자수 산정 규제 완화

- ▶ (현행) 자본시장법상 조합형태의 펀드에 한해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0% 미만 출자시 펀드가입자 전체를 1인으로 인정  
(개선) 자본시장법상 모든 형태의 펀드(신탁형, 회사형)로 확대

- 창업·벤처기업의 자금조달·사업화·판로개척 등 지원 강화

- ▶ '20년 3.2조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(정부 0.4조원 출자)를 조성하여 성장단계 기업에 대규모 자금 공급
- ▶ '20년 2,000억원 규모 '예비유니콘 기업 특별보증'(기보) 및 1,000억원 규모 '혁신아이콘 기업 지원 프로그램'(신보)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자금 공급
- ▶ 예비유니콘의 新시장개척 전략수립·실행 지원(40개社, 총 120억원)
- ▶ 도약단계(창업 3~7년차)의 매출증대 및 성장촉진을 위한 제품 및 사업모델 개선 등의 사업화 비용 지원 확대(350 → 750개사, 1,275억원)
- ▶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64개소 추가('19년 128 → '20년 192개소) 및 스타트업 파크 2개소 추가 선정, Front 1(마포) 개소

▪ **M&A 활성화 등을 통해 회수·재투자 촉진**

- ▶ '20년 **0.4조원** 규모의 **M&A전용 펀드**를 조성하여 **유망기술을 보유한 벤처·창업 기업의 인수·합병 지원**
- ▶ **성장(스케일업)에 필요한 투자 활성화**를 위해 **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**
  - \* 경영권 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**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주주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 허용**
- ▶ **공모·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(BDC)를 도입**하여 **벤처캐피탈 등의 초기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 여건 조성**

▪ **벤처펀드의 결성·운용상 자율성·유연성 확대**

- ▶ **벤처펀드 조성시 모태펀드의 의무출자 규정 전면 폐지**
  - \* (현행) 벤처펀드의 40%이상 창업벤처기업 투자시에만 모태펀드 출자없이 벤처투자조합 결성 가능 (개선) 모태펀드의 출자 없이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
- ▶ **벤처투자조합의 중견기업 투자 및 해외투자 허용기준 완화**
  - \* (현행) 벤처투자제도가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창업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되어 각각 다른 규제 적용 (한국벤처투자조합은 중견기업 투자 불가능, 창업투자조합은 해외투자 한도 규정)
  - (개선) 이원화된 투자조합을 '벤처투자조합'으로 일원화하고 완화된 규제 적용 (창업·벤처기업 등 의무투자 충족시 중견기업 투자허용, 해외투자 한도 완화 등)
- ▶ **모태펀드의 농림수산물투자조합 출자 허용**

## ② 혁신창업 기업의 판로 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

### ① 공공서비스 향상 및 기술혁신을 위한 혁신조달 인프라 구축

▪ **혁신조달에 대한 정부·공공기관의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도입 추진**

- ▶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('19.11 ~ '20.2)을 통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고, '20년중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, '21년 이후 구매목표제 본격 시행

▪ **다양한 공공서비스 혁신수요발굴 및 혁신제품 선정을 위해 “공공수요발굴위원회”의 조속한 출범 및 운영체계 구축**

- ▶ (현행) 기존 상용품의 판로지원 위주의 혁신조달  
→ (개선) **수요맞춤 기술혁신 촉진 및 공공서비스 향상에 중점**

▪ **하나의 쇼핑몰에서 수요-공급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, 매칭·구매까지 지원토록 혁신조달플랫폼 구축·운영('20.上)**

- ▶ (현행) 혁신제품 현황 및 공공수요에 대한 정보 비공유  
→ (개선) 혁신조달플랫폼을 통해 공공의 수요와 업체의 혁신제품 매칭 촉진
- \* 수요 기관이 필요한 스펙과 원하는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적시 제시, 혁신기업은 이에 맞춰 제품 공급

## ② 혁신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및 스케일업 지원 확대 · 강화

- 해외 엑셀러레이팅 사업\* 고도화 및 KSC 거점 연계를 통한 해외진출 스타트업의 현지 생태계 정착 및 스케일업 지원

\* ('19년) 6개국 60개사 단기보육 → ('20년) KSC 2개 추가 개소 및 글로벌청년 창업사관학교 1개 신설을 통해 8개국 170개사 보육·네트워크·투자연계 및 현지 생태계 정착

- 해외거점을 중심으로 공간제공·네트워크 연계·투자연결·마케팅 등 유관기관 스타트업 해외지원사업의 소주기 패키지화

\* KSC(5개 거점), 창업특화BI(4개소), 창업거점 무역관(20개소) 등의 연계활용을 통한 인큐베이팅, VC매칭, 대기업 수요연계 등 지원('19년 200개사 → '20년 500개사)

## ③ 재도전 용원 통한 실패경험 자산화

### ① 재창업 기업의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

- ▶ 민간기관 투자연계 사업화 지원 확대 : ('19년) 8개사 → ('20년) 16개사
- ▶ 초기 자금조달, 시장검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 추진
- ▶ 예비·초기 재창업자 전용 평가매뉴얼을 고도화하여 우수 재창업자 발굴·지원 : (현행) 기술사업성평가 → (개선) 역량평가 + 심의위원회

### ② 법인형태의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위해 법인사업자 연대보증 채무\*를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후 채무조정·상환유예

\* 법인사업자 연대보증인 2.8만명의 연대보증채무 5.4조원 대상

### ③ 연체 휴·폐업자에 대한 「자영업자<sup>123</sup> 재기 지원프로그램」을 통해 채무조정, 재기자금 지원,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('19.11월~)

- ▶ 채무조정: (현행) 채무조정 이후 최대 8년간 분할상환 허용  
→ (개선) 초기 2년간 상환유예 허용, 이후 최대 10년간 분할상환
- ▶ 자금지원: (현행) 연체채무자의 경우 재창업자금 지원 제한(채무조정 후 9개월 성실상환시 지원)  
→ (개선) 채무조정 확정 즉시 질적심사를 거쳐 재창업자금 지원(50억원)
- ▶ 컨설팅: (현행) 재창업자금 지원이 확정된 자영업자가 희망할 경우 컨설팅 제공  
→ (개선) 재창업자금 신청시 사전컨설팅 실시 및 대출 심사시 컨설팅 결과 참고

#### ④ 폐업희망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 마련('20.3월)

- ▶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(소진공)등을 활용해 정부·공공·민간기관의 재기지원 제도·사업을 일괄 안내·상담하는 플랫폼 구축('20.上)
  - \* 사업정리컨설팅, 점포철거, 신용회복, 교육훈련, 취업알선, 장려수당, 사회보험, 용자·보증 등
- ▶ 폐업·재기 과정의 각종 법률자문 지원 확대 : '19년 480건 → '20년 3,000건
  - \* 권리금·보증금 보호, 채무·신용 관리, 세금정산, 종업원 퇴사·임금정산, 미수금 지급 등
- ▶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이 낮은 재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공급규모 확대
  - \* (대상)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, (대출기간) 8년, (금리) 4.0%, (대출한도) 1억원

#### ⑤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·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·분할납부 허용

- ▶ **적용대상:** ①'19.12.31일 이전 최종 폐업 + ②'20.1.1일~'22.12.31일 기간 중 재기 + ③**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** + ④**기존 소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자**
- ▶ **특례내용:**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간 체납국세 분할 납부 허용
- ▶ **신청기간:** '20.1.1일 ~ '23.12.31일까지

### (5) 혁신금융 역할 강화

#### ① 여신심사시스템 선진화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

- ①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하고, 여신심사시스템을 미래성장성, 기술력 중심으로 전면 혁신
- 일괄담보제도 도입, 인센티브 제공, 회수지원기구 설립 등을 통해 동산담보대출 공급규모를 3조원 수준('20년말 잔액, IP포함)까지 확대

- ▶ **(일괄담보제도)** 기업이 다양한 동산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**동산담보의 활용도\***를 제고
  - \* 동산자산 간 시너지 효과(예: 지식재산권이 체화된 제조기계) 등을 통해 담보가치가 제고되고, 개별취급에 비해 담보의 취득·평가·실행 절차도 용이해지는 효과
- ▶ **(인센티브)** 은행권기술금융 평가(TECH 평가)에 동산담보대출 실적을 반영 하거나 온렌딩 공급시 차등적용하는 방안 검토
- ▶ **(회수지원기구)** 금융회사가 동산담보 회수단계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완화 시키기 위해 **동산담보물이나 부실동산담보대출채권을 매입**해주는 기구 신설
  - \* 필요한 재원은 '20년 예산을 통해 既 확보 (400억원)
- ▶ **(동산담보 제도개선)** 장기 동산담보대출을 위한 **담보권 존속기한(5년) 폐지, 이용자 범위 확대**(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도 허용) 등 추진



- 기술-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('20년~)
- \* 통합여신모형 도입을 계기로 근본적인 여신시스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
①기업여신프로세스, ②기술평가체계 및 ③TECH 평가체계를 개편

## ②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

- 사모펀드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 지속 추진
- \*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, 현행 PEF를 기관만이 투자할 수 있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하여 규제·감독 완화 등
- 자산유동화 제도 전면개편을 통한 자금조달 용이성 제고
- \* (예시) 기업 신용등급 제한(BB등급 이상) 폐지, 매출채권·회사채 유동화 활성화, 장래자산·무체재산권의 유동화기회 확대 등
- 벤처·중소기업 투자시 자본규제(NCR) 완화, 중소기업 범위에서 SPC 대출 제외 등을 통해 초대형 IB 등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

- ▶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 적용(최대 32%만 차감) 등
- ▶ 중소·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주식 집중위험액 가산을 조정
  - \* (현행) 특정기업 주식 5% 초과보유시 위험액 산정시 50~200%의 개별위험액 가산 (개선) 중소·벤처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 집중위험액 가산 부담 경감
- ▶ 경영참여형 사모펀드(PEF)의 운용사(GP)로 참여시 위험액 산정기준 개정
  - \* (현행) PEF 전체자산에 대해 위험액 산정 (개선) PEF 전체자산 중 유한책임투자자(LP) 출자분은 제외하고 위험액 산정
- ▶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중소기업 범위(중소기업 대출 규모 산정)에서 특수목적회사(SPC) 및 부동산업과 관련된 법인을 제외(자본시장법 개정)

## ③ 은행권의 투자 및 기업대출 기능 강화

-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\*을 통한 핀테크 출자 활성화
- \*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기존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승인절차의 신속성(30일 이내 회신 원칙)을 제고
- 신예대출\*,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\*\* 등을 통해 현재 가계 부문 위주로 운영중인 은행권 자금을 기업으로 유도
- \* 예대출 산정시 기업대출 취급이 유리하도록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가중치를 차등화
- \*\* 은행별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

④ 「혁신금융 민관합동TF\*」를 활용하여 주기적인 성과점검 및 현장의견 수렴 추진

\* 혁신금융 비전('19.3월)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금융위, 금감원, 정책금융 기관, 은행연합회, 금융투자협회, 5대금융지주,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

- 여신심사시스템, 모험자본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

② 혁신분야에 정책금융 공급 확대 및 금융세제 개선 추진

① 정책금융을 최대 479조원까지 확대('19년 대비 +43.3조원)하여 중소·중견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

\* 산은, 기은, 수은, 중진공, 신보, 무보, 지신보, 기보 등

-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년대비 20조원 이상 확대하고, 성장·수출 등 관련 지원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

\* (중소·중견기업) ('19년) 265조원 → ('20년) 285조원(+20조원)

- ▶ **고성장 촉진자금**: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3년~10년 미만 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 등 지원 ('20년 3,000억원 신설, 중진공)
- ▶ **중소·중견기업 전용 수출계약 특별보증**: 유망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 재무상황이 아닌 수출계약 내용 및 이행능력 위주로 심사해 보증지원 ('19년 500→2,000억원 확대, 무보)
- ▶ **중소·중견기업 수출관련 해외온렌딩**: 중소·중견기업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수은이 시중은행 등을 통해 지원 ('19년 2.7→3.3조원 확대, 수은)

- 혁신기술을 응용한 첨단 혁신성장분야(첨단제조·신소재·바이오·콘텐츠 등)에 6조원 이상 확대 지원하고 민간매칭으로 혁신분야 투자펀드 조성

\* 혁신성장 분야(개편기준): ('19년) 39.6조원 → ('20년) 45.6조원(+6조원)

\* 혁신성장분야: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의 "혁신성장 공동기준"에 근거한 첨단 제조, 자동화, 정보통신, 센서 등 9개 분야 300개 품목 등

- ▶ **미래기술 육성자금**: 미래신기술 분야 및 8대 핵심선도사업 등을 영위 중인 3년~10년 미만 중소벤처기업 시설 및 운전자금 등 지원('20년 3,000억원 신설 중진공)
- ▶ **우수기술사업화자금**: 대학, 연구소의 이공계교수, 연구원 등의 기술혁신창업 지원 ('19년 2,040 → 2,300억원 확대, 기보)
- ▶ **4차산업혁명 지원프로그램**: 4차산업혁명 연관사업 및 D.NA+BIG3 분야 기업 등에 대해 보증비율, 보증료 우대지원 ('19년 7,200 → 8,000억원 확대, 기보)
- ▶ **투자펀드**: 한국 성장금융과 민간기업, 은행권 등이 연계하여 핀테크, 시스템반도체, 제조업 혁신 등에 투자하는 총 3개 약 4,000억원 규모의 펀드조성 추진('20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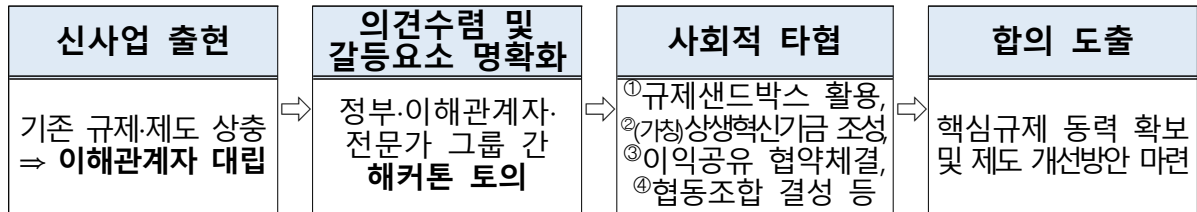
②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\* 마련('20.上)

\* 주식,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검토

**(1)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****① 신사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‘(가칭)한걸음 모델\*’ 구축**

\* ‘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우리 사회가 큰 한 걸음 전진한다’는 의미

## &lt; ‘한걸음 모델’ 프로세스 &gt;

**① (규제 선정) 신시장 확대·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핵심규제\* 혁신에 역량 집중**

\* 예시: 공유경제(공유숙박, 공유주방), 보건의료(첨단재생의료 활용도 제고), 산림휴양 활성화 등

**② (의견수렴) 규제 특성에 따라 해커톤·국민참여 등 맞춤형 사회적 대화 채널\* 구축·활용**

\* 예시: ① 찬반 이해관계자 특정 용이, 전문성이 높아 일반국민 이해도·관심도가 낮은 과제  
→ 해커톤방식: 이해관계자·전문가 등과의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안 도출

② 이해관계자간 토론 곤란(관계자 불참 등), 일반국민 이해도·관심도가 높은 과제  
→ 국민참여방식: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사 확인 후 개선방안 마련

**③ (사회적 타협) 사안에 따라 ‘(가칭)상생혁신기금\*’, 이익공유 협약 체결, 협동조합 결성, 규제샌드박스 등 협의수단 선택적 활용**

\* 혁신적 사업모델 운영 시 기업·소비자·정부 등이 일정액을 출연하는 기금

\*\* ①단계적 해결, ②기대이익의 합리적 배분, ③객관적 성과평가에 기반한 제도 정비 등  
3대 원칙하에서 ‘한걸음 모델’ 운영 추진

- ‘20년 상반기중 이해조정을 위한 핵심 원칙·아젠다를 제시하고 사회적 타협의 계기를 신속히 형성
- 사회적 합의 도출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‘(가칭) 사회적 상생혁신 기금’ 조성 방안 검토

## &lt; 사회적 타협방안 예시 &gt;

- ▶ 플랫폼택시 :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사회적 기여금 납부 → 별도 관리기구에서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,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
- ▶ 산림관광 : 개발이익의 일부를 활용하여 해당지역 환경 보전 등에 활용

## ②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시스템의 질적 업그레이드

### ① 산업적 파급력, 국민체감도가 큰 사례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가속화하여 '20년중 적용사례 200건 이상 추가창출

-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, 적극행정 수단으로 신속확인 활용도 제고, 유사·동일 신청건 신속처리 가속화

\* 기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새로운 내용의 사업 포함

- 신청기업 편의성·접근성 제고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민간 접수 기관 신설

### ②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 자금·세제·특허·공공조달·컨설팅 등 사업화 쏠단계 밀착지원 강화(기업 성장프로그램 도입)

- ▶ (비용) 실증특례비(최대 1.2억원)와 책임 보험료(최대 1,500만원) 지원
- ▶ (자금) 규제자유특구, 규제샌드박스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추진  
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 자금 융자, 승인사업 제조·판매·제공 위한 사업재편시 기활법에 따라 우대금리
- ▶ (보증) 기술보증기금이 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으로 운전·시설자금의 최대 95%, 요율 최대 0.5%p 감면, 20억원 한도 보증 지원
- ▶ (세제) 규제자유특구내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
- ▶ (특허) 규제샌드박스 신청승인 기업 특허출원 우선심사, 특허분쟁 신속심판 처리
- ▶ (사후관리) 지속적인 사후관리시스템 구축

### ③ 규제샌드박스의 지속적 내실화 추진

- 규제샌드박스 시행 1주년 계기로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여 「규제 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」 마련(20.1월)

- ▶ 특례 종료 후 법령개정 지연에 따른 사업자 불안 해소와 중단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실행력 있는 대책 마련

\* ① 임시허가: 임시허가 종료 후에도 법령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가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(산업융합, 규제특구는 시행중, ICT융합 분야 임시허가 자동연장 규정 신설 추진)

② 실증특례: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특례가 종료된 후 법령 개정 시까지는 '임시허가'로 전환 검토

-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 중이라도 국민 호응도가 높고, 안전성 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선제적 법령정비 추진

- ▶ (실증특례) 특례기간 종료전(2년+2년)이라도 안전성 검증(최소 6개월)되면 즉시 법령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
- ▶ (임시허가) 임시허가 제품의 기술·인증기준 개발과 특례 제품의 성능 안전성 개선 지원을 통해 조기 시장출시 지원

-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시스템을 보다 많은 국민·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'규제혁신 성과 사례집' 제작·배포('20.5월)

\* 실생활 적용사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제작

#### ④ 지역의 혁신 파급력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하고, 특구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

- 사전 컨설팅 강화, 지역별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특구사업 발굴 및 추가 지정 추진

\* 유관사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특구 간 연계·협력 모델도 검토

- 혁신기업 참여 제고를 위해 특구사업자 인정대상\* 확대 검토

\* (기존)규제특례 적용 당사자 → (확대)핵심 기술·부품 제공 기업

-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R&D·사업화·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('19년 306억원 → '20년 1,103억원)

#### 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및 규제입증책임제 확대

- '先허용-後규제'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제 등으로 확대

- 국민생활·경제활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 등으로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시행

\* (현행) 행정규칙 1,800여개 대상 → (개선)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도 포함

### ③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뒷받침하는 규제개선

#### ①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5개 영역\*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제로베이스 검토 추진

\* 예시: 바이오헬스, 금융, 공유경제, 신산업, 관광 영역 등

#### ②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외환서비스 촉진을 위해 샌드박스를 통해 부여한 규제 특례\*를 외국환거래법령 상 제도화

\* 예: ①은행에서 환전 신청 후 은행에서만 수령 → 주차장·식음료매장 등에서 수령 허용

②소액송금업체는 다른 업체의 송금 중개 불가 → 소액송금업체의 중개업 허용

- 은행연, 핀테크 협회 등 이해관계자 및 금감원 등 감독기관 건의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\* 적극 추진

\* 예) 온라인·무인환전점업자 환전한도 상향(1→2천불)

#### ③ ICT, 가상·증강현실(VR·AR)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정비

##### ▶ VR 시뮬레이터 설치 등 기준 완화('20.3월)

\* 도심설치시 탑승기준 확대(5→6인), 안전성검사 대상 VR시뮬레이터 허용대상 확대(위락 시설만 허용→운동시설도 포함)

##### ▶ 플랫폼별 게임등급 중복심의 개선('20.1월)

\*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시 별도 심의 없이 기존 등급 유지  
다만, 아케이드 게임 등은 다른 게임과 등급분류 체계 및 등급분류 절차가 달라 제외

##### ▶ 복합장르 게임등급심의 수수료 기준 마련('20.10월)

#### ④ 에너지·로봇·드론 등 유망 신산업, 자동차·조선 등 주력 제조업, 소재·부품산업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활용 확산

\* 각 부처별 미래 성장동력 산업 중 규제샌드박스 적용 분야 및 기업 발굴, 규제 샌드박스 참여 지원

- '20년 전략투자 분야인 혁신 인프라(DNA) 및 3대 신산업(BIG3) 중심\*으로 신산업 현장애로 발굴·개선

\* DNA(빅데이터·네트워크(5G)·AI), BIG3(시스템반도체·바이오헬스·미래차)

## [2] 생산성 및 잠재성장을 제고

### ① 생산성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반 강화

#### 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\* 제시

\* 주요내용: ①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, ②인적자본 투자와 일하는 방식 혁신  
③지식·정보 투자 다변화 및 혁신 생태계 육성, ④경제 및 사회시스템 혁신

- 관계부처 TF, 중장기전략위 민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, 중장기전략위(부총리·민간위원장 주재) 논의를 거쳐 발표('20.上)

#### ② '20년중 생산성혁신을 위한 기본 인프라 집중 확충

- 생산성의 원천인 지식재산(IP)의 거래시장 활성화 추진

▶ 공급자-수요자간 매칭 지원을 위해 기관별 기술거래 플랫폼을 연계한 지식재산 거래시장 구축 추진\*

\* 기보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(테크브릿지) 개선('20.10월)을 통해 수요·공급기술(IP) 매칭, 중개, 기술금융, 기술보호, 후속 R&D를 연계 지원

▶ 민간 중개기관의 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형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시범 운영('20년)

\* 직접지원 대신 거래 중개료의 대부분(70~80%)을 민간기관의 수익으로 지급하여 민간 중개기관의 자립 능력을 양성

▶ 공공 중개기관의 경험·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거래수요·공급기술발굴 및 거래 후속지원 제공\*

\* 민간 중개기관의 거래건수 증가 및 거래품질 관리를 통해, 기술거래 시장에서의 민간 중개기관 신뢰성·수익성 제고

- 스마트공장 확산 기반 마련

▶ 데이터 유출 등 보안 위협에 대응하여 스마트공장 기술보호 가이드라인\* 개발·배포('20년 개발 → '21년 배포)

\* 기술보호 범위 정립, 사전예방·침해대응 방법, 기술 단계별 보호방안 등

▶ 제조 데이터 센터,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등 스마트공장 데이터 가치 사슬 전 주기에 대한 산·학·연·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

\* 'AI·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'를 통해 데이터의 유통·거래·활용 제도 및 서비스 모델 발굴 추진

### ② 경제활동인구 총량유지 위한 고령자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등 추진

#### 【 고령자 】

#### ① 기업의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

- 기업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방안 마련('20.上 연구용역 추진)

\* 새로운 재정지원 방식, 업종별 다양한 임금체계 등



-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급, 세제감면, 판로개척 등 지원을 확대하여 고령자 고용 촉진

#### 【 장려금 지원 확대·신설 】

- ▶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급액 확대(분기당 27→30만원)
- ▶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(월 30만원)
- ▶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- \* 현재 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근로계약이 2년 초과시에만 지원(연 360~720만원)

#### 【 세제감면 】

- ▶ 고령자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
(현행 기업규모별 0~700만원 → 개선 400~1,200만원)

#### 【 판로개척 지원 】

- ▶ 일정 수준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고용환경을 개선(예: 작업환경 개선, 직무 재설계, 재교육 등)한 기업을 선정하여 우선구매 지원\*
- \* 공공기관 우선구매 : 고령자고용우수기업 생산품을 0.5% 이상 구매

- 노인일자리 사업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개선

- ▶ 노인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회서비스형·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영상 애로 완화
  - \*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상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인의 사업참여 배제 사유 구체화 (예: 폭언·폭행, 질병·부상 등)
- ▶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민간기업의 제휴사업 지원
  - \* 제휴사업 통해 고령자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“일자리창출유공 포상자”로 선정하여 포상 수여
- ▶ 시장형사업단\*이 협동조합 등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수 자립지원기관(시니어클럽, 노인회 등)에 대한 인센티브\*\* 강화
  - \*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
  - \*\* 예: 사업성과 평가시 고령자친화기업, 협동조합 전환실적이 높은 기관에 가점 부여, 노인인력 개발원 신사업 개발시 시장형사업단→고령자친화기업 전환 우수 실적 지원기관 우대

## ②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 개선

- 고령층 근로유인 강화 위해 근로소득 등 소득발생시 국민연금(노령연금)이 감액되는 제도 개선 검토
  - \*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, 추가기금 소요 등을 종합분석하여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기준이 되는 초과소득 구간, 감액비율 등 조정방안 검토(국민연금연구원)
- ‘워크넷’ 테마별 채용관\*에 고령자 우대 채용관을 신설하여 고령자가 손쉽게 구인기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
  - \* 현재 공공부문 채용관, 청년친화강소기업관, 장애인고용우수기업관 등 운영중

### ③ 중장기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해 임금·고용체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대

- \* 개별기업 및 주요국의 임금·고용체계 개편 사례 분석, 직업훈련·컨설팅 등 고령자 생산성 제고·재취업 제도 등 연구용역 실시

## 【 여성 】

### ① 육아휴직 활용여건 개선 등을 통한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

-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('20.2월 시행 예정) 및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도 개선\*

\* (현행) 급여의 25%를 복직 6개월 후 지급

→ (개선)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 지급

-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사후지급방식 개선(사용기간 중 50% 지급, '20.上 시행예정)
-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확대('19년 월 60만원→ '20년 월 80만원)
- '경력이음 사례관리서비스' 인력(10→20명) 및 창업 지원인력(30→40명) 확충하고, 새일센터 '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' 확대(35→60개소)

### ② 양질의 보육·돌봄시설 확충, 보육서비스 질 향상 등을 통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지속 조성

## 【 외국인력 】

### ① 우수 외국인력 유치에 위한 비자제도 개선

- 우수인재 선별 유치 및 우대를 위해 별도의 점수제 체류 자격을 신설하여 차등화된 혜택 부여

\* (현행) 교수, 연구 등 직종 중심의 비자체계

→ (개선) 직종 무관, 연령, 학력 등 인적자원 요소를 점수화한 비자 도입

- 창업비자(D-8-4) 취득 요건에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창업우수 인재에 대한 비자취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

▶ (현행) ①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천한 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 
②창업지원프로그램에서 일정 점수 이상 득점자

→(개선) 정부 선발 해외 우수인재가 법인 설립 시 곧바로 창업비자 부여  
(예: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K-Startup 그랜드챌린지 사업 입상자)

-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활동 허용 등 유학-취·창업 연계 강화

▶ (현행) 외국인 유학생(D-2)은 단순노무 시간제 外 취업활동 불가  
→ (개선)일학습 연계 유학(D-2-7)에 대해 재학기간중 전문직종 인턴 허용(최대 6개월)

## ② 우리나라에서 축적된 인적역량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성실재입국 제도 개선 및 숙련 외국인력의 전문인력 전환 확대

- 성실재입국 대상 외국인을 숙련인력 중심으로 선발하고, 재입국 제한 기간을 단축

▶ (현행)동일 사업장 4년 10개월 근속, 3개월 출국 후 재입국  
→ (개선) 동일업종직종 근속기간, 훈련이수 등 점수화하여 선발,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

-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장기체류자격(E-7-4) 전환 시 인력부족 분야,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을 중심으로 선발

\* 전환 대상 외국인 선발 점수제 적용 시 인력부족 분야, 훈련이수, 자격증, 동일업종 근속기간 등에 대한 가점 확대

### [3]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자원 확보

#### ① 혁신을 촉발하는 핵심기술 개발 및 생산적 R&D 생태계 조성

##### ①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D.N.A + BIG3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 추진

- ▶ 차세대 AI: 포스트 딥러닝 기술선점을 위한 차세대 AI 개발사업 예타 추진('20년)
- ▶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: AI반도체, 미래차 등 신시장 선점을 위한 Next-Generation 반도체 개발('20~'29년 1조원) 추진('20년 891억원)
- ▶ 자율주행차: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 R&D 예타 추진('20.上)
- ▶ 바이오헬스: AI 기반 맞춤형 정밀의료 기술개발(신규 7.5억원)
- ▶ 수소산업 쏠주기 기술: 수소의 생산-저장-운송-활용 밸류체인 전반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속 지원('20년, 579억원)

##### ② 미래 유망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&D 지원 등 강화

- 신약, 재생의료 등 미래유망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확대\* 및 감염병, 치매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연구개발\*\* 지원 강화

\* (신약) 전주기(후보물질~사업화) 통합지원, (재생의료) 원천기술 및 치료제·치료기술개발

\*\* (감염병) 총 6,240억원 예타('20 신규), (치매) 총 1,987억원 예타('20 신규)

※ 신약, 재생의료 등 범부처 대형 예타를 차질없이 기획·추진

- 미래사회의 산업·안전을 위한 장기시계 R&D 투자 확대 병행
  - \* (예) 방사광 가속기 시설 확충, 핵융합 및 양자 컴퓨팅 연구 지원 강화 등
- 연구중심병원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R&D 지원 확대
  - \* ('19) 9개 병원 14개 연구유닛(341억) → ('20) 17개 연구유닛(372억)
- 자율드론·선박 등 무인이동체 공통원천기술 개발\* 및 공공혁신조달과 연계
  - \* '20년중 공통원천기술 단계적 개발 및 기술실증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
- 유효성 높은 의료기기의 상업적 개발 촉진을 위해 혁신의료 기기 지정('20.5.) 도입

### ③ 실패 부담 없이 고위험·혁신적 R&D를 중·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

- ▶ 혁신도전 프로젝트 : 고위험·혁신형 연구를 위한 한국형 DARPA\* 도입 ('20년 신규, 52억원)
  - \* DARPA(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, 美국방고등연구계획국): 독립적 PM으로 중심으로 실패를 용인하는 과감한 연구를 지원하여 인터넷, 스텔스 등 혁신적 기술 개발
- ▶ G-First(Global First-mover): 세계 최초·최고의 기술 개발 추진('20년 신규, 150억원)
- ▶ 과학난제 도전융합R&D: 연구자 주도로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연구('20년 신규, 25억원)

### ④ 신기술·제품개발 기업의 신속한 인증 확보를 지원하고, 전문인력 양성, 인증 프로세스 개발 등 시험인증산업 활성화

- ▶ 규제 샌드박스 허가기간중예라도 해당 품목의 기술기준을 조기 개발·확정하여 신속한 상용화 지원('20년 15건)
- ▶ 국내인증만으로도 수출국 인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하여 신제품을 신속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상호인정협정 유지 추진
  - \* 한국인정기구(KOLAS)의 국제기구 동등성 평가 수검 대응('20.6월) 등
- ▶ 시험인증분야 발굴('20년 5건), 기초인력 양성 등 시험인증산업 기반 강화

### ⑤ 「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」을 수립('20.1월)하여 미래변화에 영향을 미칠 아이템 발굴\* 및 중장기 육성 위한 법제도 기반\*\* 정비

- \* 민간 주도의 성장동력 발굴 TF를 구성하여 전문가기획 및 공모방식으로 발굴
- \*\* R&D 투자 연계 강화, 선제적 규제 혁신, 인력 양성, 성장동력 추진체계 강화 등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법체계(과기기본법 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) 구축

## 2 DNA+BIG3 등 첨단분야를 선도하는 혁신인재 육성

### 1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핵심 전문인력 20만명 양성('20~'23)

-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인재 양성을 위해 'AI 대학원' 확대  
\* ('19년) 5개(KAIST, 고려대, 성균관대, 포항공대, 광주과학기술원) → ('20년) 3개대 추가(누적 8개)
- 지역 중소·벤처기업 종사자 및 예비창업자 대상 AI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AI 실무교육 지역거점(ICT이노베이션스퀘어\*) 추가 조성  
\* '19년 수도권 → '20년 4대 권역으로 확대(광주전라제주, 대전충청, 부산울산경남, 대구경북강원)
-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을 운영(40개)하고, 지역·소득별 SW 교육기회 격차 완화를 위한 SW미래채움센터 확대(5→10개)
- 우수 이공계대학원 중심 신진 박사급 연구인재 양성\* 및 산학연 주도 해외 우수 신진연구자 유치 지원  
\* KURI 연구단(박사 후 연구원) 시범선정(4개 내외), 차세대(석·박사·한정맞춤형학사) 인력 양성 확대  
\*\* 출연(연), 과기원, 재외과협 등을 통한 500명 유치 추진(향후 5년간 3,000명)
- 혁신적 S/W 인재육성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\*하고 독자적인 AI 기반 신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\*\* 검토('20년~)  
\* '19.12.20일 개소, 선발 인원 확대('19년 250명 → '20년 500명)  
\*\* (현행) 佛 Ecole42 교육컨텐츠 활용 → (향후) AI 융복합 교육프로그램 추가

### 2 미래사회에 대응한 초·중·고 교육혁신

- 전국 초·중·고등학교에 Wi-Fi망을 설치(학교당 최소 4교실)하여 ICT 기반 교육(디지털 교과서, SW 교육 등) 접근성 강화  
\* (현행) 전국 초중학교 설치(~'21년) → (개선) 초중 '20년 조기완료, 고교 구축 추진('20년)
- 진로·적성에 따라 학생주도로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 
\* ('20) 마이스터고 도입 → ('22) 일반고 제도도입, 특성화고 도입 → ('25) 일반고 전면 실시
- 초·중학교 SW교육 필수화 및 융합(STEAM) 교육을 통해 창의력·문제해결력 등 핵심역량 교육 강화

- ▶ SW교육 필수화 완성 ('19년 초5·6 및 중1·2 → '20년 중3까지 확대 운영)
- ▶ STEAM교육 현장 확산 지원(국립초교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 확대)

### ③ 대학의 혁신적 연구역량 기반 강화

#### ▪ 대학의 혁신적 연구역량 제고 및 융·복합 교육 활성화

- ▶ 「4단계 BK21사업」(20.9월)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및 석박사급 인재양성
- ▶ 유망·신산업 분야 융합 및 첨단학과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
  - 계열간 융합학과 신설 요건 완화 및 3·4학년 융합학과 신설 근거 마련
  - 대학별 1·2학년 중도이탈 결원을 활용한 첨단학과 신설 허용 등

#### ▪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「중장기 발전계획」에 따라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 확대

- ▶ (Ⅰ, Ⅱ유형) 대학의 비전·여건에 맞는 자율혁신을 위해 일반재정지원을 통한 기본역량 제고 및 정원 감축·특성화 지원
- ▶ (Ⅲ 유형) 지역대학·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·추진(Bottom-up)할 수 있도록 지원(20년 신설)

#### ▪ 대학 연구자의 효과적 교육·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전자저널 구독지원 사업(대학라이선스) 확대

- ▶ (현행) 일반 학술DB 28종 지원  
→ (개선) 일반 학술DB 38종 지원 + 연구활용도 높은 핵심저널 추가지원

### ③ 새로운 형태의 노동, 직무변화에 대한 안전망 강화

####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호 강화

#### ▪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\*

\* ('20년) 방문서비스 종사자, 화물차주 ('21년) 돌봄서비스 종사자, IT업종 등 검토

#### ▪ 저소득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과 사업주에 대해 한시적인 산재보험료 경감 추진

- ▶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한시적 산재보험료 경감
  - 지원대상 : 산재보험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재적용을 신청하는 고위험 저소득 직종(퀵서비스, 택배기사 등)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
  - 지원수준 : 1년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80~100%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60~80% 경감

#### ② 공정계약관행 형성을 위해 직종별 표준계약서\* 도입·보완 및 확산

\* 퀵서비스·대리운전기사, 대출·신용카드회원모집인, SW개발자, 웹툰작가 등



### ③ 지속적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학습기반 확충

- 평생학습을 위한 온라인 강좌 콘텐츠 개발 확대

- ▶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 강좌 확충('19년 누적 650→'20년 800개)
- ▶ 산업맞춤 단기직무인증과정 매치업(Match業) 프로그램 확대('19년 누적 22→'20년 30개)

- 개인이 평생학습(학력·자격 취득 등)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계좌 자동연계 사항 확대 등 편리성 개선

- ▶ (현행) 초·중·고 학력, 학점은행제 학위 등 자동 연계(18개 기관 보유 정보)  
→ (개선) 국가기술자격(기술사, 산업기사 등) 등 자격증 취득 이력까지 확대

- 저소득층·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

- ▶ 저소득층 평생교육바우처 지원확대 ('19년 5,000명→'20년 8,000명)
- ▶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설 ('20년 5개)

## [4] 분야별 구조혁신(노동·재정·공공기관·디지털 정부)

### ①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고용친화적 노동혁신

#### ❶ 고용안정성 강화 노력을 지속

-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,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
-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, 지급기간 연장 등 보장성 강화('19.10월~)
  - \* 지급액: (임금노동자) 평균임금의 50→60% (자영업자) 기준보수의 50→60%
  - 지급기간: (임금노동자) 90~240일→120~270일 (자영업자) 90~180일→120~210일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호 강화(직종 확대, 보험료 한시 경감) 및 플랫폼노동·프리랜서 등 비전형근로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
- 고용·산업 현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훈련 강화
- 실업자·재직자로 분리되어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「국민내일배움카드」로 통합·운영하여 효율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('20.1월~)

- ▶ (현행) 실업자·재직자를 구분하여 1년/3년간 200~300만원 지원  
→ (개선)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5년간 300~500만원 지원



- 산업계·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 실시

- ▶ 미래 유망분야 맞춤형훈련 신설(1,800명, 대기업 인프라 활용해 협약기업 맞춤형훈련 제공)
- ▶ 국가기간·전략산업 직종훈련 확대(우수훈련기관 등 선별해 기업맞춤형 훈련 설계·운영)
- ▶ 산업계(ISC 등) 수요를 직접 반영한 청년 맞춤형 훈련 신설(3,000명)

- 기관·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교육·훈련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적 관점에서 재정비 추진

- ▶ 사업 취지·지원 대상·지원 내용이 중복되는 사업 통폐합 추진
- ▶ 부처별 산재된 유사한 사업들 간 전달체계 일원화 추진

②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임금·근로시간 등 제도 합리화

▪ 직무·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속 추진

- 연공급제에서 직무·능력 중심 임금체제로 개편을 위한 점진적 방안\* 검토 및 사회적 대화(경사노위 등)를 통한 공감대 확산

\* (예) 직무평가 등을 통한 연공급제 완화, 생산성 향상과 임금 연계 등

-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을 지원 (30→70개 기관)하고, 선도기관에는 인센티브 강화

- 민간기업 직무·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, 시장임금 정보 제공, 직무평가 도구 개발 등 인프라 확대

- ▶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을 신규 지원\*하고,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대상 직무·능력 중심 임금체계 도입 지원

\* 보건의료, IT 등 직무평가도구가 개발된 8개 업종중 직무 중심 임금체계 희망 기업을 대상(업종별 2~3개)으로 6개월간 전문 컨설팅 지원('20년 4억원)

- ▶ 시장임금정보 확충을 위해 임금직무 정보시스템을 지속 개선\*하고, 산업·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직무평가도구 지속 개발·보급

\* 기업규모·산업 및 직종·경력 등에 따른 다양한 시장임금 정보(임금통계) 분석·제공 등

## ▪ 주 52시간제 연착륙 지원

- 50~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,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잠정적 보완방안 마련

- ▶ 50~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 부여
- ▶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

(현행) 자연재해,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」 재난, 재해·재난에 준하는 사고

(개선) ①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

②시설·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·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

③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,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

④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 추가

\* ③, ④ 사유에 대해서는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지도

- ▶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·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(2년) 상향\* 및 동포 허용업종 확대(산지농산물유통센터, 식육운송업 등)

\*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의 외국인력 총 고용허용한도(E-9비자)를 20% 상향하고, 5~299인 제조업 사업장은 내국인 신규채용인원만큼 외국인력 신규 고용한도 추가(총 고용한도 內)

## - 근로시간 단축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·신설

- ▶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·노무비 지원, 기존 재직자에 대한 생산성 향상 지원 등 강화

\*일자리함께하기 지원: ('19)347억원, 1.0만명 → ('20)661억원, 1.4만명

\*일-생활균형 인프라 지원: ('19)7억원, 35개소 → ('20)7억원, 50개소

\*노동시간단축 정착 지원: ('20, 신규)46억원, 500개소

\*일터혁신 지원: ('19)219억원, 2,090건 → ('20)236억원, 2,200건

\*장시간근로 개선 지원: ('19)10억원, 1,146개소 → ('20)24억원, 2,658개소

- ▶ 지방노동관서별 「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」을 통해 1:1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\* 지원

\* 근무체계 개편 지원, 신규채용 인건비 등 정부지원 연계, 채용 지원 등

- ▶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업종별 지원방안 마련·추진

\* (제조)노동시간 단축 추진기업 정책자금·기술보증 우대, 스마트공장 등 최우선 지원,  
(건설)공기산정기준 법제화 및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 개편,  
(IT·SW)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SW개발사업 조기발주 추진 및 SW표준계약서 개선·보급 등

## - 탄력근로제 등 주 52시간제 보완입법 지속 추진('20년)

## ② 지속가능한 재정의 역할을 위한 재정혁신

### ① 수요기반·성과중심 재정운용 등을 통한 지출구조 효율화

- 분야별 재정수요 전망 등에 기초하여 지출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, 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

\* '20년 초부터 민관합동 TF(총괄반+12대분야별 작업반) 구성·운영

-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제도 대폭 개편

▶ 성과계획서·보고서, 자율평가 등 재정평가제도의 대상·주기 조정 등으로 실효성은 강화하고 부담은 완화

▶ 성과DB 및 One-Stop 성과포털 구축을 통해 성과관리 내실화 추진

- 연계적 이월·불용, 관행적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 타당성·성과 등을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

▶ 집행부진 사업 : 체계적 원인진단을 통한 집행 개선방안 마련과 적정수준 예산 조정

▶ 민간보조 사업 : 민간 전문가 TF를 구성, 객관적 실태조사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저조·목적달성 사업 통폐합

-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분야\*의 경우, 유기적 편성·집행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융합·협업 예산 편성

\* 예: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지원, 벤처·창업 지원, 산업단지 지원, ODA 등

### ② 재정 전주기에 걸친 철저한 관리로 누수·낭비 적극 방지

-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및 신고 활성화

▶ 부정수급 점검 : (현행) 부처·사업별 자율·정기점검 → (개선)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위험사업에 대해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 실시

▶ 신고포상금 강화 : (현행) 부정수급 환수액의 30% 이내, 최대 2억원 한도 내 지급 → (개선) 원칙적으로 환수액의 30% 지급, 상한액 폐지

▶ 특별사법경찰 도입 : 기초생활급여, 장애인지원, 고용안정사업, 직불금 사업에 도입

## ▪ 부정수급자 처벌·제재 강화 및 사전예방 인프라 정비

- ▶ 지급 배제 : (현행)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수령자를 1~5년간 보조사업에서 배제  
→ (개선) **부정수급 공모 계약업체 추가, 5년간 지급배제**
- ▶ 시스템 고도화 : 미자격자에 대한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해 **통합수급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및 부정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**
- ▶ 고발·수사의뢰 : (현행) 부처 자율 → (개선) **고의·거짓으로 부정수급한 혐의 확인시 부처가 의무적으로 고발·수사의뢰**

## ▪ 일자리사업의 고용창출, 고용안정성 제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일몰제\*, 최소성과기준 도입\*\*

- \* 직접일자리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D등급 사업을 일몰검토 대상사업으로 선정, '20~'21년 동안 개선여부 모니터링 후 일몰여부 결정
- \*\* 직접일자리사업 주요 공통지표(취약계층 참여비율, 반복참여율)에 대해 최소기준 ('18~'19년 성과 평균의 90%)을 설정, 미달시 구조개선계획 제출 의무화

## ③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다각화

### ▪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및 재정지표 개선

- ▶ 미래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향후 재정여력 점검을 위한 **장기재정전망 실시**
- ▶ **우리 재정여건에 맞는 재정준칙\* 도입 필요성 검토**  
\* 국가채무, 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량적 제한
- ▶ 실제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정확한 채무 수준 산정을 위한 **순채무 지표 도입 검토**

### ▪ 재정투명성 확보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국민참여예산 운영 내실화

- ▶ **온·오프라인 토론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\* 활성화\*\***  
\* 국민들이 예산사업 제안에만 그치지 않고, 집중토론, 상시 피드백 등을 통해 해결방안 마련 과정에도 적극 참여('19년 3개 이슈에 대해 시범운영)  
\*\* 이슈 선정단계에서 국민참여, 소관부처·시민단체 온·오프라인 토론 참여 등
- ▶ **예산사업 제안자 등이 참여하는 집행현장 모니터링\* 실시**  
\* (현행)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추진 현황, 집행액 등 집행정보 공개  
→ (개선) 사업집행 단계에서 제안자·참여단으로 구성된 국민들이 직접 참여, 제도개선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점검 활동('19년 6개 사업에 대해 시범운영)

### ▪ 국유재산 가치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

- ▶ 국유재산특례지출의 총량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 수요를 사전 취합·심사(각부처 요청시 → 연 1~2회 일괄 심사)하고, 실효성이 낮은 기존 특례는 일몰
- ▶ 비상장주식 물납불허 요건 구체화\*로 부적합 물납을 사전 차단하고, 물납법인에 대한 컨설팅 등 맞춤형 연계지원으로 기업가치 제고 및 매각 수입 증대  
\* (현행) 상장폐지 → (개선) 발행법인 폐업, 결손금 발생, 회계감사 "의견거절", 해산사유 발생 등

### ③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

#### ①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을 통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

##### ▪ (상생·혁신)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

- ① 임금피크제 우수인력을 활용한 (가칭) 「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」을 통해 창업·중소기업 매칭·재취업유도(‘20.1/4분기)

\* Sherpa: 고산 등반을 돕는 전문 길잡이 / 중소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인력에 비유

- ▶ 해외진출·R&D 등의 전문성 있는 임피제 대상(희망자)을 중소기업에 매칭→임시취업
- ▶ 임시취업된 임피제 대상자는 4개월간 매칭 중소기업에 적응·근무 후 정식고용(재취업) 여부 결정 (중소기업이 고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복귀 → Re매칭)

- ②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\*을 반기별로 마련, 공공기관 규제정보 공개·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활력 제고

\* 중기 옴부즈만·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공공기관 내부규제 발굴개선

- ③ 중소기업 신기술의 상품화 지원을 위해 「SOC 통합 기술마켓」 참여기관 확대 및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

- ▶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완성기술 심사·평가에 출연연 참여(‘19.4/4)
- ▶ 통합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후 개선방안 마련(‘20.上)

- ④ 공공기관 경영평가·혁신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기관별 중소·창업기업 및 경제활력 제고노력\*에 대해 적극 평가

\* 규제개선·기업민원인 보호·SOC공공기관 기술통합마켓 활용실적 등

##### ▪ (안전)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 등을 통한 안전경영 정착

- ▶ 국가안전대진단 및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\*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, 개별 공공기관에 안전등급(5등급) 부여·공개

\* 국가안전대진단(매년 2월~4월, 행안부), 수준평가(매년 1월~3월, 고용부)

- ▶ 최고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, 최하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 및 안전수준 향상 의무 부과

\* ① 최고등급 기관 → 안전계획 실적 점검 및 안전조치 보고 의무 한시 면제 등

② 최하등급 기관 → 취약분야 안전투자 추가 확대,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간 확대, 전문기관 안전컨설팅 의무화 조치 등

▪ (공정) 공정 계약관행 정착, 공정인사 강화 등으로 공정문화 확산 선도

▶ 발주기관·업계 등이 참여하는 「불공정계약 개선 TF」를 구성('20.上)하여,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제약하는 제도 및 계약조건 발굴·개선

\* 예 : ①계약상대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·경영개입 사례 개선, ②계약금액 증액없는 과업 추가 방지, ③협상에 의한 계약의 과도한 저가낙찰 방지 등

▶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정성 제고방안\* 마련('20.下)

\* 예 : ①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범위(현행 1/2 범위내 감경) 확대,  
②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면 도입 등

▶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시행('20.5월)

▶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모범거래모델을 공유하는 「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」('20.上)을 통해 공공기관과 소비자 임차인·협력업체간 거래에서 불공정관행 개선, 거래상대방 권익 제고

▶ 친인척 면접관 제척·기피 제도 의무화, 불공정채용 적발시 채용취소 등 채용비리 방지 장치 강화(경영지침 개정, '19.12)

▶ 「법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」('19.9)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균형인사 노력 강화(경영지침 및 평가편람 개정, '19.12)

\* 저소득층, 북한이탈주민, 중증장애인 등의 공공기관 인력활용 확대,  
기관장 성과협약시 균형인사 노력 규정 추가

② 효율성·생산성 중심으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전면 개편

▪ (조직) 자율정원조정제도 조기종료 등 무분별한 인력증원 및 공공기관 비대화 방지를 위한 인력운영 제도 개선

① 주무부처 협의만으로 증원이 결정되는 자율정원조정제도 조기종료

② 주무부처의 기타공공기관 증원시 기재부 협의 의무화

▪ (재무) 공공기관 재무위험 조기경보시스템(EWS) 도입

▶ 주요 재무지표에 따라 위험기관을 선정하고 집중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는 「재무위험 조기경보시스템(EWS)」운영

\*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을 부채비율 등을 고려한 3단계 유형(Green(적정), Yellow(유의), Red(중점))으로 분류하여 집중관리

▶ 재무관리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확대(공운법 개정)

\* (현행)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·준정부기관  
→ (개선) 공기업의 경우 전체 공기업으로 확대 검토

▪ (보수·인사) “일 중심”의 보수·인사체계 구축

- ▶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직무분석 확대(30→70개 기관) 및 선도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- ▶ 공공기관 업무성과 우수자를 위한 특별승진제도\* 활성화
  - \* 공정한 절차하에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기준(경력·근속연수 등)과 차별되게 운영
- ▶ 업무성과와 무관한 과도한 사내복지 방지를 위해 기관별 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엄격한 점검 시스템\* 구축
  - \* 全 공공기관 복리후생 항목 분기 점검(경영평가 반영) + 부처합동 인사감사시 복리후생 중점 적발

#### 4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정부 혁신

- ①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 진단(20)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고, 이를 토대로 「중장기 디지털 전환 로드맵」 수립(‘20.下)
- ② 「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」(‘19.10월)의 속도감 있는 이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조기 창출
  - 국고보조금 맞춤형 안내서비스 시범실시(국고보조금 서비스 전수조사 →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서비스 개시(‘20.12월))
    - \* ‘20년 국고보조금 서비스 → ‘21년 순지방비 서비스 → ‘22년 민간단체·공공기관 서비스
  - 스마트폰으로 발급이 가능한 전자증명서를 ‘21년 300종까지 확대\*
    - \* (현행) 2종(주민등록등·초본) → (‘20년) 100종(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) → (‘21년) 300종(인감증명서 등 추가)
  - 생애주기 서비스 2종 시범 개시(든든임신 4월, 온종일돌봄 6월) 및 범정부 차원의 10대 생애주기 서비스 기본계획 수립(‘20.7월)
  -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(‘20) 및 은행 앱을 통한 카드·대출 정보유통 시 ‘꾸러미 데이터\*’ 서비스 개시(‘20.7월)
    - \* 증명서 단위 유통 →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활용분야별 꾸러미 단위로 선별제공
- ③ 파급효과가 큰 8대 공통 플랫폼 과제\*는 긴밀한 민관협업을 통해 기획·개발·구축·운영 등 개방형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
  - ‘디지털 정부 해외진출전략’을 수립(‘20.8월)하여 국내 전문기업의 8대 공통 플랫폼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적극 지원
    - \* 모바일 신분증, 통합 로그인, 디지털 고지·수납,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, 전자증명서,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포털, 지능형 국민비서,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



## (1) 수요자·사회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

### ①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

#### ❶ 생애주기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

- (청년: 10~30대)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, 청년-中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3대 핵심사업 지속 추진

##### 【 고졸취업 활성화 】

- ▶ 공공부문(공무원, 공공기관) 고졸채용 확대
- ▶ 선취업·후학습 경로 구축: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확대(300→400만원),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('19년 9,000→'20년 11,200명)

##### 【 청년 일자리 3대 핵심사업 】

- ▶ 청년추가고용장려금: '19년 20만명 → '20년 29만명, 최소고용유지기간 설정 등
- ▶ 청년내일채움공제: '19년 25만명 → '20년 34.2만명, 임금상한 조정(월 500→350만원) 등
- ▶ 청년구직활동지원금: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('20.下~)하고 고용서비스 내실화

- (중년: 40대)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통한 취업지원 및 기업의 40대 고용인센티브를 확대하고, 40대 창업활성화 촉진

##### 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】

- ▶ 중장년층 모집실적이 우수한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선정심사시 가점 부여
- ▶ 폴리텍내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 대상 특화 훈련 기회 확대
- ▶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훈련기관 선정시, 40대 선발 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
- ▶ 고용센터내 40대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신설
- ▶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내 중장년 전담 컨설턴트를 확대하고, 제조업 생산직 및 서비스직 종사자 맞춤형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확대
- ▶ 새일센터내 30·40대 분야별 경력자 특화과정 신설 및 새일여성인턴 시간제 고용조건 완화

##### 【 고용·근로 인센티브 확대 】

- ▶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취업성공패키지Ⅱ 중장년층(35~69세) 반영·확대
- ▶ 지자체 주민 교양 강좌 등에 40대 대학강사 참여 기회 확대

##### 【 창업역량 강화 】

- ▶ 40대 창업기업에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(세무·회계 등 연 100만원 '20년 시범사업)
- ▶ 40대 항공분야 예비창업자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(KAC 청년창업 육성센터)
- ▶ 퇴직한 40·50대 대상 '전직창업농 과정 운영(1,600명)
- ▶ 40대 퇴직자 대상 기술창업 지원 및 창업생태계 활동 참여 지원

- ※ 40대 고용 실태에 대한 현장중심의 종합 분석을 통해 40대 고용대책 마련('20.1/4)

- (신중년: 50~60대) 지역중심의 일자리 창출 확대,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

- ▶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: '19년 2.5천명 → '20년 5천명
- ▶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: '19년 5천명 → '20년 6천명
- ▶ 전문 노하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 전문인력 400명의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
- ▶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도입('20.5월)

- (노인: 60대 이상) 노인일자리 확대(61→74만개) 등을 통해 사회참여 활성화 및 소득기반 강화·근로기회 확대
- (여성) 육아휴직 활성화, 온종일 돌봄, 어린이집 확충,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
- (장애인, 산업재해 근로자) 노동시장 참여·복귀 지원을 강화하여 '일하는 복지'를 통한 자립 지원('20년~)

#### [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연령대별 지원방안]

- ▶ 15~29세 :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확대(13→19개, 15개 시도 별 1개/서울경기: 2개),
- ▶ 30~49세 :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(3천→5천명) 및 지원대상 확대(발달장애,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·여성장애인 단가 인상(30~60만원→30~80만원))
- ▶ 50세~ : 장년장애인 인턴제 신설(200명)

#### [산업재해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 지원]

- ▶ 사업주에 대한 '직장복귀지원금' 지원수준 상향(月30~60만원→月45~80만원)
- ▶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에 대한 임금 지원범위 확대(20인→50인 미만 사업장)

## ② 일자리가 감소하는 연초 동절기 중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

- ▶ 연초부터 고용이 가능하도록 '19년말에 채용공고 등 사전 준비 철저
- ▶ 1,500명이상 채용하는 주요 직접일자리 사업 '20.1/4분기내 조기채용 개시

## ③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강화

-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\*을 확대하고 지역의 관광지·산림 자원을 활용한 주민사업체 창업·발굴 확대

\*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지역에서 취업·창업하도록 일자리·직무교육 제공(2년간), 창업 컨설팅, 사업화자금 등 지원(사업기간내 해당지역 주민등록 유지 필요)

- 장애인·고령자 등 사회적약자의 농업활동을 돕는 사회적농업 확산을 위해 교육·네트워크의 중심인 거점농장 지정(4개소)·지원\*

\* 교육장 설치, 전문인력 인건비,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등 1개소당 2억원 지원

#### ④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, 인맥 등에 근거한 채용관행 해소 위해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\*

\*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센터(건설근로자 공제회 등)의 매칭알선 기능 강화 등

## ②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돌봄 경제 육성

### ① 돌봄·건강 등 다원화되는 수요에 대응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돌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 마련 추진

- '20년중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9.5만개\* 확충

\* '17~'18년 +5.5만명, '19년 +9.5만명 → '20년도 +9.5만명

- 범부처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신규 사업\*을 기획·발굴하여 '22년까지 34만명+a 확충 추진

\* 생활안전, 환경, 문화·스포츠, 노인생활, 아동·청소년 등 국민 관심분야 전반으로 확대

-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·관리 시스템 구축

▶ AI·IoT·로봇 등 시범사업지역\* 위주로 신규 돌봄기술 습득 지원

\* '20년 돌봄로봇 실증시설 지역 및 스마트홈 시범사업 지역

▶ 서비스 질 제고 및 다양한 서비스 개발 위해 사회서비스 자격승급 또는 경력인정제 도입 검토

\*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(보건복지인력개발원)

▶ 통합사례관리, 복지·기술 융합 등 신규 필요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기관\* 지정·운영 추진('20년 모형 개발→'21년 이후 지정 검토)

\* 연합대학원 대학교, 보건복지 융복합 특성화대학원 등

### ②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신규 돌봄서비스 발굴 및 보건-복지, 주거-돌봄 등 융합 서비스 맞춤형 제공

- 건강관리·요양·돌봄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마련('20.下)

- 돌봄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시장수요와 호응도가 높은 돌봄 기기 및 서비스 시범사업을 사회보험·의료급여 대상에 포함

▶ 돌봄기기: (배회감지기)치매노인만 지급→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확대 (실내용 경사로)실외용 경사로만 제공 → 실내용 경사로 포함

▶ 시범사업: 방문형보건의료 서비스, 퇴원 및 병원이동 지원, 재가의료급여 등 포함

-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건강관리-요양서비스 연계 모델 개발 및 주거·이동지원 등 신규 서비스\* 시범 제공·확산

\* 선도사업 지역에서 예방적 정기 방문관리(preventive service) 실시,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Barrier Free 주택개조 모형 개발 및 맞춤형 영양식 제공 등

-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노인·장애인 등의 독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 R&D 확대

\*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개발 R&D('19년, 82억) →('20년, 91억)

### ③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가정 내 안전한 생활을 위해 생활 SOC 등 통합 돌봄 인프라 조성

- 지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\* 설립·운영 확대, 통합돌봄센터\*\* 등 돌봄 인프라 확충

\* '19년 75 → '20년 100 → '22년 250개소

\*\* 건강생활지원센터, 종합사회복지관 등 돌봄 기반시설의 복합화 유도

- 노인·장애인의 낙상 방지 등을 위한 집수리 사업(안전손잡이, 문턱제거 등) 확대\*\* 추진

\* 노인 낙상으로 인한 진료인원, 진료비 : 271만명, 1.3조원(건강보험+의료급여)

\*\* 현재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(집수리 재원 '20년 60억원)

- 노인·장애인 등 독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홈 보급 시범사업 및 지원대상 확대\*

\* ①AI스피커 및 IoT설치(음성 가전, 조명제어, 응급 알림서비스 제공 등) +

②주택개조(욕실안전바, 미끄럼방지 등) 패키지 지원

### ④ 돌봄로봇, 보조기기 개발·실증 투자 확대 등을 통한 돌봄기술 육성

- 노인·장애인의 신체활동과 간호·간병인의 업무 지원 용도의 돌봄로봇 개발 지원 및 보급사업 확대('19년 260대 → '20년 800대)

- 요양시설 등과의 협력을 통한 돌봄로봇 실증·중개를 통해 로봇 시스템 개선 및 보급 확산에 활용('20년)

\* 노인요양시설(5개소), 재가서비스 요양기관(3개소)에서 실증 실시('20년, 22억원)

- 노인·장애인 등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보조기기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R&D 지원 강화('20년)

\* '20년 정부예산안에 보조기기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 48억원 신규 반영  
→ 품목에 대한 수요, 사업성 등 고려, 전략품목 및 정책품목으로 나누어 개발 지원

## **(2) 포용 사각지대 지속적 해소**

### **① 노인빈곤 해소 및 소득 1분위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**

#### **❶ 기초연금, 노인일자리 등 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빈곤 해소**

- **소득하위 40%까지 기초연금\* 인상(월 25→30만원)**
  - \* 기초연금액 인상(25만원→30만원) 일정  
: (소득하위 20%) '19.4월 → (소득하위 40%) '20년 → (소득하위 70%) '21년
- **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연장(9개월→평균 11개월\*)을 통해 사업 참여의 지속성을 높이고 소득공백 기간 최소화**
  - \* 사업 유형(실내·실외)에 따라 10개월~12개월 운영

#### **❷ 1분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·소득 지원 강화**

- **저소득층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**

- ▶ 기초생보 소득인정액 계산시 근로연령층(25~64세)에 대한 근로소득 30% 공제
- ▶ 저소득층\*에 대한 근로장려금(EITC) 최소지급액 인상(3→10만원)
  - \* (단독가구)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, (홀벌이) 700만원 미만, (맞벌이) 800만원 미만
- ▶ 근로빈곤층의 자활유인 강화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급여 인상
  - \* 자활급여 최고 5% 인상 : ('19) 53,427원/일 → ('20안) 56,109원/일

- **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확대**

- ▶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

\*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·고재산인 경우에는 기준 계속 적용

- ▶ 가구소득 증가를 감안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

< 가구원수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(월소득 기준, 만원) >

구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'19년	51.2	87.2	112.8	138.4	164.0	189.6	215.2
'20년	52.7	89.8	116.1	142.5	168.8	195.2	221.7

▪ 저소득층 청년 자립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

▶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소득요건 대폭 완화\*('19.11월~)

\* (현행) 기준중위소득 20%~30% → (개선) 중위소득 30% 이하 소득있는 청년

▶ 차상위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시행

③ 한부모가족에 대한 일자리·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자립 촉진

▪ 한부모 가구도 양부모 가구와 동일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 인상\*

▶ 현행: <양부모> (~3개월)통상임금 80(월150만원限)/100%(두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, 월250만원限), (~종료일)50%(월120만원 限)

<한부모> (~3개월)통상임금 80%(월 150만원 限), (~종료일) 50%(월 120만원 限)

→ 개선: <한부모> (~3개월) 100%(월 250만원 限), (4~6개월) 80%(월 150만원 限), (7개월~종료일) 50%(월120만원 限)

▪ 한부모가족에 대한 긴급 돌봄, 무료 법률구조 등 지원 강화

▶ 긴급 돌봄 등 지원 강화를 위해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확대\*

\* 사업 운영기관 확대 : ('19년) 70개소 → ('20년) 79개소

지원대상 확대 추진 : (현행) 중위소득 72% 이하 가구 → (개선)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

▶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확대 추진(중위소득 60% 이하 → 중위소득 125% 이하)

▶ 한부모가족에 대한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확대

\* (현행) 양육비이행관리원(서울) 1개소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

→ (개선) 양육비이행관리원 외에 4대 권역(수도권, 충청권, 경상권, 전라권)에서도 서비스 지원

④ 장애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 인상(25→30만원) 대상을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(13.7→15.3만명)

\*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(25만원→30만원) 일정

: (생계의료급여) '19년 → (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) '20.1월 → (소득하위 70%) '21년

②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제도 효율화 추진

①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

▪ 중위소득의 50%(18~34세는 120%)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

- 중위소득의 100%(18~34세는 소득무관) 이하 구직자에게 진로상담, 직업훈련, 창업지원, 구직활동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
**<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별 지원사항 >**

대 상	지 원 사 항
중위소득 50% 이하 구직자 18~34세의 경우, 중위소득 120% 이하 구직자	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(최대 6개월)
중위소득 100% 이하 구직자 18~34세의 경우, 소득무관	취업지원 서비스 (진로상담, 직업훈련, 구직활동지원 등)

**②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,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개별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4대보험 부과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**

\* (예) 연구용역을 거쳐 보험별 상이한 기준 정비, 국세청과 정보 연계강화 등

- 사회보험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 가입자 자격기준 정비\*

\* ('19.9~'20.3월) 연구용역 → (~'20.6월) 정부안 마련 → ('20.7월~) 입법 추진

**③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행정부담 완화**

▶ (현행) 보수총액신고(~3.10)→건보료 부과(4월)→국세청 소득자료 연계하여 조정(5~6월)  
→ (개선) 건보료 부과(4월)→국세청 소득자료 연계하여 조정(5~6월) (보수총액신고 절차 삭제)

**(3) 서민·자영업자 지원 강화**

**① 서민 실질소득 확충을 위한 필수 생계비 적극 경감**

**①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통신료 부담 완화**

-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

▶ 이동통신사 5G 중저가요금제 출시 유도  
▶ 통신 3사 알뜰폰 5G 출시('20.上), 통신망 임차료(도매대가) 인하 및 소비자 선호 정액요금제 제공('20.下) 등 알뜰폰 경쟁력 제고



## ② 야간·휴일 진료 활성화,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통해 의료비 경감

- 소아의료기관의 야간·휴일 진료 활성화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불편해소 및 경증 소아환자 비용 부담 완화

▶ 달빛어린이병원 '지정제→신고제'로 전환 및 병원간 연계운영 등 요건완화 검토  
▶ 소아 특화 진료가 가능한 기관을 "소아진료 응급실"로 지정·운영 방안마련

-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관련업계(보험업·의료업 등) 의견 신속 조율 및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 제·개정 추진

▶ (현행) 병원비 수납→병원 증명서 발급→환자가 보험사에 직접 서류 전송→보험금 지급  
→ (개선) 병원비 수납+병원에 보험금 청구서류 전송 요청→병원이 서류 전자송부→보험금 지급

## ③ 고교무상교육 및 근로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교육비 경감

- 교육 기본권 실현,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 구조 개선 및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\* 시행

\* ('19년 2학기) 고 3학년 시행 중 ('20년) 고 2·3학년 시행 ('21년) 전학년 시행

-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대입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1:1 맞춤형 온라인 대입 상담 등 대입정보포털(www.adiga.kr) 기능 강화

\* 1:1 맞춤형 온라인 상담을 위해 대입 상담교사단(진로진학 교사 중심 250여명) 및 대입 전공멘토단(대학생 400여명) 구축·운영

- EBS 고교 강의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고, 온라인학습 종합 지원 등 학습·입시 정보 영상(50여편) 제공

-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확대 및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

▶ 근로장학금 시급단가 인상(교내 8,350 → 9,000원, 교외 10,500 → 11,150원) 및 교외 근로장학생 지원인원 확대('19년 4.6→'20년 4.9만명)  
▶ 전문기술인재장학금(우수장학금) 신설(1,000명)  
▶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('19년 2.2%→'20년 2.0%)

## ④ 공공임대주택 운영 효율화, 전세반환보증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강화

-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임대주택 관리 효율화(공가율 감소 등)

\* 관련 법령 개정 및 선도단지 사업 승인('20년)

- 서민 전세보증금 반환리스크 완화를 위하여 HUG의 전세 보증보험 공급규모를 추가 확대('19년 30조원)
  -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금융공사의 '전세대출보증+ 전세금반환보증' 결합상품 신규 출시('20.6월)
- ⑤ 민생 밀접품목인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채소가격 안정제와 지자체 수급조절기능을 확대·강화하고, 관측 시스템 고도화
- (관측) 재배의향조사 표본확대 등 예측 정확성 제고 및 재배 실측 조사, 소비패턴 조사를 통한 관측 시스템 고도화
  - (기반구축) 의무자조금단체 육성, 지자체의 사전 수급조절 기능(평가 및 지원) 강화 방안 마련('20.6월), 채소가격안정제 약정물량 확대(10→15%)
- ⑥ 사회보험료·신문구독료·도서민 운임 등에 대한 지원 강화
-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('19년말→'20년말)
  -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·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(공제율 30%, '21.1.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)
  -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구간 운임을 70% 할인하여 1,245개의 운임이 3천원 미만이 되도록 개선(1천원미만 545개, 1천~3천원 미만 700개)

## ②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 역할 강화

### ①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

-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대출이 불가피한 저소득,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<sup>17</sup> 공급규모 확대('19년 4천억원 → '20년 5천억원)
- 미취업 청년·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햇살론<sup>youth</sup> 출시('20년 1천억원)

#### < 햇살론<sup>17</sup> 및 햇살론<sup>youth</sup> 개요 >

	햇살론 <sup>17</sup>	햇살론 <sup>youth</sup> (案)
지원대상	저신용·저소득자	미취업 청년·대학생 등
금리	연간 17.9%	연간 3~4%
한도	700만원(최대 1,400만원)	연 600만원(최대 1,200만원)
상환·거치기간	최대 5년 (거치기간 없음)	최대 7년 (거치기간 최대 8년)

- 정책금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, 중신용자에 대해서는 시장을 통한 자금공급\*(중금리대출) 유도

\* '19년중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통해 7.6조원 공급

- ▶ 정책서민금융 : 햇살론17 공급확대 등을 통해 저신용자(7등급 이하)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, 중신용자는 민간시장으로 유도
- ▶ 중금리 :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를 통해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, 금융회사 자체 상품개발·신용평가역량 제고를 지원

-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복권기금 출연기간 5년 연장(~'20년 → ~'25년) 및 출연규모 확대\*

\* 연 1,750억원(5년 총 8,750억원) → 연 1,900억원(5년 총 9,500억원)

-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의무 출연 대상을 전금융권으로 확대하고, 출연규모도 확대하는 출연제도 도입 추진

\* (현행) 상호금융,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출연 → (개선) 전 금융권으로 확대

## ② 제도·관행 개선을 통한 금융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
- 금융소비자 보호 법적기반 구축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 권리 도입,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, 실효적 피해구제 등 추진

\*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정 및 제정 시 하위규정 마련

- ▶ 위법계약 해지권, 청약철회권, 자료제출요구권 등 새로운 소비자 권리 신설
- ▶ 징벌적 과징금 신설, 과태료 수준 상향조정 등 제재 강화
- ▶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,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회피방지 등 사후구제 실효성 제고
- ▶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·시행에 맞춰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융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운영 체계 정비

-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게 이해하고 분쟁 우려없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다각적으로 개선

\* '18년 기준, 금융권 전체 연간 분쟁민원 중 보험분야가 약 61.8%를 차지

- ▶ 기존 텍스트 중심의 약관을 인포그래픽·동영상(QR코드와 연계) 등으로 시각화
- ▶ 약관을 어렵게 하는 불필요한 특약 부가 제한(가입실적이 낮은 특약 부가 금지 등)
- ▶ 약관 이해도 평가 내실화(일반국민 참여 대폭 확대, 평가결과 인센티브 부여 등)

## ▪ 고령층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

### ▶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당국 점검 강화

\* (현행)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 중심으로 점검 → (개선) 실제 판매사항을 표본조사하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

### ▶ 고령금융소비자(기존중위소득 125% 限)와 금융회사간 불완전판매 관련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법적지원 강화

\*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, 소송대리 지원 등 무료법률구제 지원

## ▪ 과장·자극적 표현\* 금지, 소비자 부담사항(중도해지수수료, 원금 손실 등) 필수 전달, TV광고 규율 강화\*\* 등 금융광고 개선

\* 무한보장, 만능, 무차별, 누구나, 마지막 기회, 전액보장, 한방에, 100% 등

\*\* 생방송 허용범위 : (현행) 모든 보험상품 → (개선)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 (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글자크기, 말하는 속도 등도 규율)

## ▪ 해외직구 구매대행자가 소비자에게 세금을 받았으나 거짓 정보 등을 통해 이를 편취한 경우, 소비자 보호 강화\*(‘20.4.1일 시행)

\*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게 납세의무 부과 및 처벌

## ▪ 대출 등 금융거래 시 요구서류 일제 정비\* 및 금융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전자증명서 활용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서류 부담을 대폭 경감

\* (사례) 자동차할부금융 이용 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함에도 인감증명서 요구

\*\*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금융회사 확대 추진(※ 금융권 수요 +57개사, 44%↑)

## ③ 채무조정제도 강화를 통한 연체차주 신용회복 지원

### ▪ 연체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연체를 최소화하고, 연체발생時 신속하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지원

연체기간	채무조정
·연체전~연체 30일	·신속지원제도(긴급상환유예,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)
·연체 30~90일	·프리워크아웃(이자감면, 장기분할상환)
·연체 90일~채무상각前	·개인워크아웃(원금 최대 30% 감면 등)
·채무상각 이후	·개인워크아웃(원금 최대 70% 감면 등)

\* 상환불능 취약채무자는 채무원금은 최대 90% 감면, 3년 성실상환時 잔여채무 면제 등

### ▪ 대출계약 체결 후 연체채권 처리까지 대출의 모든 단계에서 채권자-채무자 권익에 대한 체계적인 소비자신용 규율 체계 마련

\* 금융회사의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및 연체채무자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「소비자신용법」 제정 추진

### ③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애로 해소 지원 강화

#### ① 온·오프라인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및 신규시장 진출 지원

##### ▪ 로컬크리에이터 등 문화·콘텐츠·디자인이 융합된 지역상권 육성

- ▶ 지역의 문화·유산·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**로컬크리에이터 신규 발굴·육성**(‘20년 140명, 44억원)
- ▶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쇼핑·커뮤니티·청년·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**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**(‘19년 누계 7곳 → ‘20년 누계 13곳)
- ▶ 소규모 골목상권(20개 이상 점포)에 대한 **커뮤니티 시설 조성, 골목길 디자인 개선** 등 활성화 지원 확대(‘19년 8곳 → ‘20년 10곳)

##### ▪ 전통시장 관광자원화 등 사람이 모이는 골목상권 조성

- ▶ 소상공인·전통시장 매출증대를 위한 **지역사랑상품권**(‘19년 2.3조원 → ‘20년 3조원) 및 **온누리상품권**(‘19년 2.2조원 → ‘20년 2.5조원) 발행 확대
- ▶ 전통시장 내 볼거리, 즐길거리를 확대하고, 지역 관광지,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 신규 개발(15곳)

##### ▪ 1인 미디어 플랫폼, 가치샵시다 TV 등을 활용한 우수제품 발굴·홍보 및 판로채널 입점 등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확대

- ▶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**전담셀러 매칭**(2,000개사), **상품성 개선**(400개사) 및 **교육·컨설팅**(5,000명) 지원
- ▶ 1인 크리에이터, 방송전문인력(PD, 편집) 등 **제품 홍보인력 양성**(‘19년 200명 → ‘20년 500명), 콘텐츠 제작 지원(‘19년 100개사 → ‘20년 1,000개사)
- ▶ TV홈쇼핑·T-커머스(‘19년 200개사 → ‘20년 300개사) / V-커머스(‘19년 200개사 → ‘20년 1,000개사) **입점비용·수수료 및 콘텐츠 제작** 지원
- ▶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**오픈 스튜디오**(‘20년 10회) 및 **가치샵시다 마켓**(특판전)으로 **O2O 판매지원**

#### ②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 대한 금융·세제 지원 확대

##### ▪ 소상공인·자영업자, 혁신창업 기업 등에 특별금리 대출 2.7조원 공급(기은, ‘19년 대비 +0.4조원)

##### ▪ 자영업자 여신·신용평가체계를 기술력·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개편\*

- \* (1단계 20년) 성장성 기술력 등을 감안한 전용대출 시범운영 → (2단계 22년) 성장성 기술력을 반영한 대출상품의 은행권 확대 → (3단계 25년) 자영업자 평가모형 개편

##### ▪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**특례보증 5조원 추가 공급**(25만명, ‘20년)

- \* 경제활력제고 특례보증, 위기지역지원 특례보증, 초저금리 협약보증 등
- \* 지역신보 보증규모(잔액기준) : (‘19년) 20.5조원 → (‘20년) 25.5조원

- 재해, 고용·산업위기 등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**융자자금 1.55조원 지원**(‘19년 대비 2,800억원 확대)

- 신사업 창업, 신기술 소공인 등 사업성 등이 우수한 **혁신 소상공인의 성장촉진**을 위한 **전용자금 700억원 신설**

\* 기준금리 + 0.2%p (일반 소상공인 정책자금보다 최대 0.4%p 인하)

-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‘플랫폼 매출망 금융’ 방안 마련·추진

▶ 은행 등 금융권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**성장성, 매출 데이터** 등을 기반으로 **소상공인 대출을 확대**할 수 있도록 **규제 개선**

▶ P2P 등 새로운 대출 플랫폼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손쉽게 **어음, 매출채권** 등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**인프라 정비**

\* 예: 온라인마켓 자영업자에 대한 매출채권 연계대출 활성화

-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소액채권\*** 기준금액 상향(20→30만원)

\*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

-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·공제한도 특례\***(‘19→’21년말) 및 **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\*\***(‘19→’20년말) 적용기한 연장

\* 연매출 4억원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(8/108 → 9/109) 및 모든 사업자에 대해 공제한도 +5%p 우대

\*\* 중고자동차 사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(공제율 10/110)

- 접대비 손금(필요경비) 산입 한도 확대**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**소비활성화**

\* 중소기업 기본한도: (현행) 2,400만원 → (개정) 3,600만원

\* 수입금액별 한도: (100억원 이하) 0.2→0.3% (100~500억원) 0.1→0.2%

-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**(소득금액 3→5천만원)

### ③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 소상공인 혁신기술 도입 지원

- IoT, VR·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업장 적용·도입 지원**

▶ 스마트오더, 스마트미러, 스마트맵 등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(17억원)

\* 스마트오더(1,000개) : 음식점 테이블에서 QR코드·태블릿 등을 이용하여 주문·결제  
스마트미러(50개) : 헤어·뷰티·의류 대상 이미지분석 및 가상 스타일링 제공  
스마트맵(4개) : 대형상점가 정보 안내 및 광고용 디지털 기기

▶ IoT, 모션픽처링 등 소상공인의 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생활혁신 기술개발 추진(35억원)

▶ 소공인의 스마트공장 도입에 필요한 성장촉진자금 신설·지원(1,000억원)



## ▪ 성공모델 확산을 통한 혁신 소상공인 발굴·육성

- ▶ 오랜 경험·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을 선정하는 백년가게를 확대하여 성공모델 확산 ('19년 300개 → '22년 1,000개)
- ▶ 보존가치 있는 기능·기술의 계승과 보호를 위해 명문소공인 지정 확대 ('19년 100개 → '20년 200개)

## [4] 공정경제 확산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

### ①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등을 위한 공정문화 확산

#### ①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거래관행 개선

- 중소기업 기술침해, 불공정 조정·중재를 위한 민관합동 '상생조정위원회' 운영

\* 민간 전문가 및 중기부, 공정위, 대검찰청, 경찰청, 특허청으로 구성

- 사전사업조정협의제를 도입\*하여 자율적인 사업조정 체계 구축 및 수·위탁 분쟁조정 제도개선\*\* 등 추진

\* 사전조정협의회(공무원·전문가 등 3~5인)에서 자율협의 절차 진행

\*\* '수·위탁 분쟁조정협의회'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(상생협력법 개정), 상습적인 위반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제한 확대

- 하위 협력사까지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

#### ▶ 하위 협력사에 대한 시스템 활용 항목 만점 기준 상향

\* (현행) 시스템을 통한  $\frac{1차사 \rightarrow 2차사 \text{ 지급 금액}}{\text{대기업} \rightarrow 1차사 \text{ 지급 금액}} \geq 1.7\%$  인 경우 만점  
→ (개선) 3년에 걸쳐 만점기준 상향 : ('19)1.7%→('20)4%→('21)7%→('22)10%

#### ▶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사용실적을 평가하는 업종 확대

\* (현행) 제조업 → (개선) 건설·정보서비스·통신업 추가

-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를 개선\*하고 중기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단체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행위 허용\*\*

\* 중기중앙회 조정협의권 부여, 조정신청 사유 확대 등 (하도급법 개정)

\*\* 가격인상 등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고시 또는 지침 제정



- 점주 단체활동 보복, 불합리한 계약갱신 거절(가맹), 판촉비 전가(유통), 밀어내기·판매목표 강제(대리점) 등 고질적 위반행위 엄중 제재
- **대·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보완하여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\* 개선\*\***
  - \* 공급원가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·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
  - \*\* 조정협의권자 확대(수급사업자·중기협동조합 → 중기중앙회 추가), 중기협동조합의 협의가능 원사업자 범위·협의요청 기간 확대 등
- **하도급·가맹·유통·대리점 등 취약 분야 공정거래협약\* 체결 및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업종 확대(6개→12개)**
  - \* 거래당사자(원-수급사업자, 가맹본부-가맹점, 유통-납품업자, 공급업자-대리점) 간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·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

## ②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근절 및 지배구조 개선 추진

- 상장회사의 **주주총회 내실화**, 기관투자자의 **적극적 주주권 행사** 지원, **지주회사 제도 보완**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
- 중견 기업집단의 **법 위반혐의 관련 모니터링**을 강화하고, **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제재**
- **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** 등을 통한 **금융그룹 감독체계 제도화**

▶ 「**금융그룹감독제도**」의 **법제화\*** 노력을 지속하고, 「**금융그룹감독 모범기준**」 개정 및 연장\*\*(20.7월, 1년)

- \* ① 원활한 국회 법안심사를 위한 입법지원,  
② 국민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(예: 카드뉴스, 칼럼기고) 등

\*\* '18.7월, 7개 금융그룹(삼성, 한화, 미래에셋, 교보, 현대차, DB, 롯데) 시범적용 대상 지정 → 연장시 감독대상 금융그룹 재지정 등 검토

▶ **그룹차원 위험의 관리**를 통한 **금융그룹의 건전성 제고**를 위해 **금융그룹 감독제도 보완·개편**

- \* 금융그룹 리스크 평가방안을 마련, 금융그룹 계열사 신용공여 현황 등 주요 위험요인 공시 추진

- 공정위-국세청 간 정보공유를 통해 사익편취행위·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

## ② 상생 협력기반 강화 및 상생 협력사례 창출·확산

### ① 대·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기반 강화

- “자상한 기업(자발적 상생협력 기업)”을 시리즈로 발굴·홍보  
(가치삽시다TV’ 유튜브 송출 등)
  - \* ‘19년 9개사 지정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 국민은행 우리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삼성전자 하나은행 철도시설공단
- 동반성장 평가대상 공공기관 확대\*하고, 대기업의 자율적 일감  
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·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준 개정
  - \* ‘19년 58개 → ‘20년 133개
- 모범사례가 될 공공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공공기관의 거래  
관행 개선을 촉진하고,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유도
- 지방공기업도 공정문화 확산에 동참하도록 평가기준에 반영하고,  
파급력이 큰 주요 지자체 공기업부터 모범사례 발굴
- 물류, SI, 광고대행, MRO 등 내부거래가 많은 분야에서 대  
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일감나누기 유도
  - \* 일감나누기 실적(계열사 거래의 비계열사 거래 전환 실적 등)을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 반영
- 동반성장위의 「혁신형 임금격차 해소운동」과 노사발전재단의  
「일터혁신 컨설팅」을 연계
  - \* 임금격차 해소운동 참여기업에 상생형 일터혁신 컨설팅 제공
- 대기업이 다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·  
출연 시 지원 확대(9.4 고용부·중기부·동반성장위 MOU 체결)

### ② 지역·업종 등 중범위 단위의 노사협력 적극 지원

-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지역·업종단위 노사협력 우수사례 창출
  - \*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제도 도입, 원하청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  
지역·업종 단위 노사협력을 중점지원 의제로 선정·지원

- 노사문화 우수기업·대상 선정시 '기업간 상생협력' 가점 부여
-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내 복지 서비스의 종류와 제휴기업을 확대하고, 기업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도록 유도\*

\* 복지포인트 지급 기업을 근로자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(중기부 지원사업 우대)

### ③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안착되도록 지원

- '20년중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3곳 이상 추가 창출하고, 단계별 심층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

- ▶ (초기 구상단계) 지역별 일자리 모델 개발이 가능한 산업 분석
- ▶ (모델 구축단계) 기존 인프라 활용방안 등 사업기획 지원
- ▶ (수립단계) 금융·법률·회계·노사·타당성·입지 등 전문분야 컨설팅 등

- 균특법 통과 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회 구성, 선정 등 후속조치 신속 진행

- ▶ 기체결된 상생협약 모델들에 대해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회 평가·심의\*를 거쳐 '상생형 지역일자리'로 선정

\* 평가요소(안): 상생협약 구체성 및 이행가능성, 고용·투자 규모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, 사업 모델의 지속가능성 등

- ▶ 선정된 모델에 대해서는 기업·근로자에게 재정·세제·금융·인프라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속한 투자·고용 촉진

\* (기업)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, 투자세액공제 우대, 임대전용산단 임대료 인하 등 (근로자) 산단 정주·교통 환경 개선,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, 편의시설 확충 등

### ④ 기업의 지속가능경영(CSR) 지원

- 투·융자, 보증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시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기업 우대

- ▶ 소셜임팩트 펀드 주목적 투자 대상에 CSR 경영 우수 중소·벤처기업 포함
- ▶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사회적성과(5점)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CSR 기업 우대
- ▶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평가하여 기업의 보증료·한도 등에 연계하는 방안 검토

- DB(국제표준, 가이드라인 등),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,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평가·검증하기 위한 지표 개발 등 추진 기반 구축

- 글로벌 CSR 기준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 지원을 위해 지속가능 경영 협의체를 산업별로 전문화\*하고 수준별 맞춤 컨설팅 제공

\* ('19.下) CSR 협의체 시범 운영 → ('20) 에너지·식품 등 산업 분야별로 확대 운영 검토

## ⑤ 기부금 세제지원 등을 통해 나눔의 기부문화 정착

-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등으로 기부문화 확산 지원

▶ (법인) 과거부터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(현재는 당해연도 기부금 우선 공제)  
→ 공제기간(10년)내 손금산입 가능액 확대 효과

▶ (개인) 현물 기부시, 시가와 장부가액 중 금액이 큰 것으로 가액 평가  
(현재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평가)

- 기부자 조연기금\* 활성화 등으로 고소득층 계획기부 문화 조성

\* 기부자가 공익 단체에 기부를 통해 기부펀드를 설립하고, 펀드 운영배분에 대해 조연 가능

## ③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제고

### ① 새로운 온라인소비 트렌드를 고려한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

- SNS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, SNS 인플루언서의 대가 지급 표시의무 명확화\*(지침 개정)

\* 사업자 및 소비자 주의사항 가이드라인 배포 등

- OTT 등 구독경제(Subscription Economy)에서 환불 등 계약조건을 소비자친화적으로 개선

\* OTT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

### ② 개선요구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강화

- 렌터카 사고수리비 과다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
- 해외 리콜제품 등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감시 및 공동조치, 안전기준 마련

### ③ 육아 관련 산재한 정보\*를 행복드림(소비자종합정보지원시스템)을 통해 통합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

\*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정보, 어린이집의 평가 정보 등

#### 4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인프라 확충

##### ①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

- 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의 통합·연계\*를 추진하고 시·도 소관 중간지원기관과의 기능 조정 절차\*\* 마련

\* 협동조합(기재부) + 사회적기업(고용부) + 마을기업(행안부)

\*\* 중간지원기관 간 역할분담 협의, 연계 운영 필요시 기관 통합 또는 컨소시엄 구성 지원

##### ②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기반 강화

- ‘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’을 사회적금융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(‘20.下)로 평가모형 지속보완

\* 신보가 개발한 사회적경제기업 특화 평가모형으로, 모형·웹시스템 구축 완료(‘19.10월)

-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(서금원 홈페이지 內)를 개편하여 사회적금융 관련 정보\* 제공 확대(‘20.3/4)

\* 대출형·투자형 중개기관 현황,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·현황, 해외사례 등

-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넓히고 자기자본 확충을 지원

▶ (개념)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의결권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 출자 방식

▶ (주요대상)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사업확장을 계획하는 협동조합, 인내자본이 필요한 창업초기 협동조합 등

\* (예)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하는 H협동조합은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, 자본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확장에 한계 → 우선출자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

##### ③ 사회적경제 분야에 특화된 인재 양성

- 해외봉사단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\*

\* KOICA 해외봉사단 귀국단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팀 공모, 사업화 지원금 등 지원

-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을 확대(860→970팀)하고 창업 인재를 지속 컨설팅하는 성장지원센터(소셜캠퍼스 온) 확대 조성(10→13개소)

## 5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사업모델 육성 및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

### ① 사회적경제기업이 강점을 가지는 사업모델 특화 지원

#### [ 수요자 중심의 공동 돌봄 협동조합 ]

-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시설 임차 등을 통한 **공간확보** 지원
  - \* 공유재산 임차를 통해 2호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예정('20.3월, 경기도 동탄)
- **신중년·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지원, 돌봄 협동조합 설립 매뉴얼 마련('20.9월)** 등을 통해 전문성 보완
- 다함께돌봄센터 확대('22년 1,800개소)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**방과후 돌봄 위탁사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·컨설팅** 추진
  - \* 다함께돌봄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운영할 수 있으나, 실적 저조('19.11월 기준 전체 118개소 중 7개소만 협동조합이 운영)
- 지역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**지역을 중심으로 규모화·조직화**하는 지역모델 구축

- ▶ **(규모화)** 의료사협 인프라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 구축
- ▶ **(조직화)** 대상별 특화 돌봄이 아닌, 지역공동체 내 각종 돌봄을 지원하는 '**조합형 돌봄 플랫폼\***' 구축('20년 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실시)
  - \* 지역공동체 내 돌봄 수요(아동, 노인 등)-공급(미취업자 등)을 매칭하는 네트워크(App)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돌봄조합 구성

#### [ 주민 중심의 지역 재생사업 ]

- 도시재생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**도시재생 모태펀드의 자펀드**를 결성('20.3월), **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\*** 부여
  - \* 자펀드 운용사가 2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
- **낙후 어촌·어항 재생사업(어촌뉴딜300)의 사업시행자 위탁가능 범위에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\***( '20.1월, 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)
  - \* (현행) 수협중앙회·조합, 어촌계, 한국어촌어항공단,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가능  
→ (개선) 마을기업,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영어조합법인 추가

## ② 성장기 진입 촉진을 위한 판로 확보 지원

- 공공기관별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계획·실적 공표범위 확대\*,  
수의계약 한도 증액\*\* 사항을 조례·공공기관 내부지침에 반영

\* ('19) 사회적기업 → ('20)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

\*\* 사회적경제기업(취약계층 30% 이상 고용)의 수의계약 한도가 5천만원으로 증액('18)  
되었으나 조례, 공공기관 내부지침에는 당초의 2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례 있음

-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전시·판매하는 유통지원센터를 추가  
설치\*하고 농협·생협 주요 매장에서 협동조합 팝업스토어 설치\*\*

\* ('18) 2개(인천·충남) 최초 조성, ('19) 2개(강원·전남) → ('20) 2개 추가

\*\* '20년 지자체 매칭 지원이 가능한 지역(5개)에 시범 추진

-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출 컨설팅·마케팅, 글로벌 온라인  
유통망(Amazon 등) 입점 등 해외진출 지원 확대

\* KOTRA 사회적경제기업 예산 확대: ('19) 6.5억원 → ('20) 9억원

## ③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에 맞춘 지원 강화

- 사회적경제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 플랫폼인 사회적경제  
혁신타운 추가 신축 추진

▶ 타운당 사업기간 3년간 총사업비 280억원 중 국비 140억원(설계비, 건축비 등) 지원

\* ('19) 2개 타운(전북·경남) 구축 시작 → ('20) 신규 3개 타운 사업 추진 예정

- 사회적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서비스·사업모델 개발 지원,  
기업 현장에 맞춘 디자인컨설팅, 디자인 인턴 인력 등 지원 확대

\* 사업예산 확대: ('19) 7억원 → ('20) 31.9억원

- 협동조합간 연대를 통한 성장을 위해 이종연합회(기본법상  
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간) 설립 허용 및 공동사업 발굴·확산

▶ (현행) 법상 동일한 유형의 협동조합간 연합회 설립만 허용

→ (개선) 다른 법상 협동조합(생협, 신협)과의 연합회 설립도 허용

▶ (사업예시) 이종 협동조합간 역할분담을 통해 푸드플랜 사업(아래 그림),  
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등에 참여

생산 (기본법 협동조합) ➡ 가공 (기본법 협동조합) ➡ 유통·판매 (생협)



**(1) 인구·가구 구조변화 대응 본격화****① 저출산·고령화 심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대책 마련****❶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거·출산·보육 등 종합적 지원**

-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행복주택 등 맞춤형 공적임대주택(5.2만호) 및 신혼희망타운(1.5만호) 공급 확대
- 경제활동을 하던 '고용보험 미적용자'의 출산급여 지급(월 50만원, 3개월 지급, '19.7월~)으로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
-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·돌봄 시설 확대

- ▶ 국공립 어린이집(550개소) 및 직장 어린이집(80개소)을 확충하고, 시간단위로 이용가능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(483→690개소)
- ▶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의 기반이 되는 가족센터를 확대(64개소)하고,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운영(15개 지역)
- ▶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 시설 운영·지원 확대('19년 57 → '20년 74개소)

- 초등 저학년 하교와 부모 퇴근 시간 사이 공백에 아이를 돌보는 '온종일 돌봄'을 확산하여 부모의 경제활동 지원

- ▶ '온종일 돌봄'이 이루어지는 초등돌봄교실('19년 13,910 → '20년 14,610실)과 다함께돌봄 센터('19년 167개소 → '20년 567개소) 확충
- ▶ 학부모 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(초등 1, 2학년 위주 → 전 학년)하고 운영시간 연장

- 종일보육 내실화를 위하여 보육지원체계를 개편\*하고,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를 통해 보육 서비스 질 향상('20.3월)

- ▶ (현행) 맞춤반(09~15시, 0~2세) 및 종일반(07:30~19:30)으로 운영, 하원시간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급
- (개선) 기본보육(~16시)과 필요 시 제공되는 연장보육(16시 이후)으로 구분,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및 연장보육료 별도 지급

② 고령자 계속 고용 활성화,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, 노인 복지 확대 등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적 노력 지속

③ 초저출산 및 급격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\*('21~'25) 발표

\*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를 근거로 저출산·고령사회를 대비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으로서 기간별 추진과제, 필요 자원의 규모 등을 포함

## ② 고령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생활여건 개선 및 관련 산업 육성

①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를 포함한 주거·사회 복지·산업적 측면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 수립('20.2/4)

\* 1인 가구 비중(%) : ('10) 23.9 ('18) 29.3 ('30<sup>e</sup>) 33.8

②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1인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

▪ 공공임대주택공급 등 관련 제도를 정비

▶ 가구변화추세를 감안하여 가구원수별로 적정한 공공임대주택(건설형) 대표면적 산정('20년)

\* (예시) 1인 18㎡, 1~2인 26㎡, 2~3인 36㎡, 3~4인 46㎡, 4인이상 56㎡

▶ 공공임대주택(건설형)의 공급비율을 가구원수별 입주수요에 맞춰 면적별로 설정하고, 소형(1~2인) 가구 대상면적 공급 확대 추진

▶ 공유형 주택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유형 주택 매뉴얼 마련('19.12월)

▪ 독거노인 등 취약 1인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

▶ 6개 노인돌봄 재정사업을 통폐합\*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게 예방적·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

\* 개편내용('19→'20): (예산)2,458→3,728억원 (대상)35→45만명 (서비스)6→21종

▶ 1인가구, 한부모가족 등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지원 확대 ('19년 5개소 → '20년 64개소)

③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및 퇴직·개인연금 활성화

▪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금의 보장성 강화

▶ 가입연령을 하향조정(60→55세 이상)하고,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현실화(시가 9억원 → 공시가격 9억원)

▶ 저소득 고령층(1.5억원 이하 1주택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)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우대 지급율 상향(일반형 대비 최대 +13% → +20%)

▶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개선

## - 퇴직·개인연금의 가입 확대 및 연금 장기수령 유도**

▶ **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\*** 및 **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도입\*\*** 법안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)의 신속한 국회통과 지원

\* (현행) 기업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가능  
→ (개선) 퇴직금 폐지,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

\*\* 중소·영세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·운영 지원 및 사용자 부담금 등 재정지원

▶ **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**

\* (현행) 400만원(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) → (개선) 600만원(900만원)

▶ **ISA 계좌 만기(5년) 도래시, 만기시점의 계좌금액 범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불입을 허용하고, 세액공제 한도 확대**

① 연금계좌 불입액 한도

: (현행) 연1,800만원 → (개선) 연1,800만원+ISA 만기시 계좌금액

② 세액공제 한도

: (현행) 300~400만원(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)

→ (개선) 현행 + ISA의 연금계좌 전환금액×10%(300만원 限) + 총급여 1.2억원 이하  
50세 이상은 200만원 한시 상향(3년)

▶ **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방식(10년 초과)으로 수령할 경우 제공하는 세제혜택 강화**

\* (현행)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% 적용

→ (개정) 수령기간 10년 이하시 퇴직소득세의 70%, 10년 초과시 60% 적용

## - 퇴직·개인연금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일임형 제도(퇴직·개인), 디폴트 옵션(DC형 퇴직), 기금형 제도(퇴직) 도입**

▶ 일임형 제도: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“알아서 연금을 굴러주는” 제도

▶ 디폴트 옵션: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“사전에 지정한 상품에 자동가입”

▶ 기금형 제도: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“수탁법인”을 설립 퇴직연금 운용

## **④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고령친화 新산업 경쟁력 강화**

### - 고령친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령인구 다양한 수요 등에 부응하는 「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」 수립(‘20.6월)**

\* 고령친화산업을 단순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를 넘어 고령인구의 다양한 수요를 포괄하는 고령친화 新사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 제시

### - 고령친화 신산업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**

▶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부품 R&D 지원을 통해 국산화 추진, 성능개선 및 제품화 과정을 지원하여 국내·외 시장진출 지원

▶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에 등재시 유통실적 요건 면제 혜택 제공

\* 현재 복지용구 등재 시 5,000만원 또는 200개 이상 유통실적 필요

- 고령자의 건강·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융합 新제품·서비스의 표준화 및 기술고도화 지원

- ▶ 고령친화산업 현황, 고령자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('20)를 토대로 고령친화 제품·시스템·서비스 표준화 로드맵 수립(~'21)
- ▶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융합형 新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 지원

### ③ 교육·국방 분야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

#### ① 학령인구 변화에 발맞춘 교원수급·교육인프라 재정비

-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 및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교원수급기준 조정
- 다양한 학교 운영모델 개발\* 및 학교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필요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학교시설 복합화\*\* 사업 추진

\* 공유형, 거점형, 캠퍼스형 등

\*\* 복합화 시범사업(마을공동체 학교건립 11개교, '20~'22) 및 「(가칭)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 추진

#### ②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병역구조·충원체계 개편

-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구조 재설계 및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 검토
- 간부인력 확충을 위해 단계적으로 간부 여군비중을 확대('18, 6.2%→'22, 8.8%)하고, 부사관 임용연령을 상향 조정(27세→29세)

### ④ 인구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2기 「인구정책TF」 운영

- 제2기 인구정책TF를 출범시켜 인구구조 변화와 직결된 핵심적·구조적 과제를 선정하고 '20년 상반기 중 논의결과 발표
- 인구구조 측면에서 중요하나 1기 TF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,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, 국민생활에 밀접한 과제 중점 추진

## [2] 국민 삶의 질 제고 노력 강화

### ① 「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」 수립('20.上)

- 소득수준에 부합하는 국민의 삶의 질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\* 제시

\* 「생산성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」와 통합하여 수립

「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」 주요 내용

#### ① 다 같이 행복한 개인의 삶

- ▶ 취약계층 자립 지원 등 **사회안전망을 강화**하고, 소득 안정화, 교육·근로환경 개선, 충분한 여가, 건강 증진 등을 통해 **개인의 행복한 삶** 구현

#### ② 서로 돌보는 공동체와 사회관계

- ▶ 가족·공동체 관계 증진, 사회신뢰 제고, 공정사회 구축 등을 통해 **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** 실현

#### ③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

- ▶ 자연·산업재해, 사고·범죄 등으로부터 **국민의 안전을 보장**하고, 환경오염 개선 등을 통해 **살기 좋은 생활환경** 마련

### ②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등 국민안전 강화

#### ①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(교통안전·산재방지·자살방지) 지속 추진

- (교통) '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\*  
(‘20년 0.2조원(지방비 포함), 단속카메라 1,500개, 신호등 2,200개 확충)

- ▶ 도로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는 **‘안전속도 5030’ 캠페인**의 전국 확산을 유도하고, **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강화**

\* 안전속도 5030 : (일반도로)60→50km/h, (주택·상가 인접) 40→30km/h

→ 현재 부산·서울(4대문內) 등 시범사업중 → '21.4월(전국 의무화)까지 점차 확대

\* 교차로 보행자 보호 : 적신호시 우회전하기 전, 횡단보도 앞 '일시정지 後-서행' 의무화

- ▶ **안전표지·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**의 대상지역도 **179개 확대**(‘19년 351 → ‘20년 530개소)

- ▶ **지역 교통안전 강화시설\* 대폭 확충**(‘19년 569 → ‘20년 1,768억원)

\*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, 신호등 설치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, 회전교차로 설치 등

- ▶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**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**  
(예 : 부산시 10만원)을 **전국 단위\*로 확산 유도**

\* (현행)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 → (개선) 정부-지자체 매칭 사업 실시

- (산재)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고위험사업장 안전시설 지원 확대(9,000 → 11,900개소) 및 패트롤 점검 강화(건설업 →제조업 포함)
- (자살) 응급실내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전담요원(143→307명)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확충(440→647명)

## ② 풍수해, 가뭄 등 재난 안전 인프라 구축 강화

- 재해발생 위험지역을 지속 정비(462→543개소)하고 우수저류 시설 확충(24→28개소)
-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국고 지원 2배 인상(25→50%)

## ③ 대형·복합재난에 대비하여 전국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원

- 소방 국가직화 추진에 따른 소방 현장인력 확충(5.6→6.0만명)
- 대용량 유류저장탱크 화재에 대비하여 '대용량포 방사시스템' 국내 최초 도입

## ③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및 4대 주요 수입폐기물 관리 강화

### ① 핵심배출원(산업, 발전, 수송 등)에 대한 국내 배출량 감축 조치 추진

- ▶ 총량관리제 대상 지역에 3개 권역 추가 (現 수도권에만 적용)
- ▶ 노후 석탄화력(6기) 조기 폐지('22→'21년) 등
- ▶ 10년이상 노후차→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(단, 경유차로의 교체는 제외) ('20.1.1~6.30, 6개월 한시, 100만원 한도)
- ▶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(3.5→0.5%) 및 5대 항만(부산·인천·울산·여수광양·평택당진) 배출규제 해역 지정

### ② 고농도 기간(12~3월) 계절관리제(Season제)를 통해 집중 저감 추진

- ▶ 안정적 전력수급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단
- ▶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\* 집중 지원 및 조치 미이행시 운행제한\*\* (수도권)

\* ('20년 예산) 조기폐차(2,896억원),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(1,383억원) 등

\*\* 영업용차량, 화물차량,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은 '20년 3월까지 단속 유예

### ③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 공동대응을 위하여 한·중 협력 강화\*

\* 계절관리제 조치 사항 및 예·경보 정보 공유, 공동연구 확대 등

### ④ 4대 주요 수입폐기물에 대한 국내산 활용 등 관리 강화

\* 전체('18년, 254만톤) 중 85% 석탄재(127만톤), 폐배터리(47), 폐타이어(24), 폐플라스틱(17)

#### ▪ (석탄재) '22년 이후 수입 중단을 목표로 국내 재활용 촉진

- ▶ 석탄재 매립부담금 상향(예시: 1→2~3만원/톤), 재활용시 감면혜택 확대 추진
- ▶ 발전사의 석탄재 재활용 목표를 상향 조정(75→90%) 추진
- ▶ 「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」 개정하여 수입제한 근거 마련

#### ▪ (폐배터리) 국내 발생량 전량이 재활용 중임을 감안,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잔재물 처리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

#### ▪ (폐타이어) 폐타이어 수입 감축을 위해 폐타이어 대신 폐비닐 시멘트소성로 보조연료 사용 확대\* 유도

\* 폐비닐 사용 확대를 위한 시멘트 제조공정 등 개선 추진('20.4월~)

#### ▪ (폐플라스틱) 생활계 폐플라스틱(PET) 생산·분리·수거 순과정 개선 추진

\* (생산)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 어려운 재질·구조 생산금지('19.12.25)

(배출) '페트병 별도 배출·수거'로 전환

(선별) 선별업체에 대한 지원금(37.5원/kg)을 페트병 선별 품질에 따라 차등 지원

## [3]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

### □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대응

#### ① 온실가스 감축목표('20년의 경우, '17년 대비 2.5% 감축) 달성을 위한 범부처 이행 점검·평가 체계 구축

\* 「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('18.7)」 : '30년, '17년 대비 24.4% 감축

#### ▪ 부처별 감축목표를 수립하고, 실적에 대한 신속한 평가(21→4개월)가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잠정배출량 산정·공개('20.5월)

\* (현행)배출실적 산정(21개월) 후 확정통계 발표→(개선)확정통계 외 잠정통계(4개월) 발표



## ②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시장 기능 강화

- 배출기업 책임강화,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등 개선 방안 마련(「제3차(’21~’25)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」, ’20.6월)

### <개선방안 예시>

- ▶ 할당총량 : 「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」의 연도별 목표배출량과 연계한 배출허용총량 설정
- ▶ 할당방식 : ① 오염원인자 책임 강화를 위한 유상할당 비율 확대(3%→10% 이상)  
② 배출효율에 비례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BM(Benchmark) 할당 확대  
③ 업체의 감축유연성 강화를 위한 할당취소량 산정단위 변경(시설→사업장)
- ▶ 시장기능 : ① 금융기관·증권사 등 제3자 시장거래 참여 허용  
② '배출권 시장협의회'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시장 참여자간 소통 확대

-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·시장조성자 제도 등의 효과 분석 및 개선\*(’20.6월)을 통해 배출권 유동성 제고

\* 이월 제한 : 제2차 계획기간 임시조치 → 제3차 계획기간(’21~’25) 지속  
시장조성자 제도 : 참여기관(現 2개소: 산업·기업은행) 지정 → 3차 기간 역할 확대

## ③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위험 대응을 위한 수량-수질-수생태 연계 R&D 개발 및 도시 물순환 회복 기반 구축\*\*

\* 기존도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, 신도시 저영향 개발 기법 도입 등

## [4] 남북경협 준비

### □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에 선제적 준비

- ① 대북제재 하 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, 향후 북한 비핵화 진전 등 여건 조성에 따른 경협 본격화에 착실히 대비
- ② 인적 교류 및 경제 인프라 지원 등 북한의 국제경제 질서 편입을 지원하고,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평화경제 공감대 확산 노력

## IV. 특별 중점 관리과제

### 1 활력·포용 8대 핵심과제

#### 1 투자 100조원 + 금융·세제 총력지원

- ①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발굴, 민자사업 15조원 집행·발굴, 공공기관 투자 60조원 추진
- ②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 집중 지원 +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 본격 가동
- ③ 역대 최고수준(22개 이상)의 유턴실적 창출을 목표로 유턴유치 강화(누적 90개 이상 추진)

#### 2 관광·내수소비 진작 [방한 관광객 2천만명, 국민 국내여행 횟수 3.8억회]

- 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강화(3K 연계, 방한객 재방문 유도 등) + 국내여행 활성화(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추진 등)
- ② 국내소비 적극 진작(코세페 활성화, 10년이상 노후차→신차 교체시 개소세 인하,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환급 지원)

#### 3 데이터경제 본격화

- ① 금융·공공·바이오 등 데이터공개 확대 및 10대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간 연계 강화
- ② 데이터3법 하위법령 등 관련 법령 정비 + 정보보호 노력 강화(개인정보보호위 신설, 비식별화 선도기술 R&D 확대 등)

#### 4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

- ① 100대 핵심품목 기술개발에 3년간 5조원(20년 1.7조원) 투자+수요공급기업 협력사업 '20년 20개 이상 목표로 발굴
- ② 소재·부품·장비 유망 창업기업 집중육성 + 소부장 기업 대상 세제·금융 등 각종 지원 강화

#### 5 신사업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 마련

- ① 신사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(한걸음 모델) 구축 + 상반기내 핵심규제에 대한 사회적 타협 계기 마련
- ② 사안별 특성에 따라 협의수단(상생혁신기금(가칭), 이익공유 협약, 협동조합, 규제샌드박스 등) 선택적 활용 검토

#### 6 청년·여성·40대 등의 일자리 지원

- ① (청년: 10~30대)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(20→29만명),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(25→34.2만명) 등
- ② (여성) 육아휴직 활성화, 온종일 돌봄,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
- ③ (중년: 40대) 40대 고용대책 마련, 폴리텍 특화훈련 확대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확대(35~69세) 등

#### 7 노인빈곤 해소 및 1분위 지원 / 1인가구 증가 대응

- ① (노인빈곤 해소) 소득하위 40% 기초연금 인상(월 25~30만원),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연장(9→10~12개월) 등
- ② (1분위 소득지원)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,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 등
- ③ (1인가구 증가 대응) 1인가구 증가 관련 종합 대응전략 수립, 1인가구 맞춤형 지원(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)

#### 8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

- ① 온오프라인 활용한 상권 활성화 및 신규시장 진출 지원,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 혁신기술 도입 유도
- ② 특별금리 대출 2.7조원 공급,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일몰연장 등 금융·세제 지원 확대

◇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, 인구구조변화·4차 산업혁명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대 부문 구조혁신(20개) 역점 추진

### 1 산업혁신: 혁신성장 가속화

※ 혁신성장 「4+1 전략 틀」 강력 추진

- ① Post-반도체 新산업+벤처창업 기초 역동경제 구현  
▷ '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', 스케일업펀드 32조원 조성
- ② 스마트 제조혁신 등 제조업 飛上+삶 속 서비스산업 혁신  
▷ K뷰티 혁신전략, K-Pop공연장 착공, 의료접근성 제고
- ③ 혁신 촉발·확산하는 핵심기술 개발  
▷ 차세대 AI,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, 자율주행차 등
- ④ 도전적으로 미래를 여는 혁신인재·금융 강화  
▷ 핵심인재 20만명 양성, 정책금융(479조원) 혁신분야 공급 확대

### 2 노동혁신: 고용친화적 노동제도 구축

- ① 직무·능력중심 임금체계로 개편+임금 연공성 완화  
▷ 공공기관 본격 확산, 민간부문 컨설팅임금정보 등 인프라 지원
- ②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합리화  
▷ 주 52시간제 연착륙 지원(특별연장근로 확대, 탄근제 추진지속)
- ③ 고용·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고용안정성 강화  
▷ 특고 산재보호 강화, 플랫폼 노동자 등 직종별 표준계약서 도입
- ④ 중층적 사회적대화 활성화 및 중범위 노사협력모델 창출  
▷ 상생형 일자리 추가창출(6곳 이상),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

### 5 사회적 인프라 확충: 구조혁신 추동력 뒷받침

- ① 과감한 규제혁신 ▷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구축(한걸음 모델), 규제샌드박스 질적 업그레이드
- ② 사회적 자본 축적 ▷ 갑을문제 해소 위한 거래관행 개선, 기부자 조언기금 활성화
- ③ 사회적 경제 활성화 ▷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시스템 확산, 중간지원기관 통합·연계

### 3 재정·공공혁신: 효율성·신뢰성 제고

- ① 수요기반·성과중심 재정운용 등 지출구조 효율화  
▷ 성과관리제도 대폭 개편, 연례적 이월불용사업 등 제로베이스 검토
- ② 재정 전주기에 걸친 철저한 관리로 누수·낭비 방지  
▷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제재 강화, 직접일자리사업 일몰제
- ③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 노력  
▷ 장기재정전망 실시, 재정준칙 도입 검토, 국유재산 가치 제고
- ④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·공공성 확대  
▷ 중소기업 지원 세르파 프로그램, 안전등급제 도입
- ⑤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개편을 통한 효율성·생산성 제고  
▷ 재무위험 조기경보시스템 도입, 자율정원조정제도 조기종료

### 4 인구대응: 인구감소시대 적응력 강화

- ① 고령자·외국인·여성 참여로 경제활동인구 총량 유지  
▷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모델 도입, 우수 외국인력 대상 비자제도
- ② 교육·국방 등 사회 분야별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 
▷ 교원수급 기준 조정, 첨단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 개편
- ③ 노후소득 보장, 고령자 수요 충족 등 고령자 삶의 질 개선  
▷ 주택·퇴직·개인연금 활성화,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
- ④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 상쇄를 위한 인적자본 생산성 향상  
▷ 평생교육·직업훈련 기반 확충(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, 평생학습계좌 자동연계 확대 등), 4단계 BK21 사업

⇒ “구조혁신의 현안화”를 위한 범정부 「구조혁신 TF」 가동하여 체계적 추진력을 확보하고, 연내 성과 가시화

## ① 5대분야(4+1)의 20대 최우선 과제 중점 추진

### (1) 산업혁신(4개)

#### ◇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「4+1 전략 틀\*」 역점 추진

\* ①신산업·신시장 창출, ②기존산업·시장(주력+서비스산업) 혁신, ③혁신기술·④인재·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+ ⑤제도·인프라 구축 등

#### ① Post-반도체 신산업 및 벤처창업 기반 역동적인 경제 구현

- ▶ '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' 추진
- ▶ 스케일업 펀드 3.2조원 조성
- ▶ 반도체 바이오, 미래차기업 창업패키지 지원
- ▶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

#### ② 스마트 제조혁신 등 제조업 飛上 및 삶 속의 서비스산업 혁신

- ▶ 스마트공장/산단 보급 확산
- ▶ 소재·부품·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
- ▶ K-뷰티 혁신전략, K-Pop공연장 착공, 의료접근성 제고 등

#### ③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을 통한 혁신 촉발·확산

- ▶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 지원(5G 기반 첨단기술, AI, 지능형반도체, 자율주행차 등)
- ▶ 소재·부품·장비, 바이오헬스 등 중점·핵심기술 확보
- ▶ 고위험·혁신적 R&D 체계 구축('한국형 DARPA 시스템' 등)

#### ④ 도전적으로 미래를 여는 혁신인재·혁신금융 강화

- ▶ AI 대학원 추가 개설('20. 3개),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운영 등 혁신인재 20만명 육성('20~'23.)
- ▶ 혁신분야, 중소벤처 등 중심으로 정책금융 43.3조원 확대('19년 435 → '20년 479조원)
- ▶ 예비유니콘 기업 특별보증(0.2조원) 지원 및 3.2조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 조성

### (2) 노동혁신(4개)

#### ◇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제고하고, 변화하는 산업·고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친화적 노동제도 구축

#### ① 직무·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의 연공성 완화

- ▶ 공공기관: 직무분석 착수기관 확대(30→70개), 선도기관 인센티브 → 임금체계 개편 확산
- ▶ 민간부문: 전문 컨설팅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(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우선지원)
- ▶ 직무능력중심 임금체제로 전환을 위한 점진적 방안 검토 및 사회적 대화(경사노위 등)

#### ② 제도기간 부여(1년),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을 통해 50~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(탄력근로 등 보완입법 동시 추진)

####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플랫폼 노동자, 프리랜서 등 보호 강화

- ▶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직종 확대, 한시적 산재보험료 경감 추진
- ▶ 직종별(퀵서비스·대리운전, SW개발자, 웹툰작가 등) 표준계약서 도입·보완 및 확산

#### ④ 지역·업종별 노사협력 사례축적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모델 창출

- ▶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('20년 3곳 이상 창출, 군특법 통과 이후 심의화·선정 등 후속조치 시행)
- ▶ 지역단위 노사협력 논의 등 지원 및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시 '기업간 상생협력' 가점 부여

### [3] 공공혁신(5개)

◇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 유지, 공공기관의 효율성·책임성 강화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·신뢰성 확보

#### [ 재정혁신 ]

##### ①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한 수요 기반-성과 중심 재정운용

- ▶ 분야별 재정수요 전망 등 토대로 지출구조 전면 재검토 및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
- ▶ 재정평가제도 대상·주기 조정 등 성과관리제도 대폭 개편
- ▶ 만성적 이월·불용, 관행적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 재검토

##### ② 재정 전주기에 걸친 철저한 관리로 누수·낭비 적극 방지

- ▶ (부정수급 점검 강화) ①고위험사업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 실시 ②신고포상금 강화, ③특별사법경찰 도입(기초생활급여, 고용안정 사업 등)
- ▶ (부정수급자 처벌·제재 강화 및 사전예방) ①보조사업시 부정수급 공모 계약업체 추가5년간 지급배제, ②통합수급자격관리 시스템 구축 ③고발·수사의뢰 강화
- ▶ 직접일자리 사업 효과 제고 위해 일몰제(성과 미흡 사업) 및 최소성과기준 도입

##### ③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다각화

- ▶ 장기재정전망 착수 및 재정준칙·순채무 지표 도입 검토
- ▶ 재정투명성 제고 위해 국민참여예산 사업발굴 확대 및 운영 내실화(현장 모니터링 정례화 등)
- ▶ 국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(국유재산특례 지출 총량 관리 강화, 부적합 물납 사전 차단)

#### [ 공공기관 혁신 ]

##### ①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을 통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

- ▶ (상생·혁신) 임파제 인력 활용한 「중소기업 지원 세르파 프로그램」 신설 공공기관 규제애로 개선
- ▶ (안전)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(안전대진단 결과 등 반영) 등을 통한 안전경영 정착
- ▶ (공정) 계약상대방 권익을 제약하는 제도 및 불공정 관행 개선 입찰참가자격 제한 적정성 제고 등 기업부담 완화

##### ② 효율성·생산성 중심으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전면 개편

- ▶ (조직) 조직효율화를 위한 인력운영 책임성 강화(자율정원조정제도 조기종료 등)
- ▶ (재무) 재무위험 조기경보시스템(EWS) 도입(신호등 관리체계 도입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확대)
- ▶ (보수·인사) "일 중심"의 보수·인사체계 구축(직무·능력 중심 개편 확산, 특별승진 활성화)

### [4] 인구구조변화 대응(4개)

◇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응력 강화

##### ① 고령자·외국인·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통한 경활인구 총량 유지

- ▶ (고령자)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모델 도입, 국민연금 근로유인 강화 등
- ▶ (외국인) 우수 외국인력 유지를 위한 비자제도 및 성실 재입국 제도 개선
- ▶ (여성) 육아휴직제도 개선, 종일보육 내실화(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), 초·중·고 돌봄교실 확대 운영

##### ② 학령·병역인구 감소에 대응한 선제적 조정·적응방안 마련

- ▶ (학교) 교원수급 기준계획 수정 및 교원양성규모 조정, 학교시설 복합화
- ▶ (국방)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개편, 고숙련 중간간부 확충을 위한 정원구조 재설계



### ③ 노후소득보장 강화,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통한 고령자 삶의 질 개선

- ▶ 주택·퇴직·개인연금 활성화 등 다층적 연금체계 구축으로 노후소득기반 강화
- ▶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전략 수립 ▶ 고령친화상품 시장확대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

### ④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인적자본의 생산성 향상

- ▶ 전 생애 평생학습기반 확충(평생학습계좌 자동연계 확대, 온라인 강좌 콘텐츠 개발)
- ▶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('20.1월, 고용형태 무관 직업훈련 희망자 대상)
- ▶ 초중고 교육혁신 및 대학 혁신 연구역량 강화(전국 초중고 Wi-fi망 설치, 4단계 BK21사업)

## [5] 사회적 인프라 확충(3개)

### ◇ 규제개혁, 사회적 자본 축적 등을 통해 구조혁신 추동력 뒷받침

#### ① 신사업 창출 규제 등 핵심규제 혁파를 통한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

- ▶ 신사업 관련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 '한걸음 모델' 구축((가칭)상생혁신기금 조성 등)
- ▶ 규제샌드박스 사례 확대, 사업화 밀착지원 및 선제적 법령정비 추진
- ▶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 제로베이스 검토

#### ② 공정문화 확산,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

- ▶ 사전사업조정협의제 도입 등 거래관행 개선 및 일관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추진
- ▶ 기업의 지속가능경영(CRS) 지원(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시 사회적가치 실현 우수기업 우대)
- ▶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▶ 기부자 조연기금 활성화

#### ③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

- ▶ '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' 확산(금융기반 강화)
- ▶ 부처소관 중간지원기관 통합·연계 추진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개선

## [2] 범정부 「구조혁신 TF」를 가동하고, 연내 성과 가시화에 총력

#### ① (구조혁신TF)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4개 작업반\*(산업·고용노동·공공·사회적 인프라)을 설치하고 관계부처 등 참여

\* 인구분야는 既 설치한 「인구정책 TF」를 통해 논의 지속

#### ② (추진사항) 단기과제는 성과 가시화, 중장기 과제는 발굴·구체화

- 20대 최우선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
- 중장기 과제는 추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, 수용도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동력 확보 노력 병행

#### ③ (추진일정) 「구조혁신 TF」 전체회의는 月 1회 개최를 원칙으로, 중간·최종결과물은 분기당 1회씩 경제활력대책회의의 상정하여 논의

## V. 2020년 경제전망

◇ 향후 대내외 여건상의 불확실성 등에 적극 대응하여 가용한 정책수단 총동원 → 경기반등의 모멘텀 마련 및 성장동력 확충

① (성장) '19년(2.0%) 보다 개선된 2.4% 성장 전망

-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회복, 투자·내수활성화 등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투자·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 개선 예상

② (고용) 투자활성화·일자리 확대 노력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,

- 생산가능인구의 큰 폭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'19년 보다 소폭 둔화된 25만명 예상

\* 생산가능인구 증감(만명, 장래인구추계) : ('19)△5.6 → ('20)△23.1

- 고용률(15~64세)은 '19년(66.8%)보다 소폭 개선된 67.1% 예상

③ (물가) 국제유가는 하락하나,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, 유류세 인하 종료 영향 등으로 '19년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며 1.0% 상승

④ (경상수지) 세계교역 회복, 반도체 수출 개선 등으로 수출이 증가 전환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595억불로 소폭 확대

- 수출은 물량 증가, 단가 하락세 개선 등으로 3.0% 증가, 수입도 물량 증가 등으로 2.5% 증가 예상

### 2020년 경제전망

	2019년	2020년
■ 경제성장률(%)	2.0	2.4
■ 취업자증감(만명)	28	25
- 고용률(% , 15~64세)	66.8	67.1
■ 소비자물가(%)	0.4	1.0
■ 경상수지(억불)	580	595



## 1. '19.12월 주요 추진과제 (12개)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및 사전행정절차* 신속 이행 * 각종 영향평가, 관계기관 협의 등</li> </ul>	각 부처 및 지자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업기반시설, 기업도시 등 지방세 감면조치 연장</li> </ul>	행안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1차 문화도시 선정</li> </ul>	문체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무안공항 환승 편의시설 확충</li> </ul>	국토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국장 면세점 개선방안 마련</li> </ul>	기재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독거노인 휴면재산 온누리상품권 구매시 7% 할인 제공</li> </ul>	복지부, 중기부, 금융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정식 오픈</li> </ul>	중기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유형 주택 매뉴얼 마련</li> </ul>	국토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정인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경영지침 등 개정</li> </ul>	기재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적농업 거점농장 4개소 선정</li> </ul>	농식품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</li> </ul>	복지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수행기관 추가 선정 (35 → 60개소)</li> </ul>	여가부

## 2. '20.1/4분기 주요 추진과제 (50개)

### (1) 1월 (20개)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제관광도시(1개소) 및 지역관광거점도시(4개소) 선정</li> </ul>	문체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통상정보센터 설치</li> </ul>	산업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바이오산업 혁신 TF 핵심과제 발표</li> </ul>	기재부, 과기정통부, 농식품부, 산업부, 복지부, 환경부, 해수부, 중기부, 금융위, 식약처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「규제 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」 마련</li> </ul>	과기정통부, 산업부, 중기부, 국조실, 금융위,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 추진</li> </ul>	환경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「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」 수립</li> </ul>	과기정통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주요 직접 일자리사업 조기채용 개시</li> </ul>	행안부, 복지부, 고용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</li> </ul>	고용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 및 계속고용장려금 신설</li> </ul>	고용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초·중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(~6월)</li> </ul>	교육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</li> </ul>	교육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1:1 맞춤형 온라인 대입상담 등 대입정보포털 기능 강화</li> </ul>	교육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햇살론<sup>Youth</sup> 출시 (1,000억원)</li> </ul>	금융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햇살론<sup>17</sup> 공급규모 확대 (4,000 → 5,000억원)</li> </ul>	금융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자활급여 인상(최대 5%)</li> </ul>	복지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노인일자리 사업 경영상 애로 완화 위한 지침 개정</li> </ul>	복지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6개 노인돌봄 재정사업 통폐합·시행 및 맞춤형 노인돌봄 시행</li> </ul>	복지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</li> <li>▶ 소득인정액 계산시 근로연령층(25~64세)에 대한 근로소득 30% 공제 적용</li> <li>▶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</li> </ul> </li> </ul>	복지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1년이상 근로계약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고용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주 52시간제 보완 및 탄력근로 등 보완입법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50~299인 사업장 계도기간 부여</li> <li>▶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관련 시행규칙 개정</li> </ul> </li> </ul>	고용부

## [2] 2월 [6개]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
▪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 6개월 추가 연장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)	기재부
▪ 5G 망투자 세액공제 확대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)	기재부
▪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(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)	고용부
▪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소액채권 기준금액 상향	기재부
▪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	중기부
▪ 중기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허용	중기부, 공정위

## [3] 3월 [24개]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
▪ 점단 신도시 인천1호선 연장사업 착공(사업계획 승인)	국토부
▪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 사업 세부 지원사항 발표	산업부
▪ 「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」 마련	산업부
▪ 「섬관광 활성화 종합대책」 수립	해수부
▪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 조성 계획 수립	복지부
▪ 「서비스 R&D 가이드라인」 마련	기재부, 과기정통부
▪ 「브랜드-K 확산전략」 수립	중기부
▪ 공공 위탁개발 방식 추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	국조실
▪ 「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」 수립	과기정통부
▪ '19년 하반기 선정 AI 대학원 개원	과기정통부
▪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 도입 컨설팅 신규 지원(3~12월)	고용부
▪ 「중소기업 지원 세르파 프로그램」 도입	기재부
▪ 40대 고용대책 마련	기재부, 고용부 등
▪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	고용부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상공인 단체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행위 허용</li> </ul>	공정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입 상담 등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대입상담교사단(250여명) 위촉, 대입전공멘토단(대학생 400여명) 선발</li> <li>▶ 대입정보포털 맞춤형 대입상담 기능강화(상담교사단, 전공멘토단 구축)</li> </ul> </li> </ul>	교육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-학습 연계 유학생(D-2-7) 인턴활동 허용</li> </ul>	법무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증권사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</li> </ul>	금융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 마련</li> </ul>	중기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조합형 돌봄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실시</li> </ul>	복지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육지원체계 개편 통한 종일보육 내실화(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)</li> </ul>	복지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창업우수인재 창업비자(D-8-4) 취득절차 간소화</li> </ul>	법무부, 중기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지방공공기관 모범거래 모델 도입을 위한 알기쉬운 매뉴얼」 제작·배포</li> </ul>	행안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개선</li> </ul>	행안부

### 3. '20.2/4분기 주요 추진과제 (48개)

#### (1) 4월 (6개)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비스 수출대전(K-Service) 개최</li> </ul>	기재부, 산업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류연계 방송·시상식 방청권을 활용한 방한 관광 상품 판매 지원</li> </ul>	문체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민간매입약정제 확대</li> </ul>	국토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반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 마련</li> </ul>	기재부, 법무부, 금융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강화 (구매대행자가 소비자의 세금을 편취한 경우 구매대행자 처벌)</li> </ul>	기재부, 관세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동손자회사 금지 명확화,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·공시 강화 (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)</li> </ul>	공정위

## [2] 5월 (10개)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▪ K-culture 페스티벌 개최	문체부
▪ 관광벤처 지원기업 선정	문체부
▪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추가 선정 (1개소)	문체부
▪ 규제혁신 성과 사례집 제작·배포	국조실
▪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 개소	산업부
▪ 혁신의료기기 지정 도입	복지부
▪ 「생산성 혁신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」 마련	기재부
▪ 「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」 마련	고용부
▪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	고용부
▪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시행	기재부

## [3] 6월 (32개)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▪ 지역내 유희 국유지 활용 생활SOC 확충 추진 (국유재산법·시행령 개정)	기재부
▪ 부산북항 1단계 마리나 착공	해수부
▪ 「유테기업 유치 촉진방안」 마련	기재부, 산업부 등
▪ 「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·전략」 마련	기재부
▪ 「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」 마련	산업부
▪ 「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」 마련	과기정통부, 산업부, 기재부, 중기부, 행안부,
▪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	중기부
▪ 건설업 전문업종 통합	국토부
▪ 소규모 빈집활용 주택정비 사업 용자금리 인하	국토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▪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(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)	문체부
▪ 벤처펀드 출자자수 산출 규제 완화	중기부, 금융위
▪ 「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」 수립	산업부
▪ 항공사 공적보증 방안 마련	기재부, 국토부, 금융위
▪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기업 의무공동도급제 도입 추진	기재부
▪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 마련	기재부, 금융위
▪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내 소규모 부지 공급 근거 마련 (산업입지개발지침 개정)	국토부
▪ 「제4차(‘21~’30) 항만기본계획」 수립	해수부
▪ 5G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주파수 이용체계 개편 추진	과기정통부
▪ 「AI 활용에 관한 규제체계 전환 로드맵」 수립	과기정통부
▪ 혁신조달플랫폼 구축	기재부, 조달청
▪ 외국인환자 대상 ICT기반 사전상담·사후관리 연구 완료	복지부
▪ 「고령친화 신산업 창출전략」 수립	기재부, 산업부, 복지부
▪ 워크넷 고령자 우대 채용관 신설	고용부
▪ 행복드림을 통해 육아 관련 정보 통합 제공	행안부, 복지부, 공정위
▪ 통신 3사 알뜰폰 5G 출시	과기정통부
▪ 직종별 표준계약서 도입·보완	과기정통부, 국토부, 금융위
▪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 운영자금 지원하는 DIP 금융 확대	금융위
▪ 주금공 전세대출보증+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 출시	금융위
▪ 노인·장애인 대상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방안 마련	복지부
▪ 건강보험·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기준 정비안 마련	복지부
▪ 1인 가구 시대 종합 대응전략 수립	기재부, 복지부, 국토부 등
▪ 「제3차(‘21~’25)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」 수립	환경부

#### 4. '20.3/4분기 주요 추진과제 (24개)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▪ 서울 아레나 착공	문체부, 서울시
▪ 혁신성장촉진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제공	산업부
▪ 「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」 마련	기재부, 산업부 등
▪ 월드 한식 페스티벌 개최(10월)	농식품부
▪ 건설업 자본금 기준 완화 및 보증수수료 인하	국토부
▪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/보증 출시(9월)	산업부
▪ 개인정보정보 활용방안 마련	복지부
▪ 온라인·무인환전점업자 환전한도 상향 등 규제완화	기재부
▪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	고용부
▪ 고용·투자 친화적으로 中企 특별세액 감면제도 개편방안 마련(7월)	기재부, 고용부
▪ 산재보험 특례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	고용부, 국토부
▪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검토 위한 연구용역 추진(3~9월)	고용부
▪ 성실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	고용부
▪ SNS 플랫폼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의무 이행 점검	공정위
▪ 렌터카 수리비 과다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	공정위
▪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선정(8월) 및 시행(9월)	교육부
▪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	금융위
▪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2차 사업 추진	복지부
▪ 사회적금융 관련 정보 제공 확대(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)	금융위
▪ 돌봄 협동조합 설립 매뉴얼 마련(9월)	기재부
▪ 돌봄로봇 실증 연구 실시	복지부
▪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전문교육 실시(7~8월)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일경험 수련(9~12월)	행안부
▪ 「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」 개정 및 연장(7월)	금융위
▪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 마련	기재부



## 5. '20.4/4분기 주요 추진과제 (42개)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▪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착공 및 사업지 추가 발굴	기재부
▪ 서비스산업 수출입 통계 시스템 구축(12월)	기재부, 산업부
▪ AI 올림픽 개최	중기부
▪ 「의료데이터 활용전략」 마련	과기정통부, 행안부, 복지부
▪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 수립(10월)	복지부
▪ 하반기 K-culture 페스티벌 개최	문체부
▪ 제2차 문화도시 선정	문체부
▪ 지방공항 환대기간(‘메가 에어세일’)	문체부, 국토부
▪ 한중일 e스포츠 대회 개최	문체부
▪ 광역철도 하남선 개통(12월)	국토부
▪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대책 수립(12월)	국토부
▪ 공공임대주택 대표면적 산정	국토부
▪ 국유지 복합개발 등을 통한 소형 임대주택공급 확대	기재부, 국토부
▪ 외국인환자 대상 ICT기반 사전상담·사후관리체계 관련 해당국 협의	복지부
▪ 「K-뷰티 혁신전략」 마련	복지부
▪ 해상특송 서비스 적용 지역 추가 확대 추진	관세청
▪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	해수부
▪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제작·배포	행안부
▪ 기업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방안 마련	고용부
▪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업종 확대(6→12개)	공정위
▪ OTT 등 구독경제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	공정위
▪ 지역별 연구시설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연계	과기정통부, 산업부, 중기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▪ 국세정보 공개 및 이용·공유 확대	국세청
▪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(1.6 → 2.6조원)	금융위
▪ 카드포인트 일괄 현금화 서비스	금융위
▪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, 주택연금 보장성 강화	금융위
▪ 외국인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	법무부
▪ 통신망 도매대가 인하 및 소비자 선호 정책요금제 제공	과기정통부
▪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마련	복지부
▪ 2020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(10월)	중기부
▪ 달빛어린이병원 요건 완화 등 활성화	복지부
▪ 소아진료 응급실 지정·운영 방안 마련	복지부
▪ 책임의료기관 지정·지원 법적근거 마련 및 단계적 지정	복지부
▪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방안 마련	복지부, 고용부, 국세청
▪ 소득활동에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영향분석 연구	복지부
▪ 상생형 지역일자리 3곳 이상 추가 창출	기재부, 산업부, 고용부, 국토부, 중기부
▪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통한 우수사례 창출	고용부
▪ 노사문화 우수기업·大賞 선정시 기업간 상생협력 심사 우대 적용	고용부
▪ 국고보조금 맞춤형 안내서비스 시범실시(12월)	기재부
▪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시	행안부
▪ '19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종합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	환경부
▪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·제출(UN)	환경부

## 1. 아동·여성

### ■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('20.2월 시행)

### 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도 개선

☞ (현행) 육아휴직급여의 25%는 복직 후 6개월 지나야 지급  
(개선)복직한지 6개월 되기 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

### ■ 육아휴직 부여 또는 대체인력 고용 사업주 대상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('20.上)

☞ 육아휴직 기간·대체인력 채용 기간 중 50% 지급

### ■ 한부모 가구 육아휴직 급여 인상(양부모 가구와 동일 혜택)

☞ (현행) (~3개월)통상임금 80%(월150만원限), (~종료일) 50%(월120만원限)  
(개선) (~3개월)100%(월250만원限), (4~6개월)80%(월150만원限), (7개월~종료일) 50%(월120만원限)

### 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

☞ 맞춤형 진로·취업설계(경력이음서비스) 상담인력 확충 : '19년 10명 → '20년 20명  
☞ 새일센터 기능 강화 : (창업지원인력 확충) '19년 30명 → '20년 40명  
(경력단절예방 지원기관 확대) '19년 35개 → '20년 60개소

### ■ 보육·돌봄 시설 확대

☞ 국공립어린이집 : +550개 직장 어린이집 : +80개  
시간제보육 서비스 : '19년 483개소 → '20년 690개소  
농촌특성반영 보육시설 : '19년 57개소 → '20년 74개소

### ■ '온종일 돌봄' 확산

☞ 초등돌봄교실 : '19년 13,910실 → '20년 14,610실  
다함께 돌봄센터 : '19년 167개소 → '20년 567개소

### ■ 보육지원체계 개편('20.3월)

☞ (현행) 맞춤반(09:00~15:00)+종일반(07:30~19:30) 운영, 하원시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급  
(개선) 기본보육(~16:00) + 필요시 연장보육(16:00~)으로 구분, 연장보육료 별도 지급

### ■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

☞ '20년 중 단속카메라 1,500대, 신호등 2,200대 설치

### 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역 확대

☞ '19년 351개소 → '20년 530개소

## 2. 청년·청소년

### ■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

☞ ('19년 2학기)3학년 ('20년)2·3학년 ('21년) 전학년

## ■ 고졸취업자 선취업·후학습 지원

☞ 고교취업연계장려금 : '19년 300만원 → '20년 400만원  
고졸제직자 후학습장학금 : '19년 9,000명 → '20년 11,200명

## ■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

☞ 청년추가고용장려금 : '19년 20만명 → '20년 29만명  
청년내일채움공제 : '19년 25만명 → '20년 34.2만명

## ■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('20.下,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제도로 통합)

☞ 중위소득의 50%(18~34세는 120%) 이하 구직자: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 
중위소득의 100%(18~34세 소득무관) 이하 구직자: 진로상담, 직업훈련, 창업지원 등

## 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및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

☞ 근로장학금 지급 : <교내> 8,350원 → 9,000원 <교외> 10,500원 → 11,150원  
근로장학생 인원 : <교외> 4.6만명 → 4.9만명  
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설 : 1,000명  
학자금 대출 금리 : '19년 2.2% → '20년 2.0%

## ■ 미취업 청년·대학생 금융지원 상품 <햇살론<sup>youth</sup>> 출시

☞ 대상 : 미취업 청년·대학생 등  
금리 : 연간 3~4%  
한도 : 연 600만원(최대 1,200만원)

## 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

☞ 청년희망키움통장 소득요건 완화 : 중위소득 20~30% → 중위소득 30%이하

## ■ 주택공급 확대

☞ 신혼부부 맞춤형 공적임대주택(행복주택 등, 5.2만호), 신혼희망타운(1.5만호)

## 3. 중장년

### 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

☞ (고용센터) 40대 집단상담 프로그램 신설  
(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) 중장년 전담 컨설턴트 확대, 맞춤형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확대

### ■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급

☞ '19년 5천명 → '20년 6천명

### 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확대

☞ '19년 2.5천명 → '20년 5천명

### ■ 40대 창업역량 강화

☞ 예비창업패키지 : (현재)만 39세 이하 → (개선) 40대 이상 포함  
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: (현재)창업 3년내 청년창업기업 → (개선) 40대 포함  
'전직창업농' 과정 운영 : 퇴직 40·50대 1,600명

#### 4. 어르신

##### ■ 노인일자리 확대

☞ 노인일자리 : '19년 61만개 → '20년 74만개  
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: 9개월 → 10~12개월

##### ■ 고령층 고용기업 부담 완화

☞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: '19년 분기당 27만원 → '20년 분기당 30만원  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: '20년 30만원  
고령자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 : '19년 0~700만원 → '20년 400~1,200만원

##### ■ 기초연금·주택연금 보장성 강화

☞ (기초연금) <대상> 소득하위 20~40%이하 <연금액> '19년 25만원 → '20년 30만원  
(주택연금) <가입연령> 60~65세이상 <가입주택 가격상한> 시가 9억원→공시가격 9억원

##### ■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·지급 서비스 확대, 휴면재산으로 온누리 상품권 구매時 7% 할인

☞ (현행) 독거노인 대상 → (개선) 독거노인 + 취약계층 노인(거동불편 노인 등) 및 장애인 등

#### 5. 서민·취약계층

##### ■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

☞ ①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,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
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: 월소득(4인가구 기준) 138.4만원→142.5만원

##### ■ 저소득층 근로의욕 제고

☞ ① 기초생보 소득인정액 계산시, 근로연령층(25~64세) 근로소득 30% 공제  
②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: '19년 3만원 → '20년 10만원  
③ 자활급여 인상 : '19년 53,427원/월 → '20년 56,109원/월

##### ■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('20.下)

☞ 중위소득의 50%(18~34세는 120%) 이하 구직자: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 
중위소득의 100%(18~34세는 소득무관) 이하 구직자: 진로상담, 직업훈련, 창업지원 등

##### ■ 장애인연금 인상(25→30만원)

☞ (대상)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+ 차상위 계층까지 지급(13.7만명→15.3만명)

##### ■ 필수 생계비 경감

☞ (통신료) 알뜰폰 5G 출시, 통신망 임차료 인하 / (의료비) 소아의료기관 야간·휴일 진료 활성화  
(교육비) 고교무상교육 및 근로장학금 확대 / (주거비) 공공임대주택 활성화, 전세보증보험 확대

##### ■ 장애인 근로자 대상 일하는 복지 지원 강화

☞ ① 15~29세 : 발달장애인 훈련센터(13~19개, 15개 시·도 별 1개/서울·경기: 2개)  
② 30~49세 :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(3천~5천명), 지원대상(기존대상+발달장애 추가 포함)  
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·여성장애인 단가 인상(월 30~60만원→45~80만원)  
③ 50세~ : 장년장애인 인턴제 신설(200명)

##### ■ 저소득·저신용자 서민금융 확대

☞ 햇살론<sup>17</sup> 확대 : (대상)저소득·저신용자 (규모)'19년 4천억원→'20년 5천억원 (한도) 700만원, 최대 1,400만원  
햇살론<sup>youth</sup> 신설 : (대상)미취업 청년 (규모)'20년 1천억원 (한도)연 600만원, 최대 1,200만원

## 6. 소상공인·자영업자

### ■ 소상공인·자영업자 금융지원

- ☞ ① 저신용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공급: 5조원, 25만명  
 ② 경영안정자금 융자 : 1.55조원      ③ 혁신형 소상공인 성장촉진 : 700억원  
 ④ 소상공인·자영업자 및 혁신창업 기업 등에 특별금리 대출 : 2.7조원

### ■ 지역사랑·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

- ☞ (지역사랑상품권) '19년 2.3조원 → '20년 3조원  
 (온누리상품권) '19년 2.2조원 → '20년 2.5조원

### ■ 지역상권 수요창출 지원

- ☞ 전통시장 투어상품 : 신규 15곳 개발  
 골목길 디자인 개선 : '19년 8곳 → '20년 10곳  
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지원 : '19년 누적 7곳 → '20년 누적 12곳

### ■ 우수제품 판로지원

- ☞ 소상공인 전담셀러 매칭 : 신규 2,000개사  
 TV홈쇼핑·T-커머스 입점·컨텐츠제작 지원 : '19년 200개사 → '20년 300개사  
 V-커머스 입점·컨텐츠제작 지원 : '19년 200개사 → '20년 1,000개사

### ■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·육성

- ☞ 백년가게 : '19년 300개 → '22년 1,000개  
 명문소공인 : '19년 100개 → '20년 200개

### ■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(「자영업자<sup>123</sup> 재기지원 프로그램」)

- ☞ ① 채무조정 : (현재) 최대 8년 분할상환 → (개선) 2년 유예 후 최대 10년 분할상환  
 ② 자금지원 : (현재) 채무조정 후 최소 9개월 → (개선) 채무조정 확정 즉시 질적심사 거쳐 지원  
 ③ 컨설팅 : (현재) 자금지원 확정 후 → (개선) 재창업자금 신청만 해도 지원

## 7. 중소·벤처기업

### ■ 시제품 제작·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 지원

- ☞ (일반) 기업당 최대 1억원 (시스템반도체·바이오헬스·미래차 분야) 최대 1.5억원

### ■ 창업·벤처기업 자금조달 지원

- ☞ 스케일업 펀드 조성 : 3.2조원  
 예비유니콘 기업 특별보증 : 총 2,000억원, 기업당 최대 100억원  
 혁신 아이콘 기업 지원 프로그램 : 총 1,000억원, 기업당 최대 100억원

### ■ 창업활동 기반시설 확충

- ☞ 메이커스페이스 : '19년 128개소 → '20년 192개소  
 스타트업 파크 : 2개소 신규 구축  
 창업지원 플랫폼 'Front1'(마포 청년혁신타운) 개소

### ■ 해외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인큐베이팅, VC 매칭 등 지원('20년 500개사)

- ☞ 코리아스타트업센터(미국 시애틀 등 5개 거점), 창업특화 Business Incubator(4개소) 등 활용

### ■ 벤처사업가 재기 지원

- ☞ (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) 엑셀러레이터 투자연계 지원 확대, 8개사→16개사  
 (가산금)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체납액 가산금 면제·분할납부 5년 허용

## 별첨 3

## 2020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

※ 일반국민 1,000명, 경제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조사(KDI)

◇ 국민들은 '활력 제고'와 '미래대응' 등을 내년도 역점 과제로 인식하고, 혁신·포용·체질개선 등도 주요 과제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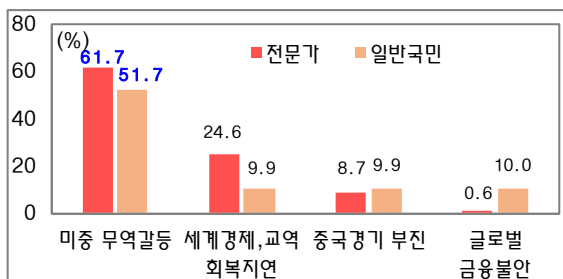
☞ ①경기반등 모멘텀에 총력 집중하는 한편, ②혁신·체질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와 함께 ③포용·미래대응 노력 강화

① ('20년 경제정책방향) 전문가는 '경제상황 돌파', 일반국민은 '미래 대응'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우선순위로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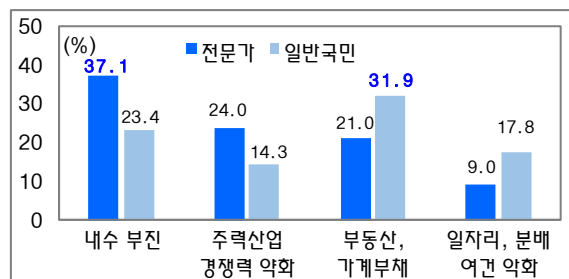
(%)	경제상황 돌파	혁신가속화	경제체질 개선	포용 강화	미래대응
전문가	39.8	22.8	20.4	6.9	9.9
일반국민	20.5	12.6	21.0	16.5	27.4

② (대내외 리스크) 대외요인은 전문가·일반국민 모두 '미중 무역갈등'을, 대내요인은 전문가는 '내수 부진', 일반국민은 '부동산·가계부채'로 응답

주요 대외리스크 요인(상위 4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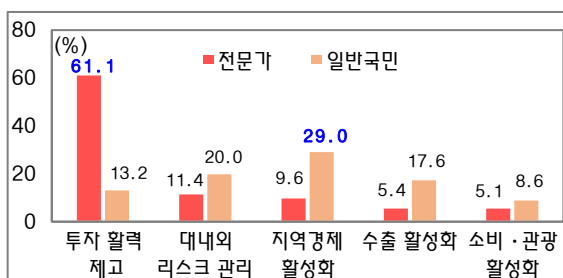
주요 대내리스크 요인(상위 4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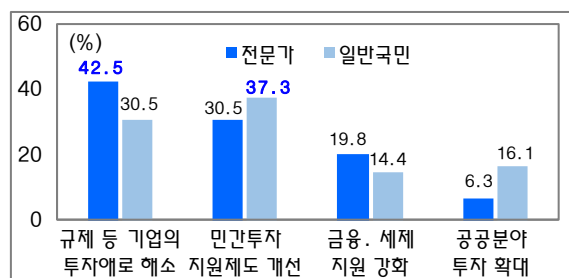
③ (경제상황 돌파) 경제상황 돌파를 위한 중점과제로 전문가는 '투자활력 제고', 일반국민은 '지역경제 활성화'를 지목

○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우선과제로 전문가는 '규제 등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', 일반국민은 '민간투자 지원제도 개선'을 지목

경제상황 돌파 중점과제



투자활력 제고 우선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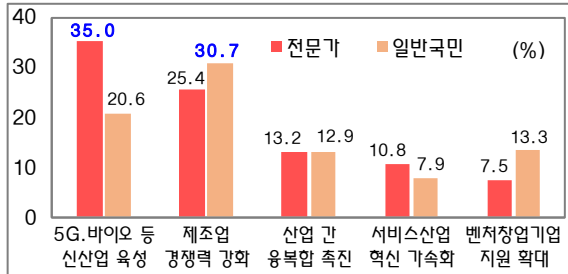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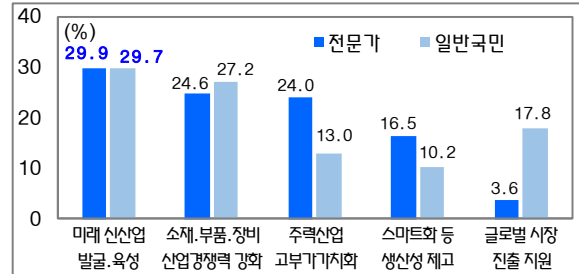
④ **(혁신·체질개선)** 혁신동력 보강을 위한 중점과제로 전문가는 '신산업 육성', 일반국민은 '제조업 경쟁력 강화'를 주문

-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 전문가·일반국민 모두 '미래 신산업 발굴·육성', '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' 등 지목

혁신동력 보강 중점과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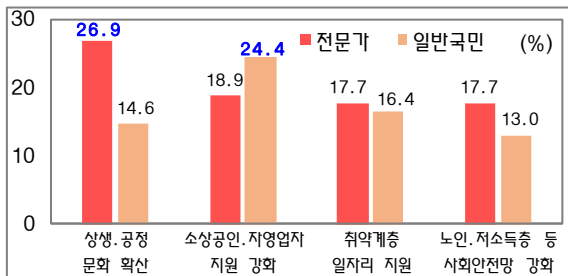
제조업 경쟁력 강화 우선과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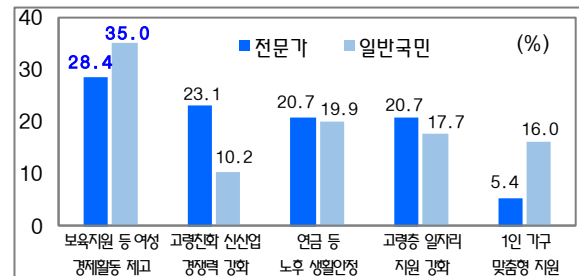
⑤ **(포용·미래대응)** 포용기반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로 전문가는 '상생·공정문화 확산', 일반국민은 '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 강화'로 응답

- 미래대응 차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전문가·일반국민 모두 '보육지원 등 여성 경제활동 제고'를 지목

포용기반 강화 중점과제



인구구조 변화 대응 우선과제



### [참고] '20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오픈형 설문조사 결과

※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제언을 오픈 설문으로 받아 '워드 클라우드' 작성



- ◇ 전문가들은 '투자', '기업', '활성화', '규제', '지원' 등을 많이 언급
- ⇒ 기업 투자 활성화, 규제 혁신 등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이끌 수 있는 정책방향을 주문